

---

#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모형 개발

---

2016. 12.

다산경제연구원

##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해춘(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공동연구자 : 주무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연구원 : 김남현(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김기덕(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과정)

## [목 차]

<b>제1장 연구방법 및 필요성</b> .....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b>제2장 일자리 정책의 개념과 측정 방법</b> .....	<b>3</b>
제1절 일자리 정책의 개념과 분류 .....	3
제2절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범위와 측정 기준 .....	10
1.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의 범위 .....	10
2. 일자리 창출 성과의 측정 단위와 측정 방식 .....	10
<b>제3장 대구시 노동시장 현황과 사업예산 분석</b> .....	<b>13</b>
제1절 노동시장 구조와 특징 .....	13
1. 일자리 공급 구조 .....	13
2. 대구시 일자리 수요구조와 특징 .....	29
3. 소결 .....	34
제2절 정책사업의 예산 구조 .....	36
1.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	36
<b>제4장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모형 개발</b> .....	<b>49</b>
제1절 고용효과 측정 모형 .....	49
1. 모형의 구조 .....	49
2.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의 범위 .....	50
3. 일자리 창출 성과의 구분 .....	51
4. 일자리 수 측정 단위 .....	52
5. 고용형태의 구분 .....	54
제2절 일자리 창출 사업의 유형과 메커니즘 .....	55
1. 사업의 유형 분류 .....	55
2. 일자리 창출 경로 .....	57
제3절 직접고용 효과 계산 .....	67
1. 개념 정리 .....	67

2. 사업별 직접고용효과의 계산 .....	67
3. 직접일자리 수 계산의 종합 .....	106
제4절 간접고용 효과 계산 .....	109
1. 간접고용 효과 측정 원리 .....	109
2. 지역산업연관분석과 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110

## **제5장 대구시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121**

제1절 정책사업의 분류와 예산 .....	121
1. 대구시 사업 예산 .....	121
2. 사업유형별 예산 .....	122
제2절 예산서를 이용한 일자리 계산 .....	136
1. 사업별 일자리 계산 절차 .....	136
2. 일자리 계산 방식 .....	136
제3절 사업부서별, 사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성과 .....	139
1. 실국별 일자리 성과 .....	142
2. 사업유형별 일자리 성과 .....	145
3. 사업구분별 일자리 성과 .....	147

## **제6장 대구시 일자리 평가 로드맵 .....148**

1절 일자리영향평가 운영방식 .....	148
1. 평가 대상과 범위 .....	148
2. 평가항목과 기준 .....	151
제2절 일자리영향평가 운영 주체와 전문위원회 구성 .....	155
1. 일자리 영향 평가 단계와 주체 .....	155
2. 유럽연합 영향 평가 위원회 운영 사례 .....	156
3. (가칭)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	157
제3절 일자리 영향 평가의 정책과제 .....	159
1. 일자리 영향 평가 지침과 모형 수정 작업 .....	159
2. 일자리 영향 평가의 체계화 .....	161
3. 정책과제 .....	161

## <표 목차>

<표 2-1> OECD 노동시장정책 분류 .....	6
<표 2-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분류 .....	7
<표 2-3>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	8
<표 2-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분야 투자 계획 .....	9
<표 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	10
<표 2-6> 측정방식에 따른 고용자의 개념 .....	12
<표 3-1>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구조와 추이 : 2009~2015년 .....	15
<표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2009~2015년 .....	16
<표 3-3>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	17
<표 3-4>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2009~2015년 .....	17
<표 3-5>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	18
<표 3-6>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	18
<표 3-7>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2009~2015년 .....	19
<표 3-8>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2009~2015년 .....	20
<표 3-9> 최종학력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	20
<표 3-10>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	21
<표 3-11>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	22
<표 3-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	23
<표 3-13>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2009~2015년 .....	23
<표 3-14> 대구시 노동시장의 통근유형 및 노동자급률 .....	24
<표 3-15> 유입통근자 주요 5개 지역 현황 .....	25
<표 3-16> 유입통근 인적 특성별 현황 .....	26
<표 3-17> 유출통근자 주요 5개 지역 현황 .....	27
<표 3-18> 유출통근 인적 특성별 현황 .....	28
<표 3-19> 2011~2014년 전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29
<표 3-20> 2013~2014년 전국 사업체 및 종사자수 .....	31
<표 3-21> 산업별 사업체 수 추이 : 2010~2014 .....	32
<표 3-22>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	33
<표 3-23> 정책사업 유형별 예산 .....	36
<표 3-24>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실국별 예산 .....	37
<표 3-25>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국별 예산 .....	38
<표 3-26> 고용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	39
<표 3-27> 고용장려금사업 실국별 예산 .....	39

<표 3-28> 창업지원사업 실국별 예산 .....	40
<표 3-29>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	41
<표 3-30> 일자리인프라사업 실국별 예산 .....	42
<표 3-31>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실국별 예산 .....	43
<표 3-32>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실국별 예산 .....	44
<표 3-33>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실국별 예산 .....	45
<표 3-34> 행사·축제·홍보사업의 실국별 예산 .....	46
<표 3-35> 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	47
<표 3-36> 기타사업의 실국별 예산 .....	48
<표 4-1> 대구시 정책사업의 유형분류 .....	55
<표 4-2> 직접고용효과 정의 및 산출 방법 .....	68
<표 4-3> 직접일자리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71
<표 4-4> 산업별 임금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2015년 말 기준) .....	71
<표 4-5>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74
<표 4-6> 고용서비스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77
<표 4-7> 고용장려금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80
<표 4-8> 창업지원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83
<표 4-9> 실업소득유지지원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84
<표 4-10> 일자리인프라 구축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85
<표 4-11>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88
<표 4-12>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90
<표 4-13> 기업육성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92
<표 4-14> 복지지원서비스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95
<표 4-15> 시설센터운영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97
<표 4-16> 연구용역조사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99
<표 4-17> 행사축제홍보서비스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101
<표 4-18> 국제협력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103
<표 4-19> 기타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	105
<표 4-20> 직접일자리 수 계산식의 종합(참여자 기준) .....	106
<표 4-21> 직접일자리 수 계산식의 종합(FTE 기준) .....	108
<표 4-22> 간접고용효과(Indirect jobs) 정의 및 산출 방법 .....	110
<표 4-23>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의 취업유발계수(명/백만원) .....	113
<표 4-24> 예산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명/백만원) .....	115
<표 4-25> 고용효과 분석용 예산서의 구성 .....	118

<표 5-1> 정책사업 사업유형별 예산 .....	121
<표 5-2>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실국별 예산 .....	123
<표 5-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국별 예산 .....	124
<표 5-4> 고용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	124
<표 5-5> 고용장려금사업 실국별 예산 .....	125
<표 5-6> 창업지원사업 실국별 예산 .....	126
<표 5-7> 일자리인프라사업 실국별 예산 .....	127
<표 5-8>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실국별 예산 .....	128
<표 5-9> 기업지원 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	129
<표 5-10>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	130
<표 5-11>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실국별 예산 .....	131
<표 5-12>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실국별 예산 .....	132
<표 5-13> 행사·축제·홍보사업의 실국별 예산 .....	133
<표 5-14> 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	134
<표 5-15> 산업부문별 연평균임금 .....	137
<표 5-16>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 .....	139
<표 5-17> 실국별 일자리 성과 .....	143
<표 5-18> 실국별 예산과 일자리 수 .....	144
<표 5-19> 사업유형별 일자리 성과 .....	145
<표 5-20> 사업유형별 예산과 일자리 수 .....	146
<표 5-21> 사업구분별 예산과 일자리 수 .....	147
<표 6-1>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의 일반평가 대상(2016년 예산 기준) .....	150
<표 6-2> 일자리 영향의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	152

## [그림 목차]

[그림 2-1] 일자리 창출의 매커니즘 .....	4
[그림 3-1] 전국의 인구현황 .....	13
[그림 3-2] 대구시 남녀의 인구 추이 : 2000~2015년 .....	14
[그림 3-3] 대구시 인구이동 추이 : 2000~2015년 .....	14
[그림 3-4] 대구시 지역 내 총부가가치(기초가격)와 산업별 비중 : 2001~2014 .....	30
[그림 4-1] 고용효과 측정 모형의 구조 .....	50
[그림 4-2]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58
[그림 4-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59
[그림 4-4] 고용서비스(알선)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0
[그림 4-5] 고용 장려금(보조금)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1
[그림 4-6]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2
[그림 4-7] 실업소득유지지원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2
[그림 4-8] 일자리 인프라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3
[그림 4-9] 인프라 구축(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4
[그림 4-10] 시설 센터 운영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4
[그림 4-11] 연구개발 조사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5
[그림 4-12] ODA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66
[그림 4-13] 간접고용효과 발생 과정 .....	109
[그림 4-14] 대구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 .....	111
[그림 5-1] 사업별 일자리 계산 절차 .....	136
[그림 5-2]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 계산 과정 .....	138
[그림 5-3] 사업구분별 일자리 성과 .....	147





# 제1장 연구방법 및 필요성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대구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왔고, 이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 등의 정부사업과 기업유치 등 민간부문의 사업을 통해 9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목표(91,216명)를 달성하였음.
  
-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창출된 직접적, 간접적 일자리를 좀 더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측정하여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실적은 연간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이나 일자리의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재정지출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투입되어 이루어지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 성과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미비로 일자리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 대구시 경제·산업 정책의 고용창출(영향)효과의 평가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 필요

## 제2절 연구의 목적

- 경제·산업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직접 고용 효과, 간접 유발 효과) 평가를 통해 고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일자리 지원 사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 효과(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 유지 효과 등) 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1) 대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성과(직접 고용 효과, 간접 유발 효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2)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 유지 효과,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포괄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시행되는 각종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개발된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작성
  -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시 경제·산업 정책의 일자리 창출 영향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제2장 일자리 정책의 개념과 측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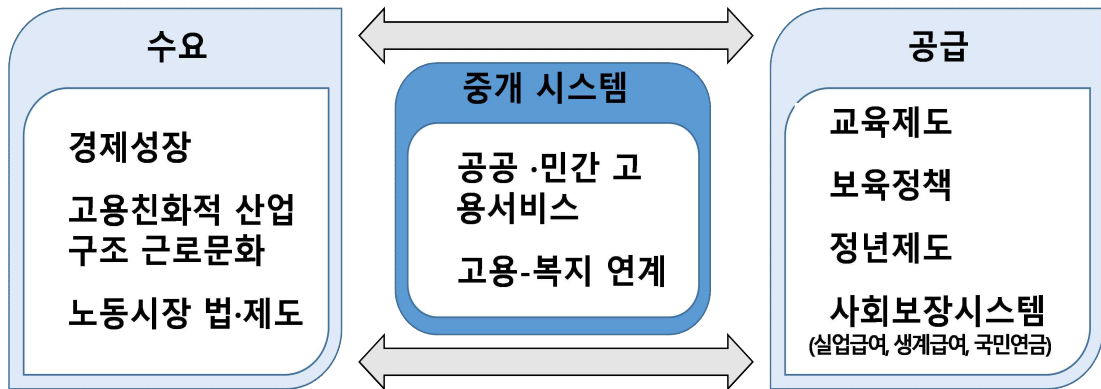
### 제1절 일자리 정책의 개념과 분류

#### 1. 일자리 창출의 개념

##### 가.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산업 및 고용구조,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교육 시스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물이기도 함.
  -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성장의 고용창출력 제고 즉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탄력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됨.
    - 아울러 기업의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 장시간 근로해소, 시간제 일자리 등 근로시간 유연성,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 등이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직업능력 개발훈련, 보육, 기대임금 수준 등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의 연계 등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게 됨.
- 최근에는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동태적 관점에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노동공급 확대 → 임금·물가 안정 → 투자증가 → 성장 및 소비 확대 → 노동수요 증가 → 고용 확대
  -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가구의 2차 노동력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롯
  -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그림 2-1] 일자리 창출의 매커니즘



#### 나. 일자리 정책 분류

- 정부 일자리 정책은 재정투입 여부,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방식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 먼저 재정투입 여부에 따라 재정사업과 비 재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사업 : SOC사업, 정부조달, 정책자금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됨.
  - 비 재정사업 : 법령의 제·개정, 규제완화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고용영향 자체평가는 예산심의를 위한 보조지표 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심층 고용영향평가는 재정사업 이외에도 법 규제·제도 개선 등 비 재정사업도 포괄하고 있음.
- 다음에 노동시장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요 정책: 투자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신규 노동수요 창출 및 기존 노동수요 유지 지원 등이 이에 해당
  - 공급 정책: 미취업자의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 인력양성, 복지 및 교육정책을 통한 노동공급 확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이에 해당됨

□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사업비 지출 또는 법 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 고용을 촉진시키느냐 여부에 의해 정부 직접고용과 민간 고용촉진 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정부 직접고용: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민간 고용촉진(간접고용): 산업·기업 지원 및 발전대책, 대상별 취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시장에서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는 점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정책임.

- 특정산업 육성, 기업별 지원 및 투자

직접투자(펀드조성, 정책자금융자 등), 투자유도(세액공제,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보조금(시설개선, R&D지원, 고용촉진), 해외진출 지원 등

- 규제완화, 현장애로 해소(손톱 밀 가시 제거),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선 취업 후 진학 지원 등

□ OECD(2006)는 정부의 직접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 PLMP)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인데 반해,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보험 지급,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등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의미함.

<표 2-1> OECD 노동시장정책 분류

정책유형	세부대책	주요내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취업알선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구직·구인정보 제공 -취업 지도 및 상담 -취업통계DB 구축
	직업훈련 (Labor market training)	-성인실업자 대상 훈련 -취업중 성인대상 훈련
	청년대책 (Youth measures)	-청년 실업자 또는 취약집단 대책 -청년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Subsidised employment)	-민간부문의 고용 보조금 -창업지원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고용창출
	장애인 대책 (Measures for the disabled)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대상 사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LMP)	실업보조금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조기퇴직자 대책 (Early retirement for labor market reasons)	-노동시장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 보조금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과 분류

###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의 및 분류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개입으로, 특정그룹이 노동시장에서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 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 13조의 2) 상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sup>1)</sup>

1) 고용노동부, '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상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효율화에는 동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 마련 및 조정,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방안, 추진체계 개선 등이 포함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3차례의 효율화가 진행되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분류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0년 7월 1차 효율화 방안)은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① 직접일자리 창출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표 2-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분류

분류	내용
직접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사회공헌형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
고용서비스	○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과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
고용장려금	○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주 : 사업 수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13년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 중앙정부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15조 8,245억원, 2017년(계획 안)에는 17조 5,229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한국의 경우 일자리사업 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최근 둔화추세이나 OECD 평균(2010년 12.5%)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2012) 41.5% → (2016) 25.9% → (2017) 23.2%
- 이와 같이 높은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은 사업 내에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복지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2-3>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안)	비중('17)
직접일자리	25,069	29,234	28,448	24,634	26,257	26,242	15.0
직업훈련	13,250	13,933	15,817	17,899	20,992	23,565	13.4
고용서비스	4,110	5,084	5,906	6,102	6,821	8,287	4.7
고용장려금	13,615	17,340	20,845	25,961	28,351	32,455	18.5
창업지원	4,394	5,062	5,570	18,339	18,806	21,964	12.5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8,612	41,566	43,500	46,832	57,019	62,716	35.8
합계	99,050	112,220	120,087	139,766	158,245	175,229	100.0

□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에 이어 노동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여타 부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총지출 대비 고용부문의 비중은 4.7% 수준 지속

<표 2-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분야 투자 계획

(단위: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20 연평균(%)
총지출	386.4	400.7	414.3	428.4	443.0	3.5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고용)	17.3	18.8	19.3	19.9	21.0	4.9
2. 교육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환경	6.9	6.9	6.8	6.7	6.7	-0.6
5. R&D	19.1	19.4	19.7	19.9	20.2	1.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7. SOC	23.7	21.8	20.3	19.3	18.5	-6.0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10. 외교·통일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총지출 대비 고용 비중(%)	4.5	4.7	4.7	4.7	4.7	-

자료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유형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sup>2)</sup>.

○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창출은 단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접적 일자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 제고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은 단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김용성(2014)

<표 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사업유형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 효과
고용서비스	△	○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	○
고용장려금	○	△
직접적 일자리창출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주 : 1) ○ : 고용률에 긍정적 효과, × : 고용률에 부정적 효과, △ :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2) 분석 자료의 기간은 OECD 25개 국가 평균 20년(1985~2008)으로 총 489개 관측치로 구성, 중장기 효과분석의 표본수는 48개임.  
 3) 각 변수는 실업자 1인당 해당변수 지출액/1인당 GDP로 정의  
 자료: 김용성(2014)

## 제2절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범위와 측정 기준

### 1.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의 범위

- 본 연구에서 포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대상 범위를 포함하고, 대구시의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대구시 재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 노동시장 정책 사업과 경제·산업정책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 대구시 비재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제도의 변화 (세제 혹은 금융상의 지원, 신용보증 및 규제완화 등) 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함하고 있음.

### 2. 일자리 창출 성과의 측정 단위와 측정 방식

- 일자리 창출 성과 측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15)의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방식을 원용하나 대구시의 특성을 감안함.

□ 일자리 창출 성과의 범위는 고용의 생성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신규고용과 고용유지를 모두 포괄함.<sup>3)</sup>

○ 일자리 창출 성과 = 고용 유지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일자리 창출 성과의 직간접성 측면에서는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 및 유발고용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총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 간접고용효과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자 수 + 사업 성과 직접고용자 수

간접고용효과 = 사업비 지출 간접고용자 수

유발고용효과 = 임금소득 지출 간접고용자 수

□ 직간접고용효과의 측정 방식

○ 가능한 고용 인원 수를 FTE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총액에서 업종별 전업근로자 인건비 총액으로 나누는 방식 채택

○ 업종별 상용 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전업환산기준(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 개념을 사용하나, 자료 구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참여자 기준(Head-counting)을 적용함

□ 고용의 정량적 측정단위는 다양한 편

○ 고용의 정량적 측정단위에는 전업환산(Full Time Equivalence)기준 취업자 수, 연인원(Man-year) 개념 취업자 수 및 참여자 기준(Head-Counting) 취업자 수 등

- 전업환산기준이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작성(2008년 SNA 기준) 시 사용하는 단위로서 part-time이 아닌 full-time(전업)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로서 전체 취업자의 총 근로시간을 전업직무의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근로기간(일수)뿐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감안한 단위임.

\* 전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와 피용자에 대하여 총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것임

- Man-year(연인원)이란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 작성(1993년 SNA 기준)시 사용한 단위로 '한 사람이 일년 동안 일하는 작업량' 단위로 정의. 조사 대상은 사업체로

3)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15),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연간 근로기간(일수)를 감안하여 측정함. 이 기준에 의하면 전업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한 노동량으로 취급됨.

- Head-counting(참여자) 이란 한시적 노동시간의 근로자와 전업 근로시간 근로자를 동일한 인원으로 취급하는 것임. 이는 현실적으로 임시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기준 취업자 개념과 유사함.

□ 대구시에서는 주로 참여자 기준으로 고용량을 측정하고 있음. 연구에서는 가능한 FTE 개념을 사용되고 있으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참여자 기준(Head counting)도 적용함.

<표 2-6> 측정방식에 따른 고용자의 개념

구분	정의
전업환산 (Full-time equival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식 인구통계인 경제활동인구를 기초로 작성한 노동량(2008 SNA 기준 산업연관표 고용표 통계)</li> <li>-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노동량으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모두 감안하여 측정된 노동량</li> <li>-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동일 산업의 전업근로자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계</li> </ul>
연인원 (man-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된 실제 노동량을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노동량(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취업자 개념)</li> <li>- 매월 1일씩 1년 동안 일한 취업자는 고용표에서 1/26 명(1개월에 26일 근무로 가정)으로 산정</li> <li>- 국내 재화 서비스 활동에 종사한 사업은 국적 불문하고 취업자로 산정</li> <li>- 사업체 대상 조사이므로 1명 근로자가 복수 직업을 가지고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2명으로 계산</li> <li>- 전업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임시(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한 노동량으로 취급되어 노동량이 과다 계측되는 문제 존재</li> </ul>
취업자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 구 기준 취업자 (가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인구의 취업률 및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 경제활동인구 개념에서 취업자 수 산정</li> <li>- 경제활동인구 조사 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5일이 속한 1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명의 취업자로 산정</li> <li>- 이 기준에 의하면 매월 1일씩 1년 동안 일한 사람의 경우 1명의 취업자로 산정</li> <li>- 가계조사이므로 복수 직업을 가진 경우 1명으로 간주</li> <li>- 무급종사자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1시간 기준 무급종사자는 2015년 1월부터 제외. 참고자료로 발표)</li> </ul>

# 제3장 대구시 노동시장 현황과 사업예산 분석

## 제1절 노동시장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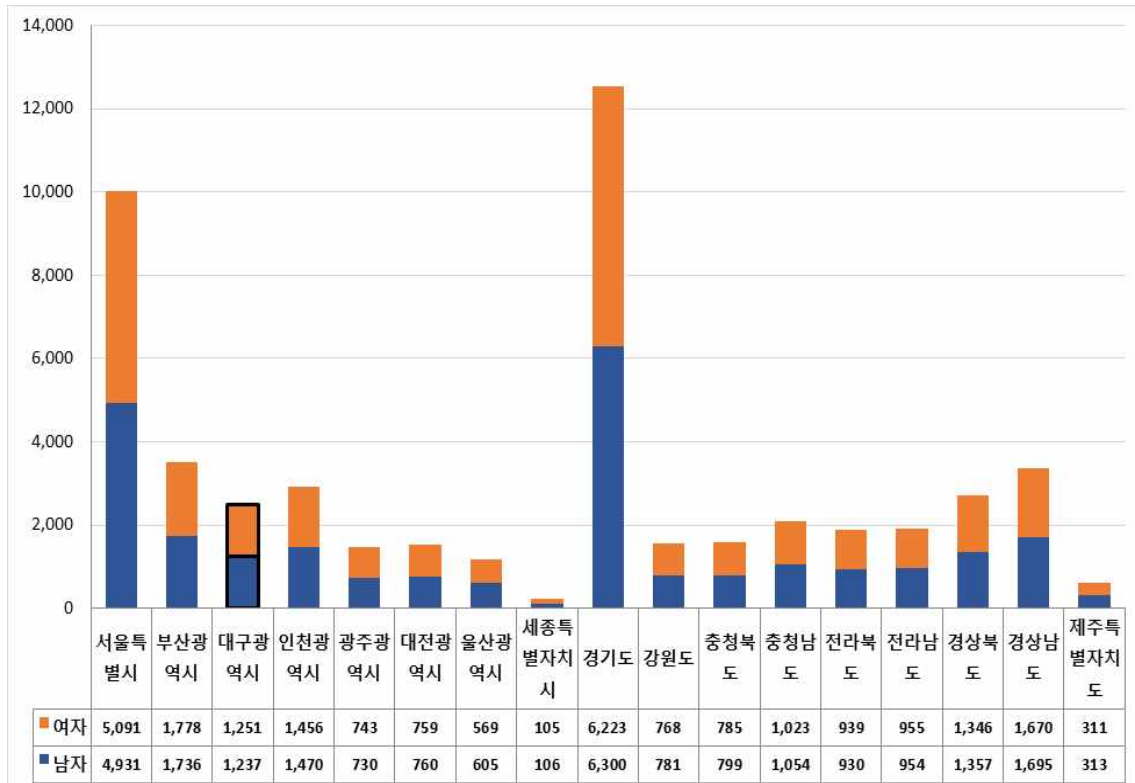
### 1. 일자리 공급 구조

#### 가. 주민등록인구현황

- 대구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 기준 약 2,488천 명으로 전국의 약 4.83%에 해당함.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준임.

[그림 3-1] 전국의 인구현황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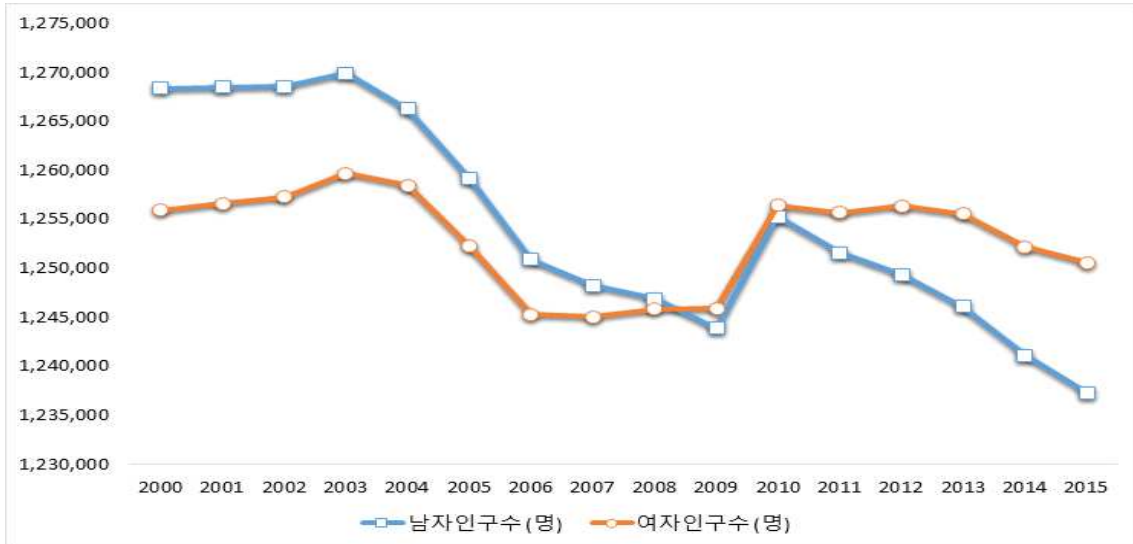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

- 대구시의 인구는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앞서기 시작해, 2015년 기준 남성은 1,237천명, 여성은 1,251천명으로 여성이 약 1만4천명 정도 더 많으며, 전국 대비 비율로도 여자가 4.85%로 남자의 4.80%보다 많은 비율을 보임.

[그림 3-2] 대구시 남녀의 인구 추이 : 2000~2015년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

- 대구시의 인구감소의 요인 중 인구이동에 의한 요인도 있을것임.
- 최근 15년 동안 전입인구보다는 전출인구가 많아 인구 유출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3-3] 대구시 인구이동 추이 : 2000~2015년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 나.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와 동향

- 대구시의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에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취업자 수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실업자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15년 들어 다시 감소하였음.
- 무엇보다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1>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구조와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수 (천명)	생산가능인구	2,039.3	2,052.4	2,058.8	2,072.2	2,074.2	2,082.2	2,086.3
	경제활동인구	1,237.5	1,212.6	1,202.5	1,241.9	1,238.0	1,260.5	1,273.6
	취업자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실업자	52.7	46.7	38.2	35.4	38.5	42.2	38.4
	비경제활동인구	801.9	839.8	856.3	830.3	836.3	821.7	812.7
전년대비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0.6	0.3	0.7	0.1	0.4	0.2
	경제활동인구		-2.0	-0.8	3.3	-0.3	1.8	1.0
	취업자		-1.6	-0.1	3.6	-0.6	1.6	1.4
	실업자		-11.5	-18.2	-7.1	8.5	9.7	-8.9
	비경제활동인구		4.7	2.0	-3.0	0.7	-1.7	-1.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생산가능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과 중년층(30~49세)의 인구는 감소, 장년층(50~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청년층은 1.0%, 중년층은 2.3% 감소한 반면, 장년층은 2.4%, 고령층은 4.6%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표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연령계층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수 (천명)	전체	2,039.3	2,052.4	2,058.8	2,072.2	2,074.2	2,082.2	2,086.3
	15-29세	491.7	486.3	473.4	476.8	471.4	465.5	460.9
	30-49세	849.7	839.8	827.3	806.0	786.2	772.9	754.9
	50-64세	450.0	469.2	488.8	508.8	526.0	539.1	551.8
	65세 이상	248.0	257.2	269.3	280.6	290.6	304.7	318.7
전년대 비 증가율 (%)	전체		0.6	0.3	0.7	0.1	0.4	0.2
	15-29세		-1.1	-2.6	0.7	-1.1	-1.2	-1.0
	30-49세		-1.2	-1.5	-2.6	-2.5	-1.7	-2.3
	50-64세		4.3	4.2	4.1	3.4	2.5	2.4
	65세 이상		3.7	4.7	4.2	3.6	4.8	4.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다.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대구시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2011년, 그리고 2013년에 잠시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273.6천명으로 전년대비 13.1천명(1.0%)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이 735.9천명(57.8%), 여성이 537.7천명(42.2%)으로 남성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남성은 2.9%(20.6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1.4%(-7.5천명) 감소해, 남성 위주로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연령별로는 중년층만이 전년대비 2.0%(-12.2천명) 감소했고, 그 밖에 연령층은 증가함.

- 생산가능인구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중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대구시의 노동시장 환경이 중년층에게 좋지 않음을 시사함.

- 장년층과 고령층은 인구증가의 효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보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크다는 측면에서 고연령층의 생계형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3>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계	1,237.5	1,212.6	1,202.5	1,241.9	1,238.0	1,260.5	1,273.6	100	13.1	1.0
남자	707.2	692.7	690.0	704.3	702.7	715.3	735.9	57.8	20.6	2.9
여자	530.3	519.9	512.5	537.6	535.3	545.3	537.7	42.2	-7.5	-1.4
15-29세	208.8	197.9	190.4	182.6	184.2	190.1	198.2	15.6	8.1	4.3
30-49세	669.3	661.4	623.8	628.6	608.7	612.0	599.8	47.1	-12.2	-2.0
50-64세	300.1	293.8	318.5	358.2	370.0	381.5	393.9	30.9	12.3	3.2
65세 이상	59.3	59.6	69.8	72.5	75.1	76.9	81.7	6.4	4.8	6.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5년 만에 60%대를 회복해, 2015년 기준 61.0%로 전년대비 0.5%p 증가함.

- 남성이 73.0%, 여성이 49.9%로 남성이 월등히 높으며, 전년대비 또한 남성은 1.9%p 증가한 반면, 여성은 0.8%p 감소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이 2.2%p로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4>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2009~2015년

(단위: %p,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증감	증감률
합계	60.7	59.1	58.4	59.9	59.7	60.5	61.0	0.5	0.8
남자	71.5	69.6	69.2	70.3	70.2	71.1	73.0	1.9	2.6
여자	50.5	49.2	48.3	50.2	49.9	50.6	49.9	-0.8	-1.5
15-29세	42.5	40.7	40.2	38.3	39.1	40.8	43.0	2.2	5.3
30-49세	78.8	78.8	75.4	78.0	77.4	79.2	79.5	0.3	0.3
50-64세	66.7	62.6	65.2	70.4	70.3	70.8	71.4	0.6	0.9
65세 이상	23.9	23.2	25.9	25.8	25.8	25.2	25.6	0.4	1.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와 동향

- 비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전년대비 9.0천명 감소한 812.7천명으로,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이 전체 33.5%, 여성이 66.5%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이며, 전년대비 남성은 18.0천명(-6.2%) 감소한 반면, 여성은 9.0천명(1.7%) 증가함.
- 연령별로는 청년과 중년층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장년층과 고령층은 증가함.

<표 3-5>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계	801.9	839.8	856.3	830.3	836.3	821.7	812.7	100	-9.0	-1.1
남자	281.3	302.8	307.4	296.9	298.3	290.2	272.2	33.5	-18.0	-6.2
여자	520.6	537.1	548.9	533.4	538.0	531.5	540.5	66.5	9.0	1.7
15-29세	282.9	288.4	283.0	294.2	287.2	275.5	262.7	32.3	-12.7	-4.6
30-49세	180.4	178.4	203.5	177.4	177.5	160.9	155.1	19.1	-5.8	-3.6
50-64세	149.9	175.4	170.3	150.6	156.0	157.5	157.9	19.4	0.3	0.2
65세 이상	188.7	197.6	199.5	208.2	215.6	227.8	237.0	29.2	9.2	4.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 육아 및 가사가 4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학 및 진학준비가 26.3%, 쉬었음이 14.3%, 연로 및 심신장애가 13.0%, 그리고 취업준비가 2.7%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7.7천명(17.9%)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재학 및 진학준비는 14.8천명(-6.5%)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표 3-6>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2009~2015년

(단위: %p,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합계	801.9	839.8	856.3	830.3	836.3	821.5	812.7	100	-8.8	-1.1
육아 및 가사	353.8	374.6	388.8	366.4	362.6	348.6	348.9	42.9	0.2	0.1
재학 및 진학준비	236.8	239.3	236.0	245.6	238.7	228.4	213.7	26.3	-14.8	-6.5
취업준비	25.7	31.2	29.3	29.2	32.0	30.6	21.7	2.7	-8.9	-29.1
연로 및 심신장애	90.1	88.7	80.4	86.7	106.1	108.0	105.5	13.0	-2.5	-2.3
쉬었음	84.2	93.6	114.5	96.2	91.0	98.9	116.5	14.3	17.7	17.9
기타	11.3	12.5	7.2	6.3	5.9	7.0	6.4	0.8	-0.6	-8.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마. 취업자의 구조와 동향

- 대구시의 취업자 수는 2015년 기준 전체 1,235.2천명으로 이중 남성이 57.9%, 여성이 42.1%의 분포를 보임.
  - 남성은 전년 대비 24.6천명 증가했지만, 여성은 7.7천명 감소하였음.
- 고용률은 59.2%(전년대비 0.7%p 증가)로 남성은 70.9%(전년대비 2.3%p 증가), 여성은 48.3%(전년대비 0.8%p 감소)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비교 기간 중 처음으로 70%를 넘어서면서 여성 고용률과의 격차가 22.6%p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 이상 벌어짐.

<표 3-7>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p,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취업자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남자	677.9	662.7	661.0	682.0	681.8	690.4	715.0	57.9	24.6	3.6
여자	506.9	503.3	503.3	524.4	517.7	528.0	520.3	42.1	-7.7	-1.5
고용률	58.1	56.8	56.6	58.2	57.8	58.5	59.2		0.7	1.2
남자	68.6	66.6	66.3	68.1	68.1	68.7	70.9		2.3	3.3
여자	48.2	47.6	47.4	49.0	48.2	49.0	48.3		-0.8	-1.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청년층이 12.3천명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고령층이 전년대비 8.3%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중년층만 전년대비 8.4천명 (-1.4%) 감소한 특징을 보임.
- 고용률 또한 청년층이 전년대비 3.0%p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장년층은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이 더 큰 이유로 고용률이 0.4%p 감소함.

<표 3-8>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p,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취업자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15-29세	189.2	182.5	180.5	169.4	167.8	170.6	182.9	14.8	12.3	7.2
30-49세	642.5	639.4	604.0	614.0	593.1	597.2	588.8	47.7	-8.4	-1.4
50-64세	294.7	286.7	311.4	351.6	365.3	375.9	382.7	31.0	6.8	1.8
65세 이상	58.4	57.4	68.4	71.5	73.2	74.6	80.8	6.5	6.2	8.3
고용률	58.1	56.8	56.6	58.2	57.8	58.5	59.2		0.7	1.2
15-29세	38.5	37.5	38.1	35.5	35.6	36.6	39.7		3.0	8.3
30-49세	75.6	76.1	73.0	76.2	75.4	77.3	78.0		0.7	0.9
50-64세	65.5	61.1	63.7	69.1	69.4	69.7	69.4		-0.4	-0.5
65세 이상	23.5	22.3	25.4	25.5	25.2	24.5	25.4		0.9	3.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학력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고졸이 35.3%고 가장 많고, 대학원졸이 4.8%로 가장 적음.
- 전년대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고졸이하의 저학력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졸 취업자는 전년대비 36.9천명(11.8%)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4.0천명(-5.2%)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표 3-9> 최종학력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초졸이하	111.3	110.8	108.4	106.9	98.0	88.5	80.3	6.5	-8.2	-9.2
중졸	125.5	125.7	116.9	123.1	125.2	108.0	105.7	8.6	-2.3	-2.1
고졸	458.3	436.2	427.5	435.2	435.7	459.6	435.6	35.3	-24.0	-5.2
전문대졸	170.1	184.7	195.6	208.6	196.5	192.3	204.1	16.5	11.8	6.1
대졸	283.1	273.7	276.3	281.5	292.0	313.0	349.8	28.3	36.9	11.8
대학원졸	36.4	34.9	39.6	51.1	52.1	57.0	59.7	4.8	2.7	4.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산업별로 보면, 취업자 비중이 37.4%로 가장 높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41.4천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함.
-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비중 23.3%)은 전년대비 40.3천명 감소로 가장 많은 수가 감소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에서 전년대비 29.3천명 증가하고, 그 밖에 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농림어업	27.3	28.8	36.1	30.7	42.3	28.4	23.0	1.9	-5.5	-19.3
광공업	225.2	244.2	239.3	262.0	246.3	238.4	233.6	18.9	-4.9	-2.0
건설업	101.1	78.6	71.8	81.9	91.0	92.5	89.4	7.2	-3.1	-3.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16.6	308.9	306.3	319.1	306.8	327.9	287.5	23.3	-40.3	-12.3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407.3	393.6	400.1	399.1	400.6	420.8	462.2	37.4	41.4	9.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07.4	111.9	110.7	113.6	112.4	110.4	139.6	11.3	29.3	26.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직업별로 취업자 수를 분류해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9.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1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5.0%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은 사무종사자로 47.1천명 증가함.
-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9.9천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8천명, 관리자가 0.8천명 순으로 증가함.
- 반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전년대비 13.1천명 감소함.
-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11.0천명, 판매종사자 9.7천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5천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4.4천명 순으로 감소함.

<표 3-11>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관리자	14.7	14.9	14.1	23.7	18.8	24.1	24.9	2.0	0.8	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7.2	207.4	213.6	221.9	227.5	227.1	237.0	19.2	9.9	4.4
사무 종사자	168.1	178.3	166.7	184.6	170.2	176.0	223.1	18.1	47.1	26.7
서비스 종사자	131.9	129.7	130.7	136.9	139.2	129.8	118.7	9.6	-11.0	-8.5
판매 종사자	173.6	163.3	163.8	167.9	156.1	177.3	167.6	13.6	-9.7	-5.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5.8	27.5	35.5	26.4	36.1	26.3	22.0	1.8	-4.4	-1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3.6	119.1	98.5	105.7	126.4	121.9	114.4	9.3	-7.5	-6.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2.5	169.6	173.2	166.7	170.6	179.9	184.7	15.0	4.8	2.6
단순노무 종사자	157.4	156.3	168.2	172.6	154.6	156.0	142.9	11.6	-13.1	-8.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종사상 지위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근로자<sup>4)</sup>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비 임금근로자<sup>5)</sup>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세분화 할 수 있음.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74.6%, 비 임금근로자가 25.4%이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비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음.
  -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27.5천명 증가하였고, 그중 상용근로자 45.3천명 증가, 임시근로자는 24.6천명 감소, 일용근로자는 6.8천명 증가함.
  - 비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무급가족 종사자 4.7천명 등 모두 감소해 10.6천명 감소함.

4)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현물 등의 형태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임.

5) 비 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를 말함

<표 3-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184.8	1,166.0	1,164.4	1,206.5	1,199.5	1,218.4	1,235.2	100	16.9	1.4
임금근로자	829.3	829.7	835.2	859.7	858.5	894.0	921.5	74.6	27.5	3.1
상용근로자	470.6	491.1	509.6	504.2	510.6	546.5	591.7	47.9	45.3	8.3
임시근로자	252.5	245.1	254.8	271.6	261.4	271.4	246.8	20.0	-24.6	-9.1
일용근로자	106.2	93.5	70.8	83.9	86.5	76.1	82.9	6.7	6.8	8.9
비 임금근로자	355.5	336.3	329.1	346.8	341.0	324.3	313.7	25.4	-10.6	-3.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5.7	83.6	79.8	96.7	91.5	81.3	78.2	6.3	-3.2	-3.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4.6	193.4	194.1	188.6	191.4	188.3	185.6	15.0	-2.7	-1.4
무급가족종사자	65.1	59.2	55.3	61.5	58.0	54.8	50.0	4.1	-4.7	-8.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바. 실업자와 실업률

○ 실업자 수는 2015년 기준 38.4천명으로 전년대비 3.8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대비 0.3%p 감소함.

- 실업률이 3% 초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임.

<표 3-13>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2009~2015년

(단위: 천명, %, %p)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증감	증감률
실업자 수	52.7	46.7	38.2	35.4	38.5	42.2	38.4	-3.8	-9.8
실업률	4.3	3.8	3.2	2.9	3.1	3.3	3.0	-0.3	-1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 자료

주) 원 자료는 2009년, 2010~2012년 3/4분기, 2013~2015년 하반기 자료임.



### 사. 노동시장의 통근유형

- 대구시의 노동시장 통근유형을 통해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에 대한 자급률과 직주율 등을 알 수 있음.
  - 역내통근(R)은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대구시에 있는 사업체로 통근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1,101,035명이 여기에 해당함.
  - 유입통근(I)은 대구시 이외의 지역에 살면서 대구시의 사업체로 통근하는 형태를 말하며, 48,575명이 있음. 반대로 대구시에 거주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로 통근하는 경우를 유출통근(O)이라하며, 134,188명이 있음.
  - 노동수요 자급률은 대구시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노동수요를 대구시 거주자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알아보는 지표로 사업체 소재지 기준 취업자(J) 중 역내통근 취업자(R)의 백분비로 계산하며, 대구시의 노동수요 자급률은 95.8%임.
  - 노동공급 자급률은 대구시 거주자에 대한 노동공급을 대구시의 사업체가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E) 중 역내통근 취업자(R)의 백분비로 계산하며, 대구시의 노동공급 자급률은 89.1%임.
  - 직주율은 사업체 소재지 기준 취업자 수엔 대한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의 백분비를 의미하며, 직주율은 107.4%임.
  - 위의 결과를 통해 대구시는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구시 자체의 노동수요 창출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음.

<표 3-14> 대구시 노동시장의 통근유형 및 노동자급률

(단위: 명, %)

역내통근(R)	1,101,035	유입통근(I)	48,575	사업체 소재지기준(J=R+I)	1,149,610
		유출통근(O)	134,188	거주지 기준 (E=R+O)	1,235,223
노동수요 자급률	95.8	노동공급 자급률	89.1	직주율(E/J)	107.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년 하반기, 원 자료

(1) 유입통근

- 2015년 유입통근은 전년대비 2,983명(6.5%) 증가하였으며, 경산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 유입통근 지역 중 63.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경산시를 제외하면 칠곡, 고령, 구미 지역이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3-15> 유입통근자 주요 5개 지역 현황

(단위: 명, %)

유입 순위	지역	2014		유입 순위	지역	2015		2014~2015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합계	45,592	100		합계	48,575	100		
1	경산시	29,260	64.2	1	경산시	30,704	63.2	2,983	6.5
2	칠곡군	3,125	6.9	2	구미시	3,696	7.6		
3	고령군	2,993	6.6	3	칠곡군	2,896	6.0		
4	구미시	2,590	5.7	4	고령군	2,486	5.1		
5	영천시	1,386	3.0	5	영천시	1,425	2.9		
	기타	6,238	13.7		기타	7,370	15.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2015년 하반기, 원 자료

- 연령별로는 중년층(30~49세)이 남자는 17,379명, 여자는 7,835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장년층(50~64세)이 2,884명(26.2%)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학력별로는 남자는 대졸이상, 여자는 고졸이하가 각각 12,076명, 8,819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모든 학력층에서 증가했으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이 1,699명(9.7%)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유통서비스업이 남자 7,728명, 여자 8,009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전기·운수·통신·금융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증가한 반면, 사업·개인·유통 서비스업은 감소함.
- 직업별로는 남자는 사무종사자 7,145명, 여자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152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사무종사자 2,423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종사자는 2,079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3-16> 유입통근 인적 특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4~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증감	증감률
연령별	15-29세	3,660	5,274	8,934	3,233	5,631	8,864	-70	-0.8
	30-49세	17,717	7,247	24,964	17,379	7,835	25,214	250	1.0
	50-64세	7,083	3,907	10,990	8,190	5,684	13,874	2,884	26.2
	65세 이상	391	313	704	461	162	623	-81	-11.5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12,285	6,982	19,267	11,124	8,819	19,943	676	3.5
	전문대졸	5,165	3,583	8,748	6,062	3,291	9,353	605	6.9
	대졸 이상	11,402	6,176	17,578	12,076	7,201	19,277	1,699	9.7
산업별	농림어업	228	40	268	25	16	41	-227	-84.7
	광공업	5,064	1,016	6,080	5,580	953	6,533	453	7.5
	건설업	4,028	93	4,121	3,359	563	3,922	-199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65	4,550	10,315	5,900	7,294	13,194	2,879	2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8,567	10,033	18,600	7,728	8,009	15,737	-2,863	-15.4
	전기·운수·통신·금융	5,200	1,007	6,207	6,671	2,476	9,147	2,940	47.4
직업별	관리자	673	0	673	933	0	933	260	3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01	5,502	10,603	5,116	5,152	10,268	-335	-3.2
	사무 종사자	5,356	3,314	8,670	7,145	3,948	11,093	2,423	27.9
	서비스 종사자	2,391	3,832	6,223	462	3,682	4,144	-2,079	-33.4
	판매 종사자	3,517	2,314	5,831	3,584	4,056	7,640	1,809	3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4	40	164	82	16	98	-66	-4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464	391	5,855	4,490	513	5,003	-852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63	240	4,403	5,361	224	5,585	1,182	26.8
	단순노무 종사자	2,062	1,107	3,169	2,089	1,721	3,810	641	20.2
전체	28,851	16,740	45,591	29,262	19,312	48,574	2,983	6.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2015년 하반기, 원 자료

(2) 유출통근

- 2015년 유출통근은 전년대비 7,956명(6.3%) 증가하였으며, 경산시로의 유출이 2015년 기준 전체 유입통근 지역 중 26.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경산시를 제외하면 칠곡, 구미, 성주, 고령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3-17> 유출통근자 주요 5개 지역 현황

(단위: 명, %)

유출 순위	지역	2014		유출 순위	지역	2015		2014~2015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합계	126,232	100		합계	134,188	100	7,956	6.3
1	경산시	34,360	27.2	1	경산시	35,862	26.7		
2	칠곡군	24,093	19.1	2	칠곡군	24,066	17.9		
3	구미시	15,655	12.4	3	구미시	15,906	11.9		
4	성주군	10,717	8.5	4	성주군	10,523	7.8		
5	고령군	10,272	8.1	5	고령군	9,240	6.9		
	기타	31,135	24.7		기타	38,592	28.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2015년 하반기, 원 자료

- 연령별로는 중년층(30~49세)이 남자는 50,237명, 여자는 18,916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청년층(15~29세)이 4,827명(41.0%)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이 남, 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전년대비 대졸 이상이 7,98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전문대졸은 1,652명 감소함.
- 산업별로는 남자는 광공업이 35,373명, 여자는 사업·개인·유통서비스업이 16,375명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사업·개인·유통서비스업이 7,829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3,196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함.
- 직업별로는 남자는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22,254명으로 가장 많으며, 여자는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음.
  - 전년대비 사무종사자 5,81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종사자는 2,27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3-18> 유출통근 인적 특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4~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증감	증감률
연령별	15-29세	6,854	4,931	11,785	10,424	6,188	16,612	4,827	41.0
	30-49세	50,524	16,069	66,593	50,237	18,916	69,153	2,560	3.8
	50-64세	31,799	10,313	42,112	32,050	9,403	41,453	-659	-1.6
	65세 이상	4,691	1,052	5,743	5,926	1,046	6,972	1,229	21.4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40,202	16,799	57,001	41,438	17,183	58,621	1,620	2.8
	전문대졸	16,228	4,415	20,643	14,711	4,280	18,991	-1,652	-8.0
	대졸 이상	37,438	11,150	48,588	42,487	14,089	56,576	7,988	16.4
산업별	농림어업	7,781	2,469	10,250	5,912	2,621	8,533	-1,717	-16.8
	광공업	32,253	9,154	41,407	35,373	7,510	42,883	1,476	3.6
	건설업	12,661	708	13,369	12,498	977	13,475	106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624	5,629	18,253	9,745	5,312	15,057	-3,196	-17.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1,303	11,932	33,235	24,689	16,375	41,064	7,829	23.6
	전기·운수·통신·금융	7,247	2,474	9,721	10,420	2,756	13,176	3,455	35.5
직업별	관리자	3,965	182	4,147	4,301	778	5,079	932	2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193	6,238	26,431	19,075	9,890	28,965	2,534	9.6
	사무 종사자	13,383	10,376	23,759	19,683	9,891	29,574	5,815	24.5
	서비스 종사자	2,952	3,435	6,387	1,868	2,248	4,116	-2,271	-35.6
	판매 종사자	6,767	1,953	8,720	6,167	2,696	8,863	143	1.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363	1,961	8,324	5,360	2,281	7,641	-683	-8.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615	563	13,178	13,462	179	13,641	463	3.5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980	3,763	24,743	22,254	3,934	26,188	1,445	5.8
	단순노무 종사자	6,650	3,892	10,542	6,467	3,656	10,123	-419	-4.0
전체	93,868	32,363	126,231	98,637	35,553	134,190	7,959	6.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2015년 하반기, 원 자료

## 2. 대구시 일자리 수요구조와 특징

### 가. 지역내 총생산

- 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sup>6)</sup>은 2014년 기준 46,523,647백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로 중위권에 속하며 전국대비 3.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9> 2011~2014년 전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단위 : 백만 원, %)

시도	2011		2012		2013		2014	
	총생산	비율	총생산	비율	총생산	비율	총생산	비율
전국	1,330,888,239	100	1,377,040,530	100	1,430,254,931	100	1,485,504,665	100
서울특별시	303,812,518	22.8	313,478,525	22.8	318,607,001	22.3	328,660,905	22.1
부산광역시	66,647,601	5.0	67,999,015	4.9	70,337,900	4.9	73,673,589	5.0
대구광역시	41,447,963	3.1	43,020,970	3.1	44,753,515	3.1	46,523,673	3.1
인천광역시	61,854,353	4.6	62,207,877	4.5	64,654,180	4.5	69,500,613	4.7
광주광역시	27,788,989	2.1	28,913,806	2.1	29,763,198	2.1	31,294,674	2.1
대전광역시	29,683,859	2.2	30,884,467	2.2	31,455,721	2.2	32,798,844	2.2
울산광역시	68,747,862	5.2	70,783,409	5.1	68,347,664	4.8	67,018,137	4.5
경기도	276,154,982	20.7	288,146,769	20.9	313,670,611	21.9	329,558,989	22.2
강원도	32,438,497	2.4	33,853,473	2.5	35,357,498	2.5	37,170,302	2.5
충청북도	42,488,940	3.2	43,627,950	3.2	47,401,834	3.3	49,790,670	3.4
충청남도	91,816,385	6.9	95,307,922	6.9	99,154,337	6.9	105,002,395	7.1
전라북도	39,960,114	3.0	40,431,844	2.9	42,512,689	3.0	44,242,680	3.0
전라남도	62,689,437	4.7	64,642,209	4.7	62,289,471	4.4	62,456,718	4.2
경상북도	82,276,360	6.2	85,401,035	6.2	89,132,373	6.2	92,697,180	6.2
경상남도	91,233,284	6.9	95,634,505	6.9	99,619,414	7.0	101,028,435	6.8
제주특별자치도	11,847,095	0.9	12,706,754	0.9	13,197,525	0.9	14,086,861	0.9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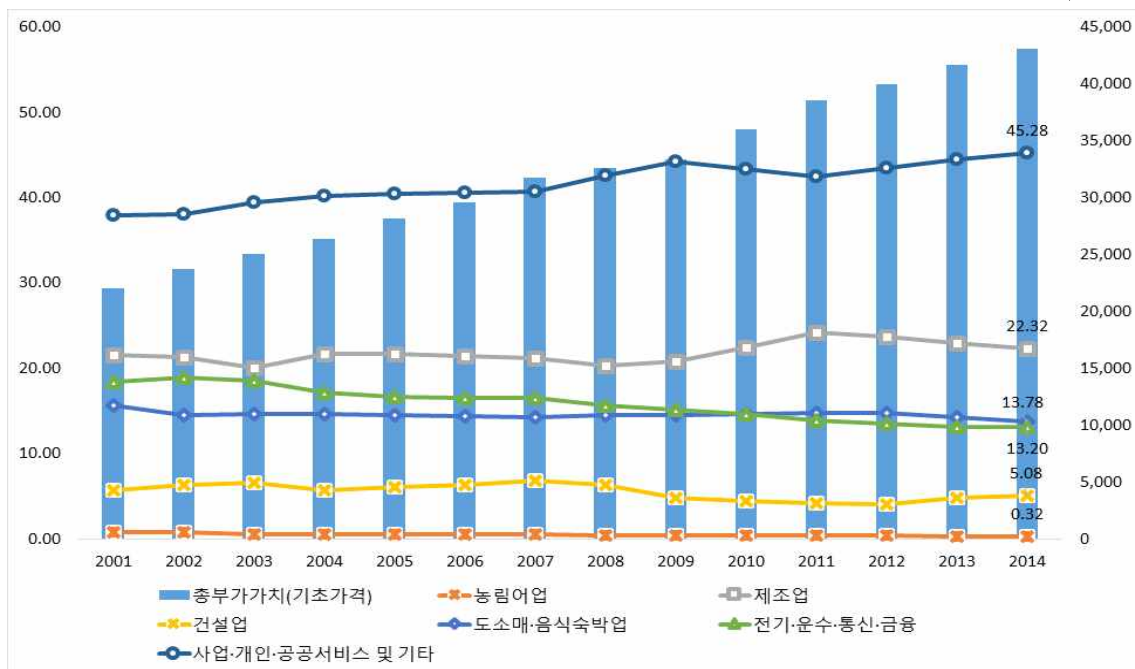
주) 당해 년 가격 기준

6) 지역내총생산은 총 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가 포함된 금액임.

- 대구시의 총부가가치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으로 전 산업의 성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음.
- 단순 추세로 확인 했을 때,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매년 각각 0.54%와 0.18%씩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 (0.47%), 건설업 (0.15%), 도소매·음식숙박업 (0.05%), 농림어업 (0.03%)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3-4] 대구시 지역 내 총부가가치(기초가격)와 산업별 비중 : 2001~2014

(단위 : %, 억 원)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각 년도

주) 당해 년 가격 기준

### 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전국의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3,812,820개로 전년대비 3.7%(135,944개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19,899,786명으로 전년대비 3.8%(726,312명) 증가함.
- 대구시의 사업체 수는 198,764개로 전국의 5.2%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규모에 해당함.
- 이는 전년대비 1.6%(3,047개소) 증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이 0.1%p 낮아졌으며, 전국의 증감률인 3.7%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대구시의 종사자 수는 866,599명으로 전국의 4.4%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에 해당함.
- 이는 전년대비 2.0%(16,968명)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감률인 3.8%에 미치지 못함.

<표 3-20> 2013~2014년 전국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p, %)

시도별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률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3,676,876	100	3,812,820	100	135,944	3.7	19,173,474	100	19,899,786	100	726,312	3.8
서울	785,094	21.4	812,798	21.3	27,704	3.5	4,585,090	23.9	4,739,883	23.8	154,793	3.4
부산	271,983	7.4	277,713	7.3	5,730	2.1	1,297,862	6.8	1,325,781	6.7	27,919	2.2
대구	195,717	5.3	198,764	5.2	3,047	1.6	849,631	4.4	866,599	4.4	16,968	2.0
인천	177,990	4.8	183,595	4.8	5,605	3.1	895,657	4.7	931,822	4.7	36,165	4.0
광주	108,808	3.0	111,285	2.9	2,477	2.3	529,113	2.8	537,822	2.7	8,709	1.6
대전	105,676	2.9	109,535	2.9	3,859	3.7	536,181	2.8	556,297	2.8	20,116	3.8
울산	76,993	2.1	78,638	2.1	1,645	2.1	488,627	2.5	506,899	2.5	18,272	3.7
세종	7,468	0.2	9,124	0.2	1,656	22.2	56,867	0.3	70,661	0.4	13,794	24.3
경기	773,216	21.0	810,260	21.3	37,044	4.8	4,259,215	22.2	4,471,773	22.5	212,558	5.0
강원	129,403	3.5	133,314	3.5	3,911	3.0	551,182	2.9	565,568	2.8	14,386	2.6
충북	115,611	3.1	119,499	3.1	3,888	3.4	591,509	3.1	620,557	3.1	29,048	4.9
충남	145,998	4.0	154,038	4.0	8,040	5.5	777,843	4.1	812,822	4.1	34,979	4.5
전북	139,656	3.8	144,902	3.8	5,246	3.8	624,407	3.3	646,651	3.2	22,244	3.6
전남	136,889	3.7	142,932	3.7	6,043	4.4	623,801	3.3	656,218	3.3	32,417	5.2
경북	205,734	5.6	213,813	5.6	8,079	3.9	1,004,067	5.2	1,028,921	5.2	24,854	2.5
경남	248,913	6.8	258,713	6.8	9,800	3.9	1,275,688	6.7	1,325,862	6.7	50,174	3.9
제주	51,727	1.4	53,897	1.4	2,170	4.2	226,734	1.2	235,650	1.2	8,916	3.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 대구시는 도소매업의 사업체가 전체의 27.1%(53,942개소)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6.3%), 제조업(1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7%) 순으로 조사됨.
- 2010년부터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교육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사업체가 증가함.
- 전반적으로 사업체수가 적은 산업에서 높은 증감률을 보였으며,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6%대의 높은 증감률을 보임.

<표 3-21> 산업별 사업체 수 추이 : 2010~2014

(단위 : 개, %)

산업대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183,115	188,300	192,600	195,717	198,764	100	2.07
A. 농업, 임업 및 어업	16	14	13	17	23	0.0	9.50
B. 광업	3	5	10	9	10	0.0	35.12
C. 제조업	23,334	23,962	25,071	25,426	26,036	13.1	2.78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7	46	48	53	64	0.0	8.02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7	242	270	279	303	0.2	8.70
F. 건설업	4,798	5,057	5,285	5,708	6,128	3.1	6.31
G. 도매 및 소매업	49,032	50,129	52,039	52,854	53,942	27.1	2.41
H. 운수업	19,483	20,731	19,354	19,938	20,179	10.2	0.88
I. 숙박 및 음식점업	30,880	31,591	32,238	32,453	32,429	16.3	1.2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7	975	1,040	1,067	1,174	0.6	7.56
K. 금융 및 보험업	2,119	2,156	2,197	2,218	2,185	1.1	0.7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28	5,131	5,432	5,653	6,103	3.1	5.4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01	3,654	3,921	4,066	4,321	2.2	6.1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45	1,977	2,124	2,160	2,282	1.1	5.4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16	416	418	417	422	0.2	0.36
P. 교육서비스업	10,499	10,642	10,586	10,583	10,365	5.2	-0.3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80	5,477	5,836	6,072	6,242	3.1	4.7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499	5,436	5,509	5,451	5,358	2.7	-0.6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541	20,659	21,209	21,293	21,198	10.7	0.7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 대구시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175,869명이며, 전체의 20.3%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6.7%), 숙박음식업(10.5%)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0년부터 대구시의 종사자 수는 연평균 2.45% 증가했으며, 광업을 제외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8.84%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표 3-22>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산업대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구성비	증감률
전 산업	786,487	809,381	833,836	849,631	866,599	100	2.45
A. 농업, 임업 및 어업	344	316	277	287	270	0.0	-5.88
B. 광업	24	29	31	40	43	0.0	15.69
C. 제조업	155,490	161,709	168,456	173,214	175,869	20.3	3.1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65	2,381	2,138	2,145	3,178	0.4	8.84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74	2,276	2,355	2,454	2,562	0.3	4.19
F. 건설업	42,563	41,271	41,009	38,306	42,218	4.9	-0.20
G. 도매 및 소매업	131,477	134,308	139,605	142,566	144,683	16.7	2.42
H. 운수업	45,171	45,350	44,446	44,509	45,372	5.2	0.11
I. 숙박 및 음식점업	78,269	82,436	85,463	88,318	90,864	10.5	3.8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652	12,090	12,339	11,972	11,988	1.4	0.71
K. 금융 및 보험업	35,188	35,848	34,860	33,599	33,772	3.9	-1.0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544	18,262	18,921	20,197	21,326	2.5	5.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453	19,690	21,244	21,709	22,563	2.6	5.1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496	37,602	38,257	41,034	39,725	4.6	4.3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319	29,831	29,230	28,690	28,820	3.3	-2.82
P. 교육서비스업	70,276	71,377	73,959	74,726	74,514	8.6	1.4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934	57,858	62,808	66,454	69,171	8.0	5.9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818	14,181	14,643	14,908	14,573	1.7	1.3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030	42,566	43,795	44,503	45,088	5.2	2.3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 3. 소결

- 대구시의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50세 이상은 매년 2~3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노동인력으로 볼 수 있는 30~40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노동공급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또는 고용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0%대로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부터 다시 60%대를 회복함.
  - 이는 남성과 49세 이하의 청·중년층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었기 때문임.
  -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장년층, 고령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증가하는 이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취업자는 남, 녀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녀간 고용률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 취업자는 고학력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5년 들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산업 위주의 뚜렷한 취업자 증가를 보임.
  - 이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분야의 직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뿌리산업 등의 인력양성 및 투자로 인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도 증가함.
  
- 대구시의 종사자들의 지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 중심의 임금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중심으로 비 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이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의 안정성 및 질적 향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실업률은 최근 5년 사이 3%대로 유지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통근자의 유출·입 현황으로 볼 때, 대구시는 주거의 성격이 좀 더 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 유입통근자에 비해 유출통근이 약 3배 이상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직주율이 107.4%로 높게 나타남.
  - 유출·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산시로 유입은 전체의 63.2%, 유출은 26.7%를 차지함.
  - 통근 문제를 고려할 경우 경산시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력적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대구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대구시는 여성과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구시의 노동공급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노동수요의 발굴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여겨지는 30~40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외부로의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노동공급에 대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2절 정책사업의 예산 구조

### 1.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 대구시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대구시 정책사업의 예산을 분석함.
- 사업 분류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 등 지원서비스이며 전체 정책사업 예산의 29.5%에 해당하는 1조 4554.9억 원 규모임.
  - 세부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기타를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으로 415개의 사업이 있음.
  - 1개의 세부사업의 단위가 가장 큰 사업은 기타를 제외하면 복지 등 지원서비스에 속해 있으며, 4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작은 예산의 사업 역시 복지 등 지원서비스에 속해 있으며, 79만4천원 규모임.

<표 3-23> 정책사업 유형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사업 분류	세부사업 당 평균	최소예산 사업	최대예산 사업	합계	비중	세부사업 수
직접일자리창출	2,807,251	5,400	51,919,787	235,809,092	4.8	84
직업능력개발훈련	324,476	10,000	6,400,000	10,383,242	0.2	32
고용서비스	632,226	20,000	1,865,527	6,322,257	0.1	10
고용장려금	2,285,818	12,000	7,148,334	18,286,544	0.4	8
창업지원	679,157	12,240	3,000,000	12,903,980	0.3	19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0.0	1
복지 등 지원서비스	4,243,415	794	433,277,475	1,455,491,372	29.5	343
일자리인프라	556,315	9,900	2,040,260	6,119,460	0.1	11
사회간접자본(SOC)	1,412,479	884	41,200,000	586,178,919	11.9	415
시설센터운영	2,901,523	3,100	391,659,821	757,297,544	15.4	261
연구용역조사	201,163	2,160	2,161,000	15,288,401	0.3	76
행사,축제,홍보서비스	355,967	3,000	16,454,600	73,329,099	1.5	206
ODA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0	1
기업유치,신설,확장	1,909,308	42,000	12,000,000	34,367,543	0.7	18
기업육성	1,452,487	20,000	60,024,000	132,176,300	2.7	91
기타	2,902,418	300	447,078,109	1,584,720,422	32.2	546
<b>합계</b>	<b>2,322,714</b>	<b>300</b>	<b>447,078,109</b>	<b>4,928,799,175</b>	<b>100</b>	<b>2,122</b>

## (1) 직접일자리창출사업

-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총 예산은 약 2,358억 원, 84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4.8%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직접일자리창출 사업 중 63.3%가 보건복지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35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이 9개 사업, 25.5%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녹색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시민행복교육국은 세부사업 수에 비해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표 3-24>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기획조정실	53,819	0.0	2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통계자료 발간
녹색환경국	2,039,673	0.9	10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구군)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31,112	0.0	2	·농기계훈련사업(구·군) ·농업 전문인력 양성(구·군)
문화체육관광국	5,967,483	2.5	10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지원 ·구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매치 등
보건복지국	149,270,311	63.3	35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확충(구군) 등
시민행복교육국	6,109,310	2.6	11	·지역공동체일자리(구군) ·콜센터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60,084,683	25.5	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구·군) ·아동복지교사지원(구·군)
자치행정국	1,003,181	0.4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
창조경제본부	11,119,520	4.7	2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국가직접지원)
첨단의료산업국	130,000	0.1	1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사업 (국가직접지원)
합계	235,809,092	100	84	

##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총 예산은 약 103.8억 원, 32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 사업 중 0.2%의 비중을 차지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중 68.0%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사업수는 10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3개 사업, 12.8%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5>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50,000	1.4	1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기획조정실	39,650	0.4	1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국	1,328,100	12.8	3	·기초예술진흥사업 ·대구게임아카데미 지원
보건복지국	656,504	6.3	7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교육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870,888	8.4	6	·기술, 문화소양교육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등
창조경제본부	7,063,100	68.0	10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등
첨단의료산업국	275,000	2.6	4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대구공동IRB사업 지원 등
합계	10,383,242	100	32	

## (3) 고용서비스사업

- 고용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63억 원, 10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0.1%의 비중을 차지함.
- 고용서비스사업은 중 32.8%가 보건복지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3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27.0%), 시민행복교육국(21.1%), 창조경제본부(19.1%) 순으로 나타남.

<표 3-26> 고용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보건복지국	2,074,098	32.8	3	·노숙인 상담소 운영 지원(구군) ·노숙인프로그램지원 ·장애인 취업박람회
시민행복교육국	1,332,060	21.1	1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708,843	27.0	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등
창조경제본부	1,207,256	19.1	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국가직접 지원) ·일자리지원사업
합계	6,322,257	100	10	

(4) 고용장려금사업

○ 고용장려금사업의 총 예산은 약 182억 원,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정책사업 중 0.4%의 비중을 차지함.

- 고용장려금사업은 중 39.1%가 시민행복교육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1개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큼.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33.0%), 여성가족정책관(27.9%) 순으로 나타남.

<표 3-27> 고용장려금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시민행복교육국	7,148,334	39.1	1	·사회적기업육성(구·군)
여성가족정책관	5,108,010	27.9	4	·결혼이주여성 인턴(구군포함)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구·군)
창조경제본부	6,030,200	33.0	3	·일자리 창출 ·중장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합계	18,286,544	100	8	



## (5) 창업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약 129억 원, 19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0.3%의 비중을 차지함.
- 창업지원사업은 중 74.4%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사업수는 12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25.2%), 여성가족정책관(0.4%)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창업지원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문화체육관광국	3,256,000	25.2	5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콘텐츠 창업기업 지속성장 프로젝트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45,980	0.4	2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활성화 사업
창조경제본부	9,602,000	74.4	1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청년벤처창업펀드 등
합계	12,903,980	100	19	

##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은 녹색환경국 1개의 사업(사업명 : 석면피해구제(국가지원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25백만 원에 불과함.

## (7) 일자리인프라사업

- 일자리인프라사업의 총 예산은 약 61억 원, 1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일자리인프라사업은 시민행복교육국 사업이 55.7%, 4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16.8%), 첨단의료산업국(14.2%)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일자리인프라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문화체육관광국	281,000	4.6	1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시민행복교육국	3,411,510	55.7	4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구·군),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가족정책관	530,000	8.7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
창조경제본부	1,029,900	16.8	2	·근로자 권익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협의회 운영
첨단의료산업국	867,050	14.2	2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신활력 한방산업육성사업
합계	6,119,460	100	11	

### (8) 사회간접자본(SOC)사업

-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총 예산은 약 5,861억 원, 415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11.9%를 차지하며,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녹색환경국 사업이 21.1%, 102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18.4%), 창조경제본부(13.5%), 문화체육관광국(12.2%)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07,607,388	18.4	73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등
기획조정실	311,361	0.1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정부통합전산센터건립지원 등
녹색환경국	123,514,742	21.1	102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농업기술센터	95,000	0.0	2	·신기술보급사업(구·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구·군)
도시재창조국	63,641,482	10.9	50	·측면도로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43,637,230	7.4	3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국	71,721,613	12.2	47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보건복지국	19,014,284	3.2	19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소방안전본부	13,565,059	2.3	14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소교) ·시설 확충 등
시민행복교육국	12,377,900	2.1	10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3,661,900	0.6	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회사무처	100,000	0.0	1	·청사 환경정비
자치행정국	5,215,810	0.9	6	·자가통신망(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등
재난안전실	29,048,896	5.0	14	·지방하천정비사업(구·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창조경제본부	79,091,248	13.5	45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등
첨단의료산업국	13,575,006	2.3	16	·한국뇌연구원건립(국가직접지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국가직접지원) 등
합계	586,178,919	100	415	

### (9) 기업유치·신설·확장사업

- 기업유치·신설·확장사업은 창조경제본부에 17개 사업, 첨단의료산업국에 1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창조경제본부가 338억으로 전체 예산의 98.5%이며, 첨단의료산업국은 약 4억 9천만 원 정도임.
- 세부사업으로는 창조경제본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등이 있으며, 첨단의료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지원'이 있음.

### (10) 기업육성사업

- 기업육성사업의 총 예산은 약 1,321억 원, 9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2.7%의 비중을 보임.
- 기업육성사업 예산의 91.0%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73개 사업이 있음.
- 그 밖에 첨단의료산업국(6.8%), 문화체육관광국(2.1%), 기획조정실(0.1%)의 사업들이 있음.

**<표 3-31> 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기획조정실	100,000	0.1	1	·지역기업 첨단기술 육성
문화체육관광국	2,834,000	2.1	12	·대구 음악창작소 조성 ·게임기업 역량강화 등
창조경제본부	120,317,300	91.0	7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야시장 등 육성사업 등
첨단의료산업국	8,925,000	6.8	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등
합계	132,176,300	100	91	

### (11)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4554억 원, 343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29.5%를 차지하며,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국 사업이 37.1%, 169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시민행복교육국(31.1%), 여성가족정책관(24.6%) 순으로 나타남.

<표 3-32>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30,000	0.0	1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기획조정실	628,533	0.0	4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등
녹색환경국	80,600	0.0	1	·청소년 현장체험교육사업
농업기술센터	34,550	0.0	4	·농가경영개선지원(구·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구·군) 등
도시재창조국	79,626,945	5.5	4	·기초생활 주거급여(구·군)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등
문화체육관광국	14,394,430	1.0	28	·토요문화학교운영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보건복지국	539,861,208	37.1	169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 생계급여(구·군) 등
보건환경연구원	160,867	0.0	1	·시민보건위생
시민행복교육국	452,075,858	31.1	51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등
여성가족정책관	358,728,505	24.6	56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구·군) 등
재난안전실	203,900	0.0	2	·안전정책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창조경제본부	9,665,976	0.7	22	·유기질 비료공급 ·기능경기 및 기능단체 지원
합계	1,455,491,372	100	343	

## (12) 시설센터운영사업

○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총 예산은 약 7,572억 원, 26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15.4%를 차지하며,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 시설센터운영사업은 보건복지국 사업이 58.1%, 28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10.1%), 여성가족정책관(8.0%) 순으로 나타남.

<표 3-33>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감사관	19,586	0.0	1	·내부통제 운영
건설교통국	43,361,626	5.7	23	·나드리콜운영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등
건설본부	191,578	0.0	1	·건설본부운영 일반
공무원교육원	12,000	0.0	1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기획조정실	3,155,608	0.4	2	·구)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녹색환경국	36,266,216	4.8	51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업기술센터	90,916	0.0	1	·농업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창조국	842,310	0.1	4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76,600,000	10.1	1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국	56,836,743	7.5	50	·단체운영 ·민간위탁 행정 등
보건복지국	439,776,987	58.1	28	·명복공원 운영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소방안전본부	2,673,495	0.4	3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기금)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시민안전테마파크
시민행복교육국	1,313,759	0.2	4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음향영상시스템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60,367,206	8.0	34	·아동복지시설운영(구·군) ·어린이집 운영지원(구·군) 등
의회사무처	37,013	0.0	1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12,280,621	1.6	11	·청사입차 관리 ·맞춤형복지 운영 등
재난안전실	6,135,220	0.8	8	·관련상가 관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등
창조경제본부	15,126,660	2.0	26	·지역 전략산업 디자인개발 지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등
첨단의료산업국	2,210,000	0.3	11	·기증제대혈은행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 등
합계	757,297,544	100	261	

(13) 연구용역조사사업

-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총 예산은 약 152억 원, 76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0.3%의 비중을 보임.
- 연구용역조사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17.6%,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도시재창조국(15.9%), 기획조정실(14.3%) 순이며, 사업수가 가장 많은 실국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2개 사업(13.1%)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34>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722,380	11.3%	9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 교통기초조사 등
기획조정실	2,189,417	14.3%	8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계 용역 ·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 등
녹색환경국	640,840	4.2%	4	· 기후변화 정책지원 · 성서소각시설 교체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
농업기술센터	4,680	0.0%	2	·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 농산물 소득조사분석(구·군)
도시재창조국	2,431,400	15.9%	6	·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125,000	0.8%	1	·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문화체육관광국	2,691,000	17.6%	3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보건복지국	421,203	2.8%	4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 감염병관리 등
보건환경연구원	1,996,356	13.1%	22	· 먹는물검사 · 사업장폐수및오수방류수검사
시민행복교육국	115,000	0.8%	2	· 대구자원봉사포럼 · 지역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
재난안전실	554,300	3.6%	2	·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소교)
창조경제본부	1,646,825	10.8%	12	· 염색산단 재생사업 ·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등
첨단의료산업국	750,000	4.9%	1	·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 사업(국가직접 지원)
합계	15,288,401	100.0%	76	

(14)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

-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733억 원, 206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1.5%의 비중을 보임.
-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54.8%, 5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12.7%), 대변인(6.6%)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음.

<표 3-35> 행사·축제·홍보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974,150	1.3	14	·교통문화선진화 홍보 ·버스정책 추진 등
국제협력관	2,507,500	3.4	5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국가직접사업) ·전시회지원 등
기획조정실	259,900	0.4	3	·시정소개 자료 제작, 시정백서 발간 ·지방세정 홍보
녹색환경국	3,685,780	5.0	14	·물중심도시 조성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등
농업기술센터	93,000	0.1	2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업인한미음대회
대변인	4,870,110	6.6	10	·시정 영상홍보 추진 ·체계적 언론홍보 등
도시브랜드담당관	542,110	0.7	3	·새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확산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 등
도시재창조국	158,500	0.2	3	·건축문화비엔날레,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문화체육관광국	40,206,995	54.8	50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등
보건복지국	1,262,471	1.7	19	·금연환경조성 ·노인 전국대회 지원 등
소방안전본부	732,550	1.0	11	·소방의 날 행사 및 후생복지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등
시민행복교육국	1,502,500	2.0	10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미소친절대구만들기 등
여성가족정책관	537,080	0.7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등
의회사무처	471,723	0.6	1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자치행정국	516,880	0.7	2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의전행사관리
재난안전실	1,760,700	2.4	5	·안전마을만들기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등
창조경제본부	9,306,400	12.7	38	·대구 패션페어 ·섬유산업 국내관로개척 등
첨단의료산업국	3,940,750	5.4	10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
합계	73,329,099	100	206	

### (15) ODA사업

- ODA사업은 국제협력관 1개의 사업(사업명 : 국비지원 공적개발원조사업(국가 직접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1억 원임.



## (16) 기타사업

○ 15개의 사업분류로도 분류되지 않은 지자체 고유의 행정업무에 속하는 기타사업은 전체 정책사업의 32.2%인 약 1조 5,847억 원의 예산임.

- 전체 2,122개 사업 중 25.7%에 해당하는 546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장 예산이 많은 실국은 기획조정실로 36.4%이며, 다음으로 많은 곳은 보건복지국 30.2%임.

<표 3-36> 기타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감사관	669,490	0.0	10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감사활동 지원 등
건설교통국	233,386,619	14.7	59	·건설산업행정지원 등
건설본부	130,610	0.0	1	·공사업무지원
공무원교육원	1,637,110	0.1	10	·공무원교육(수입대체경비) 등
국제협력관	1,131,620	0.1	3	·국제교류, ·국제협력 ·해외주재관 운영 등
기획조정실	576,564,432	36.4	55	·광역행정 추진 등
녹색환경국	23,799,905	1.5	31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
농업기술센터	1,139,787	0.1	11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농기계임대사업지원 등
도시브랜드담당관	13,400	0.0	1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 운영
도시재창조국	27,073,505	1.7	37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항공사진촬영)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103,279,451	6.5	8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등
문화체육관광국	20,514,755	1.3	23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
보건복지국	479,021,103	30.2	39	·감염병전문가교육 ·감염질환역학조사 등
보건환경연구원	2,480,338	0.2	25	·가축방역보조원사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자본보조) 등
소방안전본부	33,938,705	2.1	95	·119구급체계구축사업(기금) ·개인보호장비 보장(소교)
시민행복교육국	1,411,934	0.1	9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고객만족행정서비스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156,290	0.0	3	·보육아동관련 업무수행
의회사무처	3,695,535	0.2	13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 ·근무환경개선 장비 구입 등
자치행정국	14,784,492	0.9	46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실	12,353,558	0.8	25	·CCTV설치 및 지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창조경제본부	47,283,243	3.0	38	·ICT융합산업 활성화 ·계량기 관리
첨단의료산업국	254,540	0.0	4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합계	1,584,720,422	100.0%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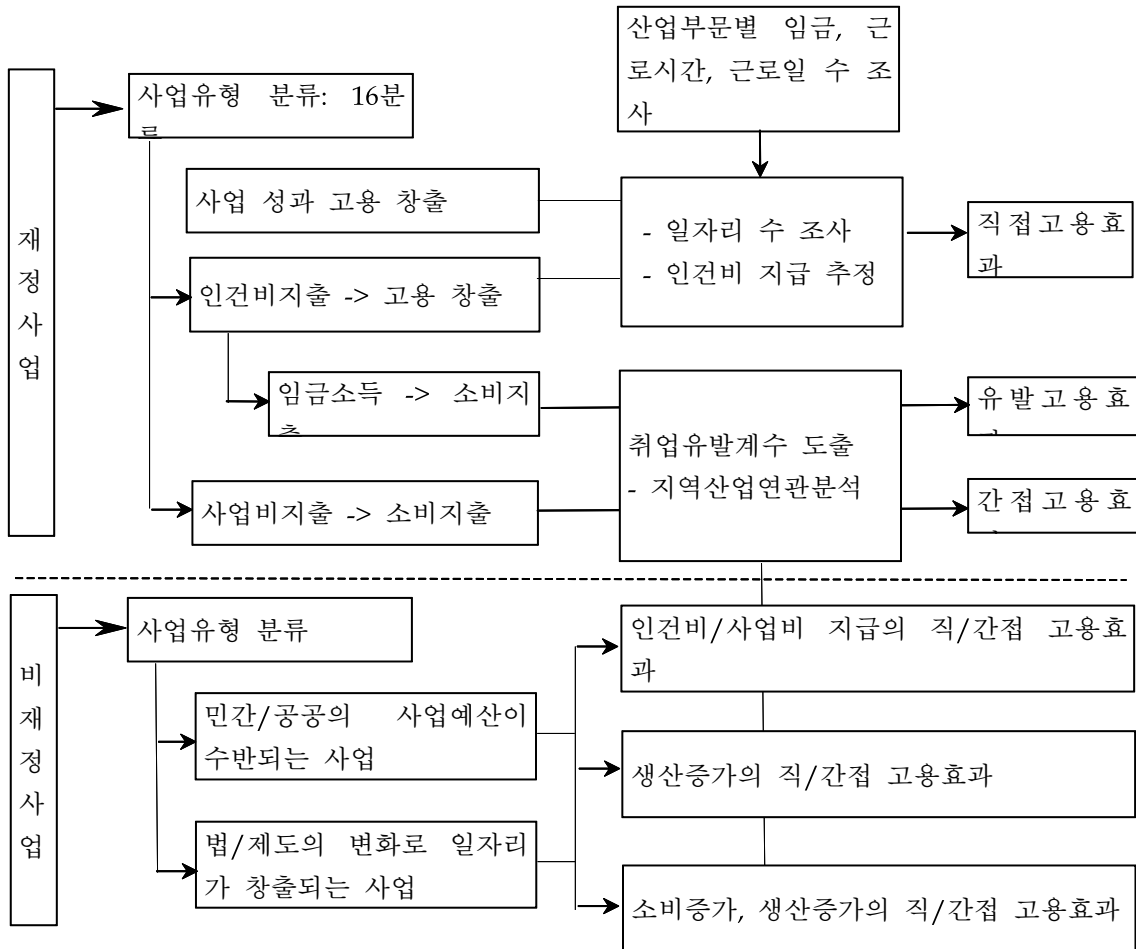
## 제4장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모형 개발

### 제1절 고용효과 측정 모형

#### 1. 모형의 구조

- 사업은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
- 재정사업은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 사업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
  - 사업목적이 일자리창출에 있거나, 사업특성 상 예산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성과로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은 성과 고용창출효과 측정
  - 예산지출에서 인건비 지급은 직접고용효과 창출
    - 인건비 지출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는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이는 유발고용 창출
  - 예산의 인건비 이외 사업비 지출은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간접고용 창출
- 직접고용효과 측정을 위한 각종 계수 조사
  - 산업부문별 연평균 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 조사
- 간접고용효과 측정을 위한 지역산업연관분석
  -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고용효과 측정을 위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직간접고용효과 측정을 위한 예산서 작성과 예산 분류
  - 대구시 예산서 분석, 예산항목과 소비지출 항목의 연계, 고용효과 측정을 위한 예산서 작성
- 비재정사업의 사업 특성 분류와 직간접 고용효과 측정 방식 도출

[그림 4-1] 고용효과 측정 모형의 구조



## 2.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의 범위

- 모형에서 포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대상 범위를 포함하고, 대구시의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대구시 재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 노동시장 정책사업과 경제·산업정책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 노동시장 정책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등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으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기타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인프라 구축, 복지 등 지원서비스 사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함함.

- 경제·산업정책 사업은 사업의 고유 목적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집행에 따른 주로 인건비 지출을 통한 직접 고용 효과와 기타 사업비의 지출로 산업의 연관과정을 거쳐 간접(유발) 고용 효과가 발생함. 관련 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시설센터의 운영, 연구용역조사, 기업유치 신설 확정, 기업육성 등의 사업을 포괄함.
- 대구시 비재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제도의 변화 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함하고 있음.

### 3. 일자리 창출 성과의 구분

- 일자리 창출 성과의 범위는 고용의 생성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신규고용과 고용유지를 모두 포괄함. (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연구원(2015), 고용영향 자체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 일자리 창출 성과 = 고용 유지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일자리 창출 성과의 직간접성 측면에서는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 및 유발고용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총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 간접고용효과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자 수 + 사업 성과 직접고용자 수  
간접고용효과 = 사업비 지출 간접고용자 수 + 임금소득 지출 간접고용자 수
- 직접고용효과는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있거나,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주로 인건비 지급을 통해 창출되거나 유지되는 일자리)를 의미
  -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는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고용자 수
  - 사업성과 직접고용효과는 인건비가 지출되지 안되더라도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두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고용서비스(취업알선)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자 수

- 간접고용효과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생산 혹은 소비의 창출에 의해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사업비 지출 간접고용효과와 임금소득 지출 간접고용효과 등으로 구분
  -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지출로 발생하는 사업비 지출 간접고용효과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지출액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산업연관분석에서는 고용유발효과로 표현됨). 이는 대구지역과 대구 이외 지역으로 구분
- 임금소득 지출 간접고용효과는 인건비 지출의 2차 효과로 인건비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가 산업생산 증가로 파급되어 발생하는 일자리(산업연관분석에서는 고용유발효과로 표현)

#### 4. 일자리 수 측정 단위

- 여기서는 대구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일자리 수 측정은 주로 참여자 기준(Head Counting)으로 측정하고, 간접고용 및 유발고용효과는 전업환산(FTE)으로 측정함.

가. 간접고용은 전업환산기준 고용량으로 측정

-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를 기존의 연인원(man-y ear) 기준에서 전업환산기준인원(full-time equivalent)으로 전환
  - 한국은행에서는 기업조사보다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2008 SNA에 따라 가계 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식 인구 통계인 경제 활동 인구를 기초로 고용표를 작성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에서는 근무시간까지 감안한 전업환산(full-time equivalent) 기준의 취업자 및 피용자수를 제시
  - 전업환산기준 취업자수 및 피용자수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으로서 근로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노동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임
  - 기존의 연인원이란 1년동안 각 사업체에서 투입한 실제 노동량을 계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로 기존 고용표의 경우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영업개월수를 연간으로 조정하여 사용했음

\* 예를 들어 사업장별로 1년중 6개월간 영업했을 경우에는 1/2, 3개월간 영업했을 경우에는 1/4로 원자료의 취업자 및 피용자수를 연인원으로 조정해 주었음. 이 경우 근로기간은 고려했지만, 전업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한 노동량으로 취급되어 노동량이 과다 계측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

- 실제근로시간 기준의 고용표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는 직접노동시간과 연관노동시간(전화통화, 직무연수 등),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
  - 반면, 모든 형태의 휴가, 통근시간, 직무연수 이외의 교육, 식사시간, 출장기간중 장기 휴식시간 등은 제외
-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 고용 인원 산출식
  -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파트타임도 1명으로 산정)으로 산출하되 총근로시간을 8시간 근무자의 연간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고용자수를 산출

#### 나. 직접고용은 참여자 기준 고용량으로 측정

- 측정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직접 고용자 수는 참여자 기준(Head counting) 취업자 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자 기준은 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판단됨.
  - 대구시에서는 재정사업의 직접 고용자 수 측정에서 주로 참여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다. 임금 계약 기준으로 일자리 수 측정

- 임금 계약 기준의 측정단위
  - 고용의 정량적 측정단위는 임금 계약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기본 단위로 하고 피용자 수를 보조 단위로 사용함.
    - 취업자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임.
    - 피용자란 순수 임금근로자 인원

## 5. 고용형태의 구분

### □ 상용직 근로자

-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①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불리우는 자) ②근무기간이 1년 이하이더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③자영업주를 제외한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이에 해당
- 연구에서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근로자로 정의

### □ 임시직 근로자

- 공동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말하며, 한시적 위원, 비상근직, 축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자도 포함
- 연구에서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근무 개월 수로 측정이 가능한 근로자로 정의

### □ 일용직 근로자

- 임금 또는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사람
- 연구에서는 근로형태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근무일 수로 측정이 가능한 근로자로 정의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재택/가내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함.
-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무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함

## 제2절 일자리 창출 사업의 유형과 메커니즘

### 1. 사업의 유형 분류

-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을 위해 대구시 정책사업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업유형을 분류
- 보다 광범위한 사업과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와 대구시 예산서의 재정, 비재정 사업 분류 기준을 포괄함.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분류체계에 따라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지원 및 유지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복지지원사업, 인프라구축사업, 경제산업정책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7개 유형으로 구분

<표 4-1> 대구시 정책사업의 유형분류

분류		내용
1	직접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 사업</li> <li>○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li> <li>○ 사업의 목적이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급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업</li> <li>- 실비지원 또는 일일근로형의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됨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li> </ul> </li> </ul>
2	직업능력 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교육)사업</li> <li>○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양성) 및 재직자(향상) 사업도 포함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공동훈련, 여성인력직업훈련 등</li> <li>※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R&amp;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 사업 예)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등</li> <li>②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예) 군민정보화 교육, KCDF 아카데미, 농기계훈련사업 등</li> </ul> </li> </ul>



분류	내용
3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실업자) 또는 구인자(사용자)에게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구인 발굴, 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으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이외에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센터)에 의한 서비스 포함</li> <li>예1)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li> <li>예2)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li> <li>○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li> <li>※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li> <li>①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li> </ul>
4 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li> <li>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업체인턴 등</li> </ul>
5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의 전·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li> <li>예)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li> </ul>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li> </ul>
7 일자리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물적(시설설치 등), 인적(포럼 등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li> </ul>
8 사회간접 자본(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 문화, 산업인프라, 건설, 환경 분야 등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li> <li>예)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사업</li> <li>○ 광의적 개념으로 국방, 치안, 보건, 의료, 후생, 교육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함</li> </ul>
9 기업유치· 신설·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대학 등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민간,공공) 유치를 위한 사업</li> <li>○ 투자유치 및 공장 신설 및 증설 사업</li> <li>예)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li> </ul>
10 기업육성 및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거나 R&amp;D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li> <li>예)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li> </ul>
11 복지 등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단체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 등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li> <li>○ 동 사업은 사업 목적인 복지 등의 지원인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과는 구분됨.</li> </ul>
12 시설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으로 생성된 시설 또는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li> <li>○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하는 사업</li> <li>예1)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li> <li>예2)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등</li> </ul>

분류		내용
13	연구용역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국공립기관, 학교 등)에 연구개발 과제를 의뢰하는 사업</li> <li>○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li> <li>○ 관리 및 청소 등 단순용역 제외</li> <li>예)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li> </ul>
14	행사·축제·홍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행사, 축제 및 홍보를 위한 사업</li> <li>예) ○○○○축제</li> </ul>
15	ODA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 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사업</li> </ul>
1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의 행정업무 등</li> <li>○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li> <li>예)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등</li> </ul>

## 2. 일자리 창출 경로

□ 이하에서는 일자리관련 사업의 유형별 분류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로를 개관함.

### (1) 직접일자리 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이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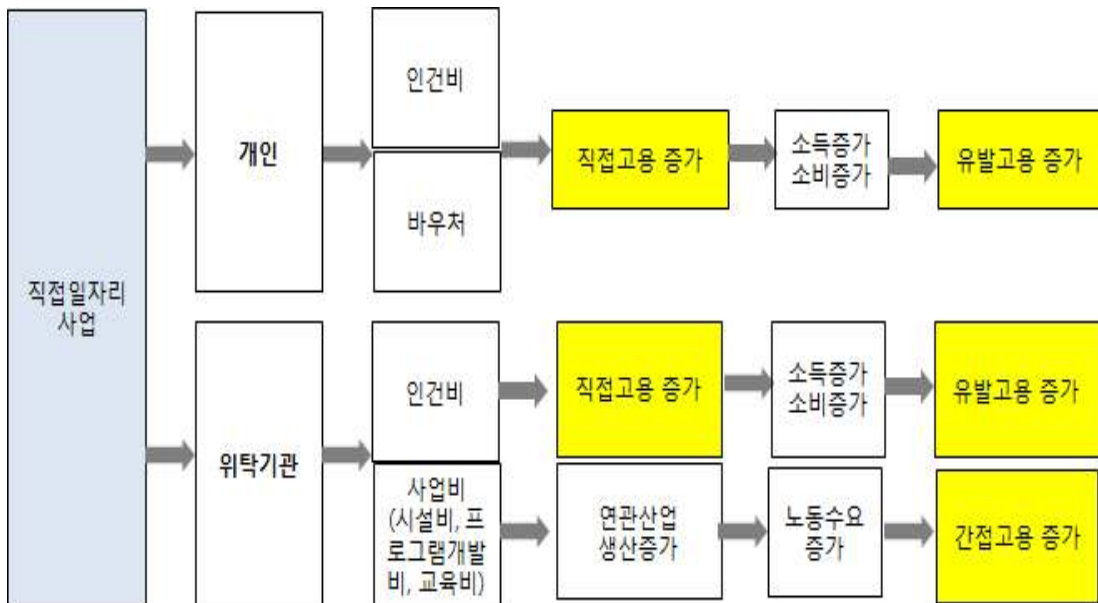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 직접일자리 사업은 수행방식에 따라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별됨.

○ 정부가 직접 수행할 때는 지원 대상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바우처(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정부가 위탁기관에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개인에 대한 현금성, 비현금성 급여지급은 직접고용 증가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가계소비 등으로 연결되어 유발고용의 증가 요인이 됨.
-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지원도 각각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 생산과 노동수요 증대요인으로 인한 간접 고용증가 요인이 됨.

[그림 4-2]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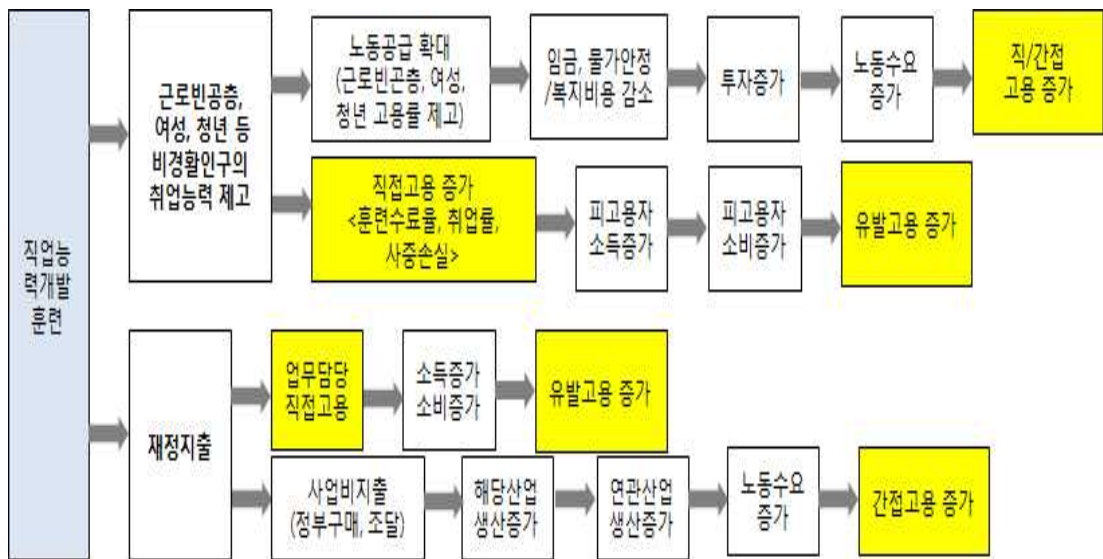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사업임.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사업도 포함함.
- 대상 및 사업내용의 성격에 따라 양성훈련,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취약계층훈련으로 나누어 짐.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사업목적 달성효과와 재정지출 효과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7) 이규용(2013) 참조

- 먼저 근로빈곤층,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고용률이 제고되는 직접고용 효과를 가져 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 물가 안정과 복지비용 감소로 나타나 경제전반에 투자 및 생산증가로 인해 간접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 오게 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훈련 수료율, 취업률이 있으며, 정부 정책개입 순효과(1-사중손실 효과)가 관건임.
- 다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 효과인데 인건비, 사업비 지출(정부조달 및 구매)에 의해 직, 간접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 오게 됨.

[그림 4-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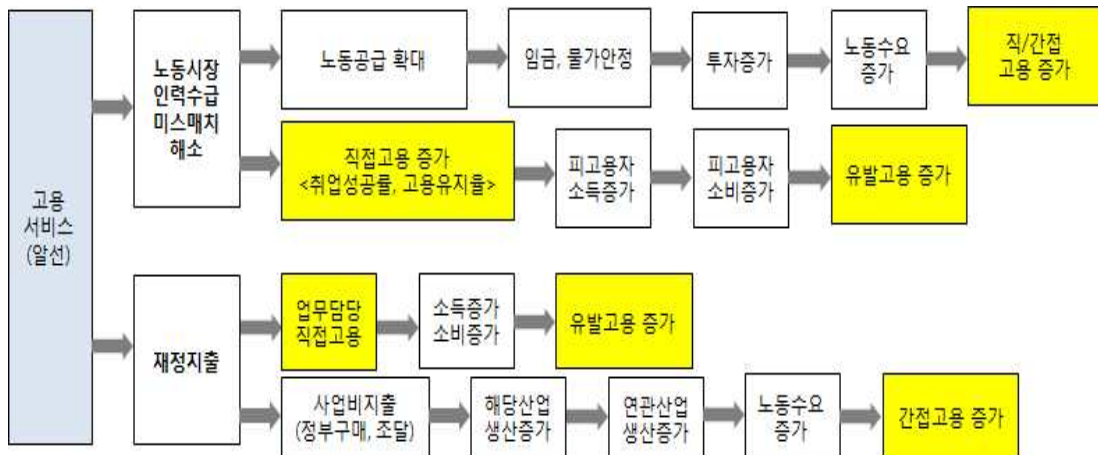


### (3) 고용서비스(알선) 사업

- 고용서비스(알선) 사업은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고용서비스사업은 크게 취업지원 사업과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됨.
  - 취업지원 사업은 다시 사업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종합패키지사업(교육, 연수, 상담, 취업알선), 취업상담 알선 및 지원사업(센터 운영지원 포함), 연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나누어짐.

- 인프라 사업도 조사연구 및 컨설팅 사업과 센터인력양성, 기기지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짐.
-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사업목적 달성효과와 재정지출 효과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고용서비스(알선) 사업에 의해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해소되면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직접고용 증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금, 물가 안정과 복지비용 감소로 나타나 경제전반에 투자 및 생산증가로 인해 간접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취업성공률, 고용유지율 등이 있으며 이들 지표의 제고 여부가 고용창출의 관건임.
- 다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효과인데 인건비, 사업비지출(정부조달 및 구매)에 의해 직, 간접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옴.

[그림 4-4] 고용서비스(알선)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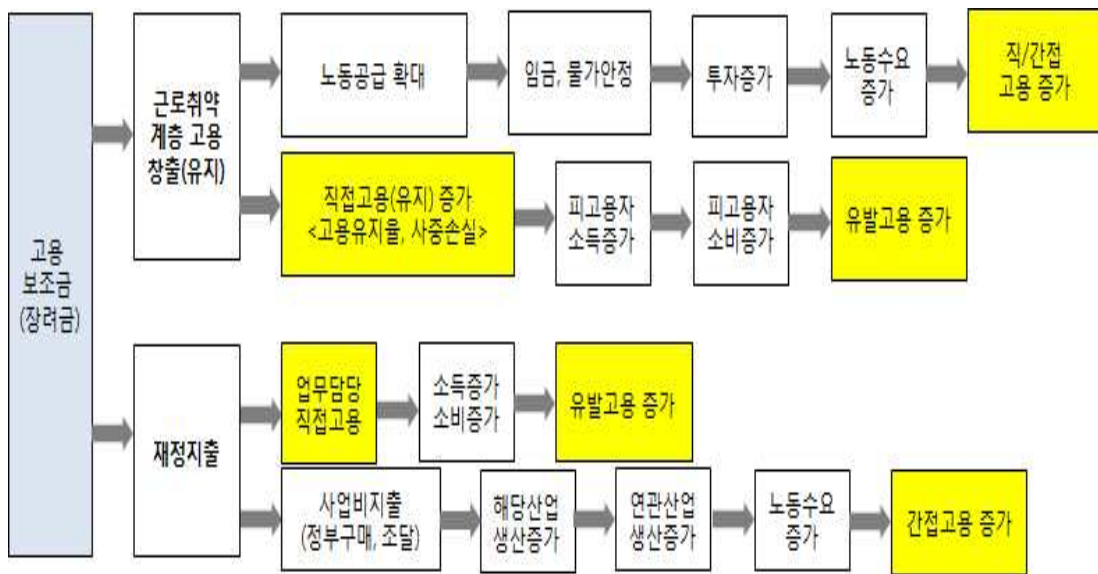


#### (4) 고용장려금 사업

- 고용장려금 사업은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고용유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고용장려금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사업목적 달성효과와 재정지출 효과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고용장려금(보조금) 사업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및 유지 등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직접고용 증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금, 물가 안정 등으로 경제전반에 투자 및 생산증가로 인해 간접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고용유지율이 있으며, 정부 정책개입 순효과(1-사중손실 효과 비중)도 관건임.
- 다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효과인데 인건비, 사업비지출(정부조달 및 구매)에 의해 직, 간접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옴.

[그림 4-5] 고용 장려금(보조금)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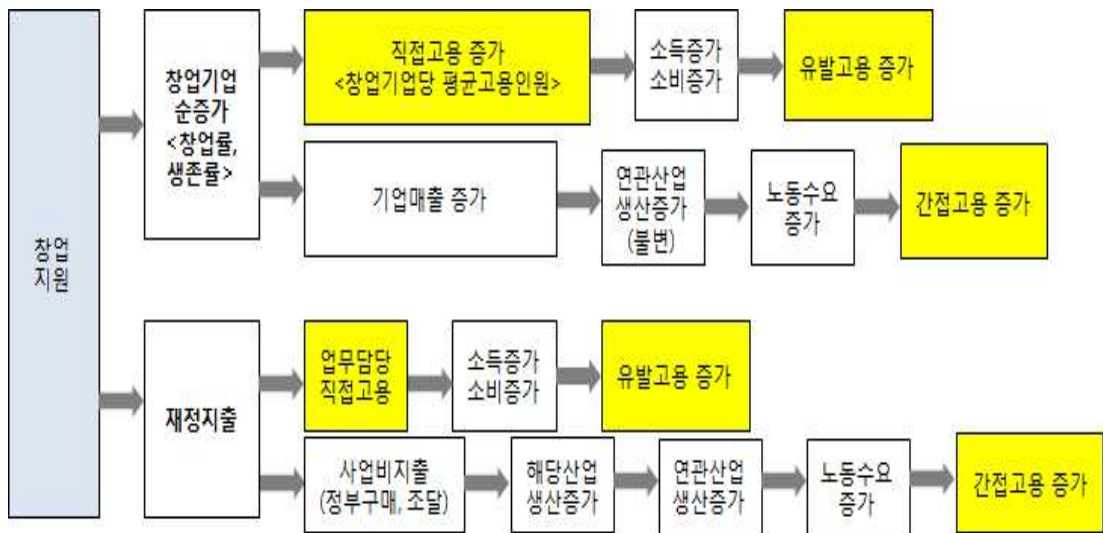


#### (5) 창업지원 사업

- 창업지원 사업은 대상집단이 자영업 등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 지원 형태는 직접지원(현금지원)과 간접지원(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등이 있음.
- 창업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사업목적 달성효과와 재정지출 효과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창업지원 사업에 의해 창업기업이 순증가할 경우 기업 직접채용 증가에 따른 직접고용 창출효과와 기업매출 증가에 따른 간접고용 고용 증가가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창업률, 1년 후 생존률이 있으며, 이들 지표의 제고여부가 고용창출의 관건임.

- 다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효과인데 인건비, 사업비지출 (정부조달 및 구매)에 의해 직, 간접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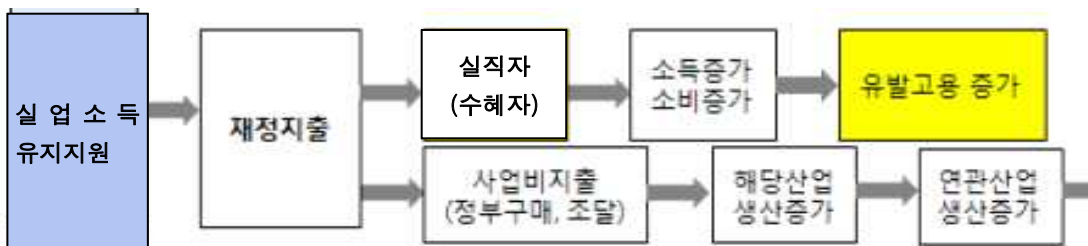
[그림 4-6]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6)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 실업자에 대한 사회부조(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및 보조 등)을 통해 실직자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동 사업의 대상은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이므로 직접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실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실업자의 소비를 유발하고 이 소비활동은 유발고용 효과를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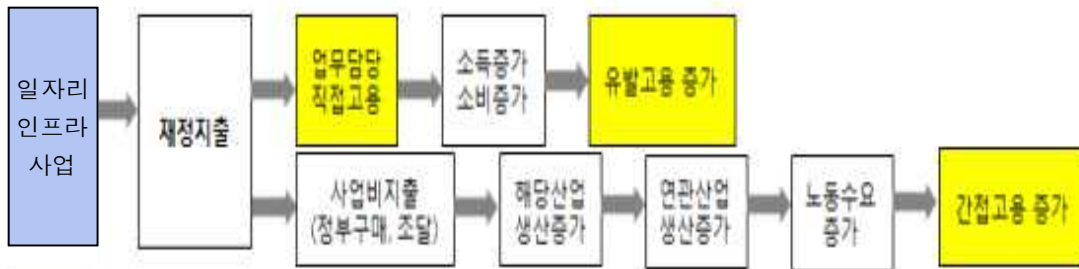
[그림 4-7] 실업소득유지지원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7) 일자리 인프라 사업

- 일자리 인프라 사업은 지역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물적(시설설치 등), 인적(포럼 등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사업비 지원에서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인건비 지급은 업무 담당자의 직접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사업비의 물적 지원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소비 지출이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고, 이에 간접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그림 4-8] 일자리 인프라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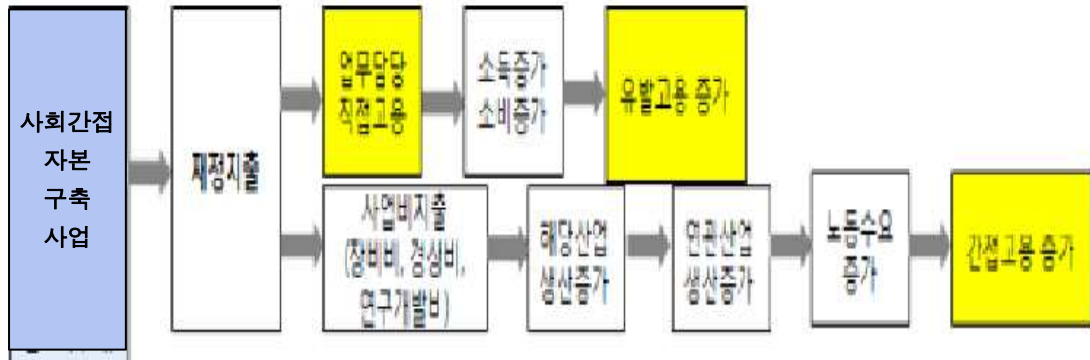


### (8)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

- 사회간접자본 구축(산업단지, 클러스터 등) 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국민경제 활동의 원활성을 위해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구축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을 의미함.
- SOC투자의 주체는 정부, 공기업, 기타 공공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건설구축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SOC 등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 성과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단기적 기반구축 과정에서의 재정지출 효과와 장기적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시행 후 효과,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효과는 인건비 지출에 의한 직접고용 효과, 장비비, 경상비 등 사업비 지출(정부 조달, 구매)에 의한 간접고용 효과로 나누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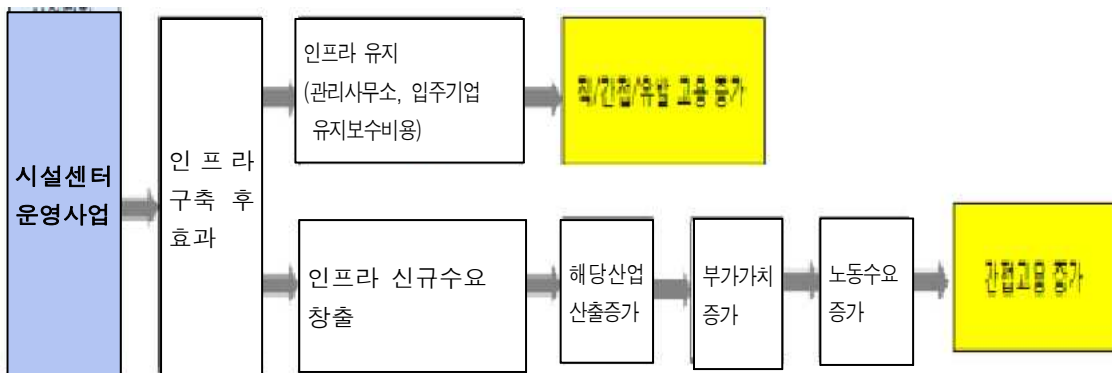
[그림 4-9] 인프라 구축(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12) 시설센터 운영 사업

- 시설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구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후 효과로서,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직, 간접고용 효과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신규수요 유발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시설센터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중의 인건비는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지급에 의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지출은 유발고용효과, 사업비 중의 시설 유지 보수 등의 금액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증가를 통해 유발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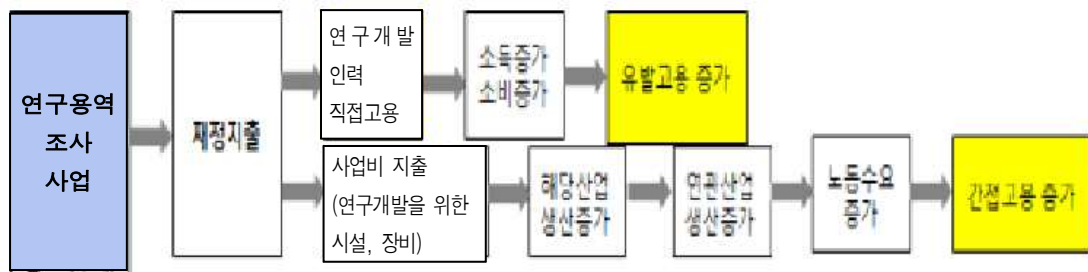
[그림 4-10] 시설 센터 운영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13) 연구용역 조사, 행사축제 홍보 및 기타의 사업

- 연구용역 조사 사업은 연구기관 등에 과제를 연구개발 과제를 의뢰하거나, 각종 통계 조사 사업을 포함함.
- 동 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에서 직접고용효과가 유발되며, 연구개발을 위한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고용효과를 창출함. 연구개발이나 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직접고용이 간접고용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임.
- 다만,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공이 기업 등의 생산에 기여하여 고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불확실성이 강하여 파악하기는 힘든 편임.

[그림 4-11] 연구개발 조사 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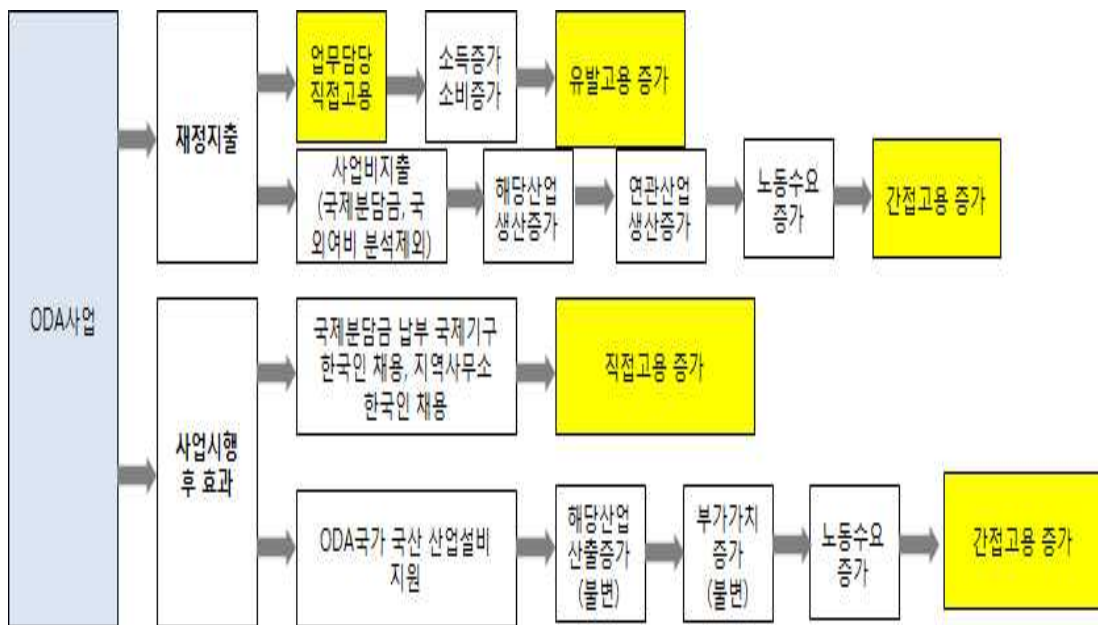
(14) 행사, 축제, 홍보 서비스 사업

- 행사 축제 홍보 서비스 사업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시정 및 지역 브랜드 홍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동 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에서 직접고용효과가 유발되며, 행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간접고용효과를 창출함.

(15) ODA 사업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공공이전 사업을 말함.
-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고용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관련 재정지출 과정에서 또는 국제기구, 국외사무소에 한국인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사업의 고용창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도 고용창출 효과는 사업목적 달성효과와 재정지출 효과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ODA사업 집행과정에서 국제분담금 납부와 연관된 국제기구 한국인 채용, 국외 지역사무소의 한국인 채용 등은 관련사업에 의한 직접고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ODA국가 국산 산업설비 지원시 국내 산업에서의 간접고용 증가요인이 됨.
- 다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효과인데 인건비, 사업비지출(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에 의해 직, 간접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 옴.

[그림 4-12] ODA사업의 고용창출 경로



## 제3절 직접고용 효과 계산

### 1. 개념 정리

□ 고용효과의 계산에 이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계산의 편의상 근로자를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각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상용직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
- 임시직 근로자 : 1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 통상 월급여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를 말함.
- 일용직 근로자 : 1일 이상의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근로자. 통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이나 일급 단위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함.

○ 취업계수(고용계수)와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sup>8)</sup>

- 취업자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을 말하며, 피용자란 순수 임금근로자 인원을 의미함
- 취업(고용)계수란 각 상품 또는 산업별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피용자) 수
- 취업(고용)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산업)을 포함한 모든 상품(산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피용자) 수

### 2. 사업별 직접고용효과의 계산

□ 직접고용효과는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와 사업의 고유목적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4) 고용표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 직접 고용 효과는 사업, 정책, 제도 그리고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직접적인 대상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사업운영비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여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함
- FTE 개념으로 근무자 수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자 수를 직접 조사하기 힘들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에서 고용자 수를 추정함.

□ 사업의 고유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경우

- 일자리 사업에서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사업의 고유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으므로 각 사업에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고용효과를 측정

□ 비재정사업

-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제도나 법의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기존 자료나 실태 및 의향조사를 통해 보완함

<표 4-2> 직접고용효과 정의 및 산출 방법

		내용
정의		-정부 정책 사업의 인건비 지출로 직접 고용한 고용자 수(직접고용)와 사업의 고유목적이 일자리 창출인 경우의 고용자 수(성과고용)
산출 방법	근로시간과 참여자수가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감안한 전업환산인원 개념의 고용자수로 산출
	인건비 지급액만 파악이 가능할 경우	- 지급된 인건비를 해당 산업의 평균 급여로 나누어 산출
	근로자 참여 현황이나 인건비 지급액이 파악이 안 될 경우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어야 하나 파악이 안되는 경우 산업연관표상 취업계수로 간접 산출

## (1)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은 사업 성과가 직접 고용효과로 나타남.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현실적으로 FTE 조사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을 적용
- 고용자 수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직접 고용자 수 =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 근로자 인원 수  
+ 일용직 근로자 인원 수
  - 직접 고용자 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모든 인원수를 포함
- 고용자 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FTE 방식을 이용
  - 인건비 지급액을 전업종 평균 연간 임금으로 나누어 추정  
직접 고용자 수 = 연간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임금
  - 연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 업종 평균 33.838백만 원 적용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고용자 수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참여자 혹은 일용직은 모든 근로자(참여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전\ 업종\ 연평균근로일수)$$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 업종 연평균근로일수 224일 적용

□ 고용자 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건비만 알고 있을 경우

- 인건비 지급액을 전업종 평균 연간 임금으로 나누어 추정

$$직접\ 고용자\ 수 = 연간\ 인건비\ 지급액 / 전\ 업종\ 연평균임금$$

- 연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 업종 평균 33.838백만 원 적용

□ FTE 기준 계산 예

- 계산 예 1)

직접 일자리사업에 8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5명은 5개월씩 참여하고, 3명은 2개월씩 참여한 경우

$$직접\ 고용자\ 수 = (5명 * 5개월 + 3명 * 2개월) / 12개월 = 2.58명$$

- 계산 예 2)

직접 일자리사업에 연인원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15명은 평균 60일씩 참여하고, 나머지 6명은 평균 90일씩 참여하였다.

$$직접\ 고용자\ 수 = (15명 * 60일 + 6명 * 90일) / 268.8일 = 5.36명$$

- 계산 예 3)

직접 일자리사업의 인원수를 조사하기 힘들다. 예산서에서 사업의 인건비는 총 1,130 백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직접\ 고용자\ 수 = 1,130\ 백만\ 원 / 33.838\ 백만\ 원 = 33.39명$$

<표 4-3> 직접일자리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조사 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고용자 수 조사 가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고용자 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건비 지급액으로 추정	FTE 방식을 이용	
FTE 기준	고용자 수 조사 가능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체업종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로 계산
	고용자 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건비 지급액으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임금 전체업종 연평균임금은 33.838백만원	

<표 4-4> 산업별 임금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2015년 말 기준)

산업분류	임금			월평균 근로 일수	월평균 총근로 시간
	연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단위	백만원	원	원	일	시간
전체평균	33.838	2,819,807	15,308	22.4	184.2
A. 농업,임업및어업(01~03)	32.027	2,668,911	14,442	23.1	184.8
B. 광업(05~08)	39.833	3,319,382	16,824	23.5	197.3
C. 제조업(10~33)	34.949	2,912,425	15,005	22.9	194.1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51.501	4,291,726	24,736	21.4	173.5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33.130	2,760,833	14,554	23.1	189.7
F. 건설업(41~42)	34.801	2,900,057	15,839	22.6	183.1
G. 도매및소매업(45~47)	31.912	2,659,333	14,422	22.6	184.4
H. 운수업(49~52)	31.159	2,596,589	14,158	22.2	183.4
I. 숙박및음식점업(55~56)	21.602	1,800,133	9,757	22.5	184.5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40.978	3,414,847	19,304	22.0	176.9
K. 금융및보험업(64~66)	46.268	3,855,634	22,045	21.8	174.9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24.826	2,068,845	10,459	20.4	197.8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43.796	3,649,648	20,561	22.0	177.5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28.059	2,338,289	12,827	22.3	182.3
P. 교육서비스업(85)	37.282	3,106,825	18,818	21.1	165.1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27.881	2,323,399	13,186	22.3	176.2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27.667	2,305,617	13,078	21.9	176.3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24.886	2,073,863	12,114	22.9	171.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N22&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N22&conn_path=I3)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 동 사업은 사업의 고유목적이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므로 훈련을 통해 취업한 인원은 성과고용효과로 이는 직접고용효과로 간주
- 사업예산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주로 관리인력, 강사 등의 채용에 소요되고 있음. 이는 직접고용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

$$\text{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 \text{훈련 취업(유지)자 수} + \text{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1) 훈련성과 고용효과(훈련 취업자 수)

훈련성과 고용효과는 훈련 취업자 수로 계산

- 정의: 훈련 취업유지자 수는 직업훈련에 참여(혹은 수료) 후 3개월 이내(혹은 훈련 참여 중) 취업한 취업자 수
- 현실적으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훈련 후 취업자(중도 취업자 포함) 통계를 사용함.

계산식

$$\text{훈련 취업자 수} = \text{훈련 인원 수} * \text{훈련인원 취업률}$$

○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경우:

$$\text{훈련 취업자 수} = \text{목표 훈련 인원 수} * \text{목표 취업률}$$

○ 사업 성과를 측정할 경우:

$$\text{훈련 취업자 수} = \text{훈련 수료 후 혹은 훈련 중에 취업한 인원 수}$$

- 훈련 인원 : 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하거나 중도 탈락한 인원 모두 포함.
- 훈련인원 취업률 : 훈련 인원 중 취업자 수
- 전년도 실적치 혹은 계획치를 기재

##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훈련성과 고용효과(훈련 취업유지자 수)

- 훈련성과 고용효과는 훈련 취업 유지자 수로 계산

- 정의: 훈련 취업유지자 수는 직업훈련에 참여(혹은 수료) 후 3개월 이내(혹은 훈련 참여 중) 취업한 취업자가 중 6개월 이상 취업이 유지된 인원 수
- 현실적으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훈련 후 취업자(중도 취업자 포함) 통계를 사용함.

- 계산식

$\text{훈련 취업 유지자 수} = \text{훈련 인원 수} * \text{훈련인원 취업률} * \text{훈련 취업자 고용유지율}$
---

- 훈련 인원 : 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하거나 중도 탈락한 인원 모두 포함.
- 훈련인원 취업률 : 훈련 인원 중 취업자 수
- 전년도 실적치 혹은 계획치를 기재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60% 적용
- 훈련 취업자 고용유지율: 훈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의 비율
- 훈련 취업자 고용유지율
  -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 / 훈련 취업자 수
- 훈련 취업자 고용유지율은 과적 실적치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40% 적용(강순희(2015),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참가 결정요인과 고용성과 분석')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5>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조사 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훈련성과 직접고용효과	$\text{훈련 취업 유지자 수} = \text{훈련인원수} * \text{훈련인원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인원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li> </ul>	
	고용자 수 조사 가능	$\text{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으로 추정	FTE 방식을 이용	
FTE 기준	훈련성과 직접고용효과	$\text{훈련 취업 유지자 수} = \text{훈련인원수} * \text{훈련인원취업률} * \text{훈련취업자 고용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인원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li> <li>- 훈련인원취업률: 실적치 사용. 자료가 없을 경우 60% 적용</li> <li>- 훈련취업자 고용유지율: 실적치 사용. 자료 부재시 40% 적용</li> </ul>	
	고용자 수 조사 가능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text{총 근로자 수} * \text{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text{개월}$
		일용직	$(\text{총 참여자 수} * \text{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text{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체업종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로 계산
	인건비 지급액으로 추정	$\text{인건비 지급액} / \text{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 (3)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사업

-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업알선 등을 통해 알선 취업자의 고용을 창출 및 유지하는 사업이므로 알선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취업알선의 성과고용으로 간주
- 동 사업은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을 통해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의 채용으로 직접 고용효과가 수반됨

고용서비스 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알선 취업(유지)자 수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1) 알선성과 고용효과(알선 취업자 수)

□ 취업알선의 성과 고용효과는 알선으로 취업한 취업자 수로 계산

- 정의: 알선 취업 유지자 수는: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

□ 계산식

알선 취업자 수 =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 성공률
-------------------------------

-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경우:

$$\text{알선 취업자 수} = \text{목표 알선 인원 수} * \text{목표 취업률}$$

- 사업 성과를 측정할 경우:

$$\text{알선 취업자 수} = \text{알선을 통해 취업한 인원 수}$$

- 알선 취업자 수 :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
- 취업 알선 인원 :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수
- 취업 성공률 : 취업 알선에 참여한 인원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실적 자료 사용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목표치 사용도 가능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1) 알선성과 고용효과(알선 취업유지자 수)

- 취업알선의 성과 고용효과는 알선으로 취업한 취업유지자 수로 계산

- 정의: 알선 취업 유지자 수는: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 중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 수

□ 계산식

알선 취업 유지자 수 =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 성공률 * 취업자 고용유지율
---

- 알선 취업 유지자 수 :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 중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 수
- 취업 알선 인원 :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수. 목표 알선 인원 수도 가능
- 취업 성공률 : 취업 알선에 참여한 인원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 수
- 알선 취업자 고용유지율: 알선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의 비율

- 알선 취업자 고용유지율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 / 알선 취업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실적 자료 사용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 알선 인원 수 및 알선 인원 취업률: 2016년도 목표치 적용
  - 알선 취업자 고용유지율: 2015년도 실적치 혹은 2016년도 목표치 적용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6> 고용서비스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알선성과 직접고용효과	알선 취업자 수 =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 성공률	
		- 취업알선 인원 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알선성과 직접고용효과	알선 취업 유지자 수 =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 성공률 * 취업자 고용유지율	
		- 취업알선 인원 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 취업 성공률: 실적치 사용. - 취업자 고용유지율: 실적치 사용. 자료 부재 시 60% 적용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 업종평균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 (4) 고용장려금 사업

-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 목적이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은 성과고용으로 간주.
- 사업에서는 예산에서 관리인력 등의 인건비 지출이 수반하므로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함

고용장려금 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장려금 취업(유지)자 수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1) 장려금 성과 고용효과(장려금 취업자 수)

□ 장려금 성과 고용효과는 고용장려금의 보조를 받고 취업한 취업자 수로 계산

- 정의: 장려금 취업자 수 : 장려금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인원

□ 계산식

장려금 취업자 수 = 지원 인원 수
---------------------

-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경우:

$$\text{장려금 취업자 수} = \text{목표 지원 인원 수}$$

- 사업 성과를 측정할 경우:

$$\text{장려금 취업자 수} = \text{장려금 지원 인원 수}$$

- 지원 인원 :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 즉 장려금 지급으로 취업한 인원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실적 자료 사용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목표치 적용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1) 장려금 성과 고용효과(장려금 취업유지자 수)

- 장려금 성과 고용효과는 고용장려금의 보조를 받고 취업한 취업유지자 수로 계산
- 정의: 장려금 취업 유지자 수 : 장려금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인원 중 취업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 수

□ 계산식

$\text{장려금 취업 유지자 수} = \text{지원대상 인원 수} * \text{지원 후 고용유지율}$
--

- 지원대상 인원 :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 즉 장려금 지급으로 취업한 인원
- 장려금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장려금 지원을 통한 취업자 중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의 비율
- 장려금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frac{\text{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 수}}{\text{장려금 지원으로 취업한 인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실적 자료 사용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 대상 인원 수: 2016년 목표치 적용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2015년도 실적치 혹은 2016년도 목표치 적용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7> 고용장려금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장려금 성과 직접고용효과		장려금 취업자 수 = 장려금 지원 인원 수 - 장려금 지원 인원 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장려금 성과 직접고용효과		장려금 취업 유지자 수 = 지원대상 인원 수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지원대상 인원 수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실적치 사용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 업종평균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 (5) 창업지원 사업

- 창업지원 사업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대상집단의 창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창업 성과 고용으로 간주
- 사업에서는 예산에서 관리인력 등의 인건비 지출이 수반하므로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함

창업지원 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창업 성과 취업자 수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1) 창업지원 성과 고용효과

□ 창업지원 성과 고용효과는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신규 고용자 수로 계산

- 정의: 창업 성과 취업자 수는 창업에 성공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계산식

창업 성과 취업자 수 = 창업지원 업체수 * 창업률*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경우:

창업 성과 취업자 수

$$= \text{목표 지원 업체 수} * \text{목표 창업률} * \text{기업 당 예상 고용자 수}$$

- 사업 성과를 측정할 경우:

창업 성과 취업자 수

$$= \text{창업 업체 수} * \text{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창업지원 업체 수 :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업체 수

- 창업률: 직간접적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실제 창업에 성공한 기업 수

- 창업률 = 창업에 성공한 기업 수 / 창업지원을 받은 대상자 수

-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1년간 생존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1년간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 고용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창업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목표치 사용

##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창업지원 성과 고용효과

- 창업지원 성과 고용효과는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신규 고용자 수로 계산

- 정의: 창업 성과 취업자 수는 창업에 성공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계산식

$$\text{창업 성과 취업자 수} = \text{창업지원 업체 수} * \text{창업률} * \text{1년 후 생존률} * \text{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창업지원 업체 수 :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업체 수
- 창업률: 직간접적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실제 창업에 성공한 기업 수
  - 창업률 = 창업에 성공한 기업 수 / 창업지원을 받은 대상자 수
- 1년 후 생존률: 창업에 성공한 기업에서 1년간 생존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1년 후 생존률 = 1년간 생존한 기업 수 / 창업에 성공한 기업 수
-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1년간 생존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1년간 생존한 기업들의 평균 고용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창업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창업률, 1년 후 생존률, 창업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 실적치 사용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8> 창업지원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창업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text{창업 성과 취업자 수} = \text{창업지원 업체 수} * \text{창업률} * \text{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창업률 :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FTE 기준	창업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text{창업 성과 취업자 수} = \text{창업지원 업체 수} * \text{창업률} * 1\text{년 후 생존률} * \text{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 창업지원 업체 수: 목표치 혹은 실적치 사용 - 창업률, 1년 후 생존률,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 실적치 사용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text{총 근로자 수} * \text{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text{개월}$ 일용직: $(\text{총 참여자 수} * 1\text{인당 평균 근로일 수}) / \text{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업종평균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 (6) 실업소득유지지원 사업

- 실업소득유지지원 사업은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공적자금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만을 돕는 역할을 함. 따라서 실업소득유지지원의 성과고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동 사업은 예산 상 인건비 지원으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발생함

실업소득유지지원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1) 실업소득유지지원의 성과 고용효과: 없음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9> 실업소득유지지원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실업소득유지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실업소득유지지원 성과 취업자 수 = 없음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고용자수 조사</td> <td>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로 추정</td> <td>FTE 방식</td> </tr> </table>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실업소득유지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실업소득유지지원 성과 취업자 수 = 없음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근로일수는 전업종평균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전체업종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사용		

## (7) 일자리인프라 구축 사업

- 일자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역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사업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직접 고용효과는 추정할 수 없음
-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관리 인력의 취업은 직접고용효과로 간주

일자리인프라 구축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10> 일자리인프라 구축 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일자리 인프라 성과 직접고용효과		없음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일자리 인프라 성과 직접고용효과		없음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small>연평균근로일수는 해당 서비스의 업종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종을 구분. 업종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월평균근로일수 22.3일 * 12 = 267.6일) 혹은 전체 평균(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을 적용</small>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small>연평균임금은 업종구분이 가능하면 해당 업종의 통계 적용 업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임금 27.881백만원) 혹은 전체평균(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적용</small>	

## (8)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

-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교통, 문화, 산업인프라, 환경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함.
- 사회간접자본 건설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에 의한 관리 및 보조인력, 노무인력(일용직)의 채용이 발생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노무인력(일용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노무인력(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노무인력(일용직) 연인원 수 / (건설업 월평균 근로일 수\*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 노무직 월평균 근로일수 22.6일 적용

#### 2) 인건비로 계산

- 직접고용자 수 = 사업 예산의 인건비 / 건설업 연평균 임금
- 건설업 연평균 임금은 34.801백만원

(다) 대안적 방식: 공사비 규모로 계산

□ 공사비 규모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직접고용자 수를 계산  
○ 이 경우 정부가 건설업에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건설업의 생산이 최소한 공사 금액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건설업의 생산액(공사금액)에 취업계수를 나누어 직접고용자 수를 계산할 수 있음.

○ 직접고용자 수 = 총공사금액(십억원) \* 취업계수

- 총공사금액이란 순수하게 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토지보상비는 제외

○ 대구시의 건설 및 토목업의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대구시 건설(상품)취업계수 =

$$\text{건설(상품) 취업계수(2014, 전국)} \times \frac{\text{대구시 건설(상품) 취업계수(2013, 지역)}}{\text{전지역 건설(상품) 취업계수(2013, 지역)}}$$

-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건설업 : 8.0043 적용

- 토목건설 : 8.3941 적용



**<표 4-11>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노무직(일용직) : 노무인력(일용직) 연인원 수 / (건설업 연평균 근로일 수)
		인건비로 추정	건설업노무직 연평균 근로일 수 = 건설업 월평균 근로일 수 (22.6일/명) * 12 개월 = 271.2 일/명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건설업 연평균임금 : 34.801 백만원 적용
대안적 방식	공사비 규모만 알고 있을 경우		직접고용자 수 = 총공사금액(십억원) * 취업계수
			취업계수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건설 : 8.0043 적용 토목건설 : 8.3941 적용 총공사금액에는 토지보상비는 제외

## (9)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 사업

-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및 공공 기업 및 기관 등을 유치, 지원, 신설, 확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 신설, 확장 지원을 통해 유입된 기업(혹은 기관)에서 발생한 일자리는 동 사업의 성과 고용효과로 간주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 직접고용효과 = 유치신설확장 기업의 취업자 수
--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성과 고용효과는 유치신설확장된 기업에서 당해 연도에 채용한 취업자 수로 계산

### □ 계산식

#### 1) 유치 및 신설 기업

- 유치신설 기업의 취업자 수는 연간 단위로 계산  
- 수년 단위의 MOU를 맺은 기업은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MOU 기준:

$$\text{유치신설 기업의 취업자 수} = \text{MOU 기업 수} * \text{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혹은 업체당 연간 채용 계획 인원 수)}$$

#### 실제 가동 기준:

$$\text{유치신설 기업의 취업자 수} = \text{가동 기업 수} * \text{가동 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

- 유치신설 지원 기업 수: 기업유치신설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수. 유치 신설을 위해 MOU를 맺은 기업 수 혹은 가동 기업 수
- 업체 당 평균 취업자 수: MOU를 맺은 기업의 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기업 당 연간 채용계획 인원 수) 혹은 가동 기업의 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

2) 확장 기업

확장 기업의 취업자 수  
 = 당해연도 확장 기업 수 \* 기업 당 추가 채용 인원 수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목표치 혹은 계획치를 적용

**<표 4-12>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 성과 직접고용효	유치신설 기업	MOU 기준: $\text{직접고용자 수} = \text{MOU 기업 수} * \text{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혹은 기업 당 연간 채용계획 인원 수)}$ 가동 기준: $\text{직접고용자 수} = \text{가동 기업 수} * \text{가동 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 - 연간 단위로 계산
	확장기업	확장 기업의 직접고용자 수 $= \text{당해연도 확장 기업 수} * \text{업체 당 추가 채용 인원 수}$

## (10) 기업지원·산업육성 사업

- 기업육성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거나 R&D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기업지원 성과 고용으로 간주
- 사업에서는 예산에서 관리인력 등의 인건비 지출이 수반하므로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함

기업지원 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text{기업지원 성과 취업자 수} + \text{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1) 기업지원 성과 고용효과

- 기업지원 성과 고용효과는 기업 지원 후의 고용자 수에서 기업 지원 전의 고용자 수를 차감한 효과에서 정부 기여분을 곱한 것으로 계산

### □ 계산식

기업지원 성과 취업자 수 =

$$(\text{지원 후의 고용자 수} - \text{지원 전의 고용자 수}) * \text{정부기여율}$$

- 정부 기여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결정
  - 해당 업체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거나
  - 과거의 실적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 기여율을 100%로 간주
- 지원 전/후의 고용자 수는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기업의 의견 수렴

### 2) 사업관리 인력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FTE 방식, 인건비 기준 계산 방식 등 이용

**<표 4-13> 기업육성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기업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기업지원 성과 취업자 수 = (지원 후 고용자 수 - 지원 전 고용자 수) * 정부 기여율	
		정부 기여율은 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자료가 없으면 100%로 설정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기업지원 성과 직접고용효과	기업지원 성과 취업자 수 = (지원 후 고용자 수 - 지원 전 고용자 수) * 정부 기여율	
		정부 기여율은 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자료가 없으면 100%로 설정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 근로일 수 = 전업종평균 월평균 근로일 수 (22.4일/명) * 12 개월 = 268.8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전업종평균 연평균 임금: 33.858백만원		

## (11) 복지지원서비스 사업

-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은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복지,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 참여한 대인 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은 성과 고용으로 간주
- 동 사업은 사업 목적이 복지, 문화 등의 지원에 있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과 구분
-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관리 인력의 취업은 직접고용효과로 간주

복지지원서비스의 직접고용효과 =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 + 직접고용자 수(사업관리인력)
---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1) 대인복지서비스 성과 고용효과

대인 복지서비스 성과 고용효과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취업자 수로 계산

- 정의: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대인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인원 수

계산식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 = 복지 지원 서비스 참여자 수
--------------------------------

-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는 복지 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수로 계산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목표치 혹은 계획치를 적용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1) 대인복지서비스 성과 고용효과

□ 대인 복지서비스 성과 고용효과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취업자 수로 계산

- 정의: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대인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인원 수

□ 계산식

$$\text{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 = (\text{서비스제공 인력 수} * \text{1인당 일평균 근무시간} * \text{1인당 평균 근무일 수}) / (\text{사회복지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시간} * 12)$$

-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는 사업 참여자들의 총근로시간을 사회복지서비스업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
- 서비스제공 인력 수: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대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수. 즉 사업 참여자 수
- 1인당 일평균 근무시간: 사업 참여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
- 1인당 평균 근무일 수: 사업 참여자의 참여일 수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시간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

□ 자료

- 2016년 연말 기준 종료되는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목표치 혹은 계획시를 적용
- 사회복지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고용부 자료를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업 연평균 근로시간 = 172.2시간/월 \* 12 = 1,442.2 시간/연

2) 관리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고용효과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표 4-14> 복지지원서비스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복지지원서비스 성과 직접고용효과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 = 서비스 사업 참여자 수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복지지원서비스 성과 직접고용효과	서비스 제공 취업자 수 = (서비스제공 인력 수 * 1인당 일평균 근무시간 * 1인당 평균 근무일 수) / (사회복지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시간*12)	
		- 서비스제공 인력 수, 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 1인당 평균 근무일 수: 목표치 사용 - 사회복지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시간=172.2시간/월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총 참여자 수 * 1인당 평균 근로일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인건비로 추정	연평균근로일수는 전업종평균 월평균근로일수 22.4일 * 12 = 268.8일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은 사회복지업 연평균임금 27.881 백만원 사용	



## (12) 시설센터운영 사업

- 시설센터운영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구축된 시설 등의 상시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인건비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가 창출

시설센터운영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노무인력(일용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노무인력(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노무인력(일용직) 연인원 수 / (시설관리업 월평균 근로일 수\*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수 223일 적용

2) 인건비로 계산

- 직접고용자 수 = 사업 예산의 인건비 / 연평균 임금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연평균임금: 28.059백만원

<표 4-15> 시설센터운영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시설관리업 연평균 근로일 수
		시설관리업 연평균 근로일 수 = 시설관리업 월평균 근로일 수 (22.3일/명) * 12 개월 = 267.6 일/명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연평균임금: 28.059백만원

### (13) 연구용역조사 사업

- 연구용역조사 사업은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과제를 의뢰하거나, 특정 기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조사사업 증으로 예산 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가 창출

연구용역조사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일용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일용직 연인원 수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 수\*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수 22일 적용

##### 2) 인건비로 계산

- 연구용역조사 사업 직접고용자 수 =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 연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고용부)의 전문과학기술및기술서비스업 연평균임금 43.796백만원 적용

<표 4-16> 연구용역조사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연구조사업 연평균 근로일 수
		인건비로 추정	연구조사업 연평균 근로일 수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 수 (22일/명) * 12개월 = 264 일/명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연평균 임금: 43,796백만원

## (14) 행사축제홍보서비스 지원 사업

- 행사축제홍보서비스 지원 사업은 시정모니터링, 행사 및 축제, 안전문화, 산업기술, 국제회의 유치 등의 다양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의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 일자리가 창출

행사축제홍보서비스 지원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frac{(\text{총 근로자 수} * \text{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12\text{개월}}$$
- 일용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frac{\text{일용직 연인원 수}}{(\text{사업지원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 수} * 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수 22.3일 적용

2) 인건비로 계산

- 행사축제홍보서비스 지원 사업 직접고용자 수 =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 연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고용부)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연평균 임금 28.059백만원 적용

**<표 4-17> 행사축제 홍보서비스지원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 근로일 수 = 사업지원서비스업 월평균 근로일 수 (22.3일/명) * 12 개월 = 267.3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사업지원서비스업 연평균 임금: 28.059 백만원		

## (15) 국제협력(ODA) 사업

-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관리인력 및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 일자리가 창출

국제협력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일용직은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일용직 연인원 수 / (월평균 근로일 수\*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업종평균 월평균 근로일수 224일 적용

#### 2) 인건비로 계산

- 국제협력 사업 직접고용자 수 =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 연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고용부)의 전업종평균의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적용

<표 4-18> 국제협력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인건비로 추정	연평균 근로일 수 = 전업종평균 월평균 근로일 수 (22.4일/명) * 12 개월 = 268.8일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전업종평균 연평균 임금: 33.858백만원



## (16) 기타 사업 및 분류불명

- 기타 사업 및 분류불명은 관리인력 및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지출을 통해 직접 일자리가 창출

기타 사업의 직접고용효과 = 직접고용자 수

-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관리인력 및 보조인력 등의 채용을 통한 직접 일자리 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 참여자 기준 계산 방식

- 직접고용자 수 = 상용직 고용자 수 + 임시직 고용자 수 + 일용직 고용자 수

### (나) FTE 기준 계산 방식

#### 1) 취업 인원 수로 계산

- 상용직 직접 고용자 수 = 근로자 인원 수
- 임시직은 모든 근로자들의 총 근로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임시직 직접 고용자 수 =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 일용직은 근로자들의 총 근로 일 수를 1인당 연간 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  
일용직 직접 고용자 수 = 일용직 연인원 수 / (월평균 근로일 수\*12)  
- 월평균근로일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업종평균 월평균 근로일수 224일 적용

#### 2) 인건비로 계산

- 국제협력 사업 직접고용자 수 =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 연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고용부)의 전업종평균의 연평균임금 33.838백만원 적용

<표 4-19> 기타사업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고용효과 및 조사방식			계산식
참여자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로 추정	FTE 방식
FTE 기준	인건비 지출 직접고용효과	고용자수 조사	상용직: 근로자 인원 수
			임시직: (총 근로자 수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월 수) / 12개월
			일용직 : 일용직 연인원 수 / 연평균 근로일 수
			연평균 근로일 수 = 전업종평균 월평균 근로일 수 (22.4일/명) * 12 개월 = 268.8일
	인건비로 추정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임금  전업종평균 연평균 임금: 33.858백만원	

### 3. 직접일자리 수 계산의 종합

<표 4-20> 직접일자리 수 계산식의 종합(참여자 기준)

사업명	계산 방식	계산식
1) 직접 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2) 직업능력 개발사업	훈련취업자	훈련인원 수 * 훈련인원 취업률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3) 고용서비스	알선취업자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성공률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4) 고용장려금	장려금취업자	지원대상인원 수 목표: 목표 지원 인원 수, 성과: 지원 인원 수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5) 창업지원	창업기업취업자	지원업체수 * 창업률 * 창업기업당 평균 고용자 수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6) 실업소득 유지지원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7) 일자리인프라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연평균 임금 (사회복지서비스업:27.881백만원, 전업종 평균:33.838백만원)
8)사회간접자본	노무,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건설업 연평균 임금 (34.801 백만원)
	(대안방식)	총공사금액(십억원) * 취업계수 취업계수: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 8.0043 토목건설 : 8.3941
9) 기업유치 신설확장지원	유치신설기업 취업자	- MOU 기업 수 * 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 (업체 당 연간 채용계획 인원 수) - 가동기업 수 * 가동기업 당 평균 취업자 수
	확장기업 취업자	당해 연도 확장기업 수 * 기업당 추가 채용 인원 수
10) 기업육성 지원	지원기업 취업자	(지원 후 고용자 수 - 지원 전 고용자 수) * 정부 기여율
	관리, 노무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사업명	계산 방식	계산식
11) 복지지원 서비스	서비스제공자	복지 지원 서비스 참여자 수
		인건비 지급액 / 사회복지업 연평균 임금 (27.881 백만원)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사회복지업 연평균 임금 (27.881 백만원)
12) 시설센터 운영지원	관리, 노무 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13) 연구용역 조사	연구용역조사인력	연구 및 조사인력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연평균 임금 (43,796백만원)
14) 행사축제 홍보지원	행사축제홍보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사업지원서비스업 연평균 임금 (28.059 백만원)
15) 국제협력 (ODA)	사업수행, 조사연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16) 기타	관리인력	근로자 인원 수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노무인력	인건비 지급액 / 전업종 연평균 임금 (33.838백만원)

**<표 4-21> 직접일자리 수 계산식의 종합(FTE 기준)**

사업명	대상인력	계산식
1)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채용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사업참여자	(참여자 수 * 평균 근무일 수) / 연평균 근무일수
2)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취업자	훈련인원 수 * 훈련인원 취업률 * 훈련취업자 고용유지율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3) 고용서비스	알선취업자	취업알선 인원 수 * 취업성공률* 알선 취업자 고용유지율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4) 고용장려금	장려금취업자	지원대상인원 수* 지원후 1년 고용유지율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5) 창업지원	창업기업취업자	지원업체수 * 창업률 * 1년 후 생존률 * 창업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6) 실업소득유지지원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7) 일자리인프라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8) 사회간접자본	노무인력	노무인력 연인원 수 / 건설업 연평균근로일수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9) 기업유치신설확장 지원	지원기업의 신규고용자	지원기업수*업체당 채용계획인원수*당년도가동기업비율
	시설공사 노무인력	노무인력 연인원 수 / 건설업 연평균 근로일 수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10) 기업육성지원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노무인력	인건비지급액 / 전산업평균 연평균임금
11) 복지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인력수*1인당 일평균근로시간*1인당 평균근로일 수) / 사회복지서비스업 연평균 근로시간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12) 시설센터운영지원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노무인력	노무인력 연인원 수 / 시설관리업 연평균근로일수
13) 연구용역조사	연구용역조사 인력	인건비지급액 / 연구용역조사업의 연평균임금
14) 행사축제홍보지원	행사축제홍보 인력	인건비지급액 /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연평균임금
15) 국제협력(ODA)	사업수행,조사 연구인력	인건비지급액 / 전산업평균의 연평균임금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16) 기타	관리인력	상용근로자 수 + 임시근로자 수(FTE) + 일용근로자 수(FTE)
	노무인력	인건비지급액 / 전산업평균 연평균임금

## 제4절 간접고용 효과 계산

□ 간접고용 및 유발고용 효과는 사업비 지출을 통해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의미함.  
여기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업비 지출의 고용유발효과 측정 원리와 실제 계산과정을 설명

○ 간접 및 유발고용자 수는 FTE 개념으로 측정

### 1. 간접고용 효과 측정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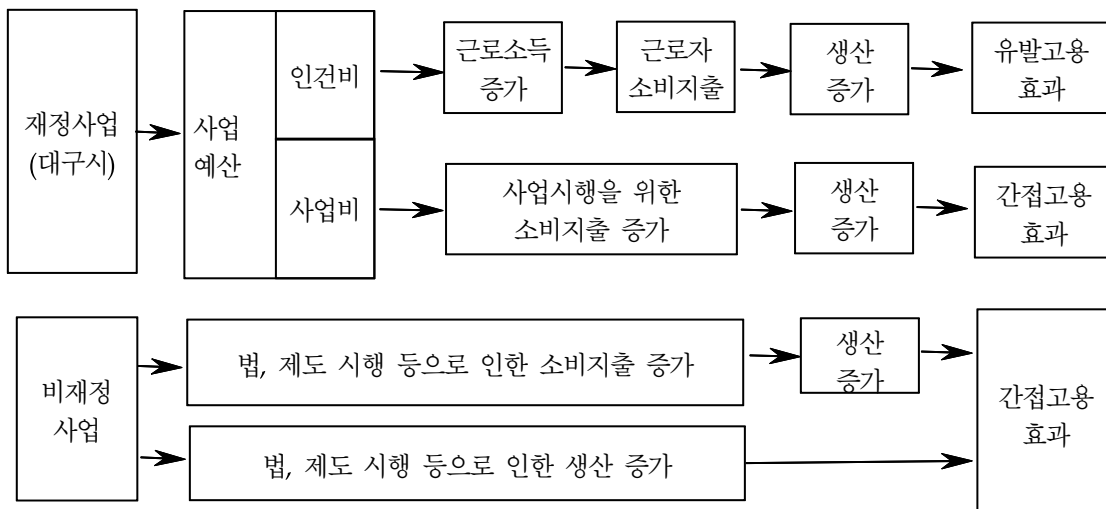
□ 간접고용효과는 대구시에서 전개하는 각종 재정, 비재정사업이나, 정책, 법 그리고 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구지역이나 기타지역의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임.

○ 간접고용 효과는 사업 집행 시 서비스 구입 및 사업 운영비 지출 등에 의해 파급되는 효과와 임금지급 등에 의해 근로자의 소비 지출로 파급되어 유발되는 고용 효과를 말함

- '협회의 간접고용 효과: 사업집행에서 사업비(인건비 제외) 지출에 의해 파급되는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취업)자 수

- 유발고용 효과: 사업집행에서 인건비 지급에 의해 임금소득이 증가한 근로자의 소비 지출이 생산과급과정을 거쳐 유발하는 고용자(취업자) 수

[그림 4-13] 간접고용효과 발생 과정



- 간접고용효과 및 유발고용효과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지출 항목별 (소비지출 항목)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하고 측정
- 취업유발계수란 사업비 지출액(백만원) 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

간접고용효과 = 사업비 지출액 \* 지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유발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액 \* 지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표 4-22> 간접고용효과(Indirect jobs) 정의 및 산출 방법**

	정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고용은 대구시의 사업비 지출(혹은 근로자 임금소득의 지출)이 산업수요 증가로 파급되어 간접적으로 증가되는 고용자(취업자) 수</li> <li>- 간접고용은 협의의 간접고용과 유발고용으로 구분</li> <li>- 협의의 간접고용: 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의 지출에 의해 산업수요가 증가하고 파급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고용자(취업자) 수</li> <li>- 유발고용: 사업비 예산에서 지급한 인건비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자 소비지출에 의한 생산증가로 발생하는 고용(취업)자 수</li> </ul>
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li> <li>○ (간접고용) 대구시의 예산 지출(인건비 제외)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대구시와 이외지역의 취업자 수를 도출</li> <li>○ (유발고용) 대구시 예산 중 인건비 지출에 의한 근로자 임금소득 지출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대구시와 이외지역의 취업자 수를 도출</li> </ul>

## 2. 지역산업연관분석과 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지역산업연관분석과 고용효과 도출
  - 산업연관분석은 경제내의 소비 지출이나 외생적 생산 변동이 파급과정을 거쳐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임.
  - 산업연관분석은 경제 내에서 투입과 산출 혹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는 일반균형 원리를 전제로 모든 생산물의 총생산과 총수요가 일치함을 가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는 중간투입(중간수요), 부가가치, 최종수요 및 총투입(총산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표인 고용표에는 취업자와 고용자가 제시되고 있음
- 대구시의 간접고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2 지역(대구지역과 이외지역), 2 상품(산업)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가정

[그림 4-14] 대구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

			중간수요: (산업)(j)				최종수요	총산출액 i(=j)
			대구지역 (D)		이외지역 (R)			
			1	2	1	2		
중 간 투 입  (상품) (i)	대구 지역 (D)	1	$X_{11}^{DD}$	$X_{12}^{DD}$	$X_{11}^{DR}$	$X_{12}^{DR}$	$Y_1^D$	$X_1^D$
		2	$X_{21}^{DD}$	$X_{22}^{DD}$	$X_{21}^{DR}$	$X_{22}^{DR}$	$Y_2^D$	$X_2^D$
	이외 지역 (R)	1	$X_{11}^{RD}$	$X_{12}^{RD}$	$X_{11}^{RR}$	$X_{12}^{RR}$	$Y_1^R$	$X_1^R$
		2	$X_{21}^{RD}$	$X_{22}^{RD}$	$X_{21}^{RR}$	$X_{22}^{RR}$	$Y_2^R$	$X_2^R$
수입			$M_1^D$	$M_2^D$	$M_1^R$	$M_2^R$		
부가가치			$V_1^D$	$V_2^D$	$V_1^R$	$V_2^R$		
총투입액 j(=i)			$X_1^D$	$X_2^D$	$X_1^R$	$X_2^R$		
고용량 (취업량)	L		$L_1^D$	$L_2^D$	$L_1^R$	$L_2^R$		

- $X_{ij}^{DD}$ ,  $X_{ij}^{DR}$ ,  $X_{ij}^{RD}$ ,  $X_{ij}^{RR}$  은 중간투입행렬로 상첨자는 지역을 표시하고, 하첨자는 상품(산업)을 의미함. 즉,  $X_{ij}^{DD}$ 은 대구지역의 i 산업 상품이 대구지역의 j 산업에 투입된 금액,  $X_{ij}^{DR}$ 는 대구지역의 i 산업 상품이 다른지역의 j 산업에 투입된 금액,  $X_{ij}^{RD}$ 는 다른 지역의 i 산업 상품이 대구지역의 j 산업에 투입된 금액,  $X_{ij}^{RR}$  은 다른지역의 i 산업 상품이 다른지역의 j 산업에 투입된 금액임
- Y는 최종수요, X는 총산출, M은 수입, V는 부가가치를 의미
- $L_j^D$  는 대구지역 j 산업의 고용자(취업자) 수,  $L_j^R$  은 기타지역 j 산업의 고용자(취업자) 수를 의미



- 상기의 지역산업연관 구조를 이용하여 대구지역의 소비지출이 대구 지역과 이외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행렬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아래 수식은 사업비 지출(혹은 임금소득의 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대구지역과 이외 지역의 고용유발효과(간접고용 및 유발고용)를 나타냄

$$\begin{bmatrix} \Delta L^D \\ \Delta L^R \end{bmatrix} = \begin{bmatrix} l^D & 0 \\ 0 & l^R \end{bmatrix} \left[ \begin{bmatrix} I & 0 \\ 0 & I \end{bmatrix} - \begin{bmatrix} A^{DD} & A^{DR} \\ A^{RD} & A^{RR} \end{bmatrix} \right]^{-1} \begin{bmatrix} \Delta Y^D \\ 0 \end{bmatrix}$$

- $\begin{bmatrix} \Delta L^D \\ \Delta L^R \end{bmatrix}$  는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의 고용유발효과(유발취업자 수)로 이 분석에서는 간접고용 및 유발고용을 의미
- $\begin{bmatrix} l^D & 0 \\ 0 & l^R \end{bmatrix}$  는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의 취업계수행렬,  $\left[ \begin{bmatrix} I & 0 \\ 0 & I \end{bmatrix} - \begin{bmatrix} A^{DD} & A^{DR} \\ A^{RD} & A^{RR} \end{bmatrix} \right]^{-1}$  는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연결한 국산 역행렬
- 로 이 둘을 곱한  $\begin{bmatrix} l^D & 0 \\ 0 & l^R \end{bmatrix} \left[ \begin{bmatrix} I & 0 \\ 0 & I \end{bmatrix} - \begin{bmatrix} A^{DD} & A^{DR} \\ A^{RD} & A^{RR} \end{bmatrix} \right]^{-1}$  는 취업유발계수를 의미
- $\begin{bmatrix} \Delta Y^D \\ 0 \end{bmatrix}$  는 대구시의 재정 비재정사업으로 발생한 민간소비지출 변화

□ 전국산업연관분석과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연결한 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전국산업연관분석에서는 2014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역산업연관표는 2010년에 발행되어 최근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산업연관분석에서 도출된 전국취업유발계수(2014년)를 지역취업유발계수(2010년)의 비중(대구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배분함.

$$\text{대구 취업유발계수} = \text{전국취업유발계수(전국표)} \times \frac{\text{대구취업유발계수(지역표)}}{\text{전국취업유발계수(지역표)}}$$

□ 상기의 방식으로 도출한 소비지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음.

- 예를 들어, 대구시의 예산 지출사업의 사업비에서 8번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100만원일 때, 전국적으로 유발되는 간접고용자 수는 0.01930명이며, 대구지역에 발생하는 간접고용자 수는 0.00710명, 기타지역에 발생하는 간접고용자 수는 0.1220명임을 의미함

<표 4-23>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의 취업유발계수(명/백만원)

상품 코드	상품명	전국	대구지역	기타지역
1	작물	0.04510	0.04356	0.00154
2	축산물	0.02092	0.01329	0.00763
3	임산물	0.03066	0.02971	0.00095
4	수산물	0.01101	0.00640	0.00460
5	농림어업 서비스	0.01555	0.01141	0.00414
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01103	0.00000	0.01103
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00791	0.00694	0.00097
8	식료품	0.01930	0.00710	0.01220
9	음료품	0.01097	0.00536	0.00560
10	담배	0.00671	0.00328	0.00343
11	섬유 및 의복	0.01065	0.00751	0.00314
12	가죽제품	0.01230	0.00861	0.00368
13	목재및목제품	0.01265	0.00801	0.00464
14	펄프 및 종이제품	0.00986	0.00483	0.00504
15	인쇄 및 복제	0.01857	0.01344	0.00513
16	석탄 및 석유제품	0.00197	0.00108	0.00089
17	기초화학물질	0.00301	0.00148	0.00153
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552	0.00367	0.00185
19	화학섬유	0.00537	0.00262	0.00276
20	의약품	0.00849	0.00586	0.00263
21	비료 및 농약	0.00644	0.00313	0.00330
22	기타 화학제품	0.00737	0.00412	0.00325
23	플라스틱제품	0.00924	0.00558	0.00366
24	고무제품	0.00824	0.00470	0.00354
25	유리 및 유리제품	0.00646	0.00476	0.00170
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01049	0.00532	0.00517
27	철강1차제품	0.00462	0.00240	0.00222
28	철강가공제품	0.00587	0.00212	0.00374
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0.00491	0.00325	0.00166
30	금속 주물	0.00815	0.00398	0.00418
31	금속제품	0.00851	0.00481	0.00370
32	일반목적용기계	0.00969	0.00524	0.00445
33	특수목적용기계	0.00979	0.00537	0.00442
34	전기장비	0.00834	0.00485	0.00349
35	반도체	0.00362	0.00230	0.00132
36	전자표시장치	0.00390	0.00251	0.00139
37	기타 전자부품	0.00821	0.00426	0.00395
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0494	0.00338	0.00156
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00498	0.00328	0.00170
40	가정용 전기기기	0.01001	0.00575	0.00426
41	정밀기기	0.00908	0.00513	0.00395

상품 코드	상품명	전국	대구지역	기타지역
42	자동차	0.00863	0.00489	0.00374
43	선박	0.00820	0.00383	0.00437
44	기타 운송장비	0.00744	0.00418	0.00326
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356	0.01015	0.00341
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00325	0.00204	0.00121
47	가스, 증기 및 온수	0.00074	0.00051	0.00023
48	수도	0.00612	0.00439	0.00174
49	폐수처리	0.01046	0.00716	0.00330
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0.01243	0.00987	0.00256
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01481	0.00996	0.00485
52	토목건설	0.01414	0.00956	0.00458
53	도소매서비스	0.02097	0.01801	0.00296
54	육상운송서비스	0.02524	0.02305	0.00219
55	수상운송서비스	0.00256	0.00151	0.00104
56	항공운송서비스	0.00311	0.00184	0.00127
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0.01460	0.01175	0.00285
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2632	0.01874	0.00758
59	통신서비스	0.01180	0.00711	0.00469
60	방송서비스	0.01293	0.00994	0.00299
61	정보서비스	0.01193	0.00826	0.00366
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0.01379	0.01092	0.00287
63	출판서비스	0.01912	0.01549	0.00363
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01435	0.00935	0.00500
65	금융서비스	0.00956	0.00755	0.00201
66	보험서비스	0.01454	0.01052	0.00402
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01849	0.01628	0.00221
68	주거서비스	0.00212	0.00122	0.00090
69	부동산서비스	0.01322	0.01209	0.00113
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01125	0.00877	0.00248
71	연구개발	0.01302	0.00937	0.00365
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2361	0.02107	0.00254
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01509	0.01341	0.00168
74	사업지원서비스	0.02870	0.02645	0.00225
75	공공행정 및 국방	0.01138	0.00969	0.00169
76	교육서비스	0.01841	0.01634	0.00207
77	의료 및 보건	0.01443	0.01107	0.00336
78	사회복지서비스	0.04103	0.03662	0.00441
79	문화서비스	0.02143	0.01715	0.00428
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0.01620	0.01382	0.00239
81	사회단체	0.02760	0.02266	0.00494
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03019	0.02739	0.00281
83	평균	0.01253	0.00920	0.00333

□ 예산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도출

- 산업연관분석의 중분류에 따른 소비지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고용효과 측정  
을 위한 예산서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로 전환함.
- 예산서 항목과 각 항목의 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음

<표 4-24> 예산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명/백만원)

구분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상품 분류	전국	대구 지역	기타 지역
인건비 및 현금 급여	인건비 지급				
	현금 급여				
경상비	전기, 가스, 난방, 수도비	전기가스 중기(대)	0.00337	0.00231	0.00106
	시설보수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02250	0.01867	0.00383
	숙박비,식음료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대)	0.02632	0.01874	0.00758
	교통비,여비	육상운송서비스/해상운송 서비스	0.01626	0.01419	0.00207
	우편,전화료	통신서비스	0.01632	0.01281	0.00352
	간식비	식료품 / 음료품	0.01513	0.00623	0.00890
설비 장비 구입비	일반목적용기계	일반목적용기계	0.00969	0.00524	0.00445
	특수용도기계	특수목적용기계	0.00979	0.00537	0.00442
	전기장비	전기장비	0.00834	0.00485	0.00349
	반도체, 전자표시 장치, 전자부품	반도체/전자표시장치	0.00524	0.00302	0.002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0494	0.00338	0.00156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00498	0.00328	0.00170
	가정용전기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0.01001	0.00575	0.00426
	정밀기기	정밀기기	0.00908	0.00513	0.00395
	자동차	자동차	0.00863	0.00489	0.00374
	선박	선박	0.00820	0.00383	0.00437
	기타운송장비	기타 운송장비	0.00744	0.00418	0.00326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356	0.01015	0.00341
	장비임대료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01125	0.00877	0.00248

구분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상품 분류	전국	대구 지역	기타 지역
원재료 구입비	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	농림수산물(대)	0.02465	0.02087	0.00377
	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01103	0.00000	0.01103
	금속 및 비금속광물	금속 및 비금속광물	0.00791	0.00694	0.00097
	식료품	식료품	0.01930	0.00710	0.01220
	음료품	음료품	0.01097	0.00536	0.00560
	섬유 및 의복,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대)	0.01147	0.00806	0.00341
	목재및목제품	목재및목제품	0.01265	0.00801	0.00464
	펄프 및 종이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0.00986	0.00483	0.00504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0.00197	0.00108	0.00089
	기초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의약품, 비료 및 농약, 기타 화학제품	화학제품(대)	0.00604	0.00348	0.00256
	플라스틱, 고무제품	플라스틱/고무	0.00874	0.00514	0.00360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대)	0.00847	0.00504	0.00343
	철강1차제품, 철강가공제품,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금속 주물	1차 금속제품(대)	0.00589	0.00294	0.00295
	금속제품	금속제품(대)	0.00851	0.00481	0.00370
사업지원 서비스	출판물, 교제 등 구입비	출판서비스	0.01857	0.01344	0.00513
	연극, 음악, 신문, 영화 등 구입비	문화서비스, 출판서비스, 영상오대오물 제작 및 배급	0.01830	0.01399	0.00430
	부동산 임차료	부동산서비스	0.01322	0.01209	0.00113
	연구개발비 (교재개발비 포함)	연구개발	0.01302	0.00937	0.00365

구분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상품 분류	전국	대구 지역	기타 지역
	마케팅,홍보,창업 지원/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과학기술관련전문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0.01610	0.01342	0.00269
	교육비 및 인력양성	교육서비스	0.01841	0.01634	0.00207
	오락/스포츠/사회단체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사회단체	0.02190	0.01824	0.00366
	사무용품구입비(문방구류 등)	기타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0.01356	0.01015	0.00341
SOC(토목) 건설 (건설비)	교통시설/토목/전력 통신시설	토목건설	0.01414	0.00956	0.00458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01481	0.00996	0.00485
사회복지, 의료 및 공공행정 지출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0.04103	0.03662	0.00441
	의료보건/위생서비스 지원	의료 및 보건	0.01443	0.01107	0.00336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	0.02760	0.02266	0.00494
	공공행정및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0.01138	0.00969	0.00169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것	분류불명	전산업평균	0.01253	0.00920	0.00333
부동산구입, 인허가비 등	토지, 건물구입 및 보상비, 인허가비, 국제분담금, 국외여비 등	분석효과 제외	0.00000	0.00000	0.00000
총지출액	총지출액				

**<표 4-25> 고용효과 분석용 예산서의 구성**

구분	지출항목	구성 품목
인건비 및 현금 급여	인건비 지급	인건비, 수당 등
	현금 급여	대인 현금 급여, 전문가 수당 등
경상비	전기, 가스, 난방, 수도비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
	시설보수비	건축보수, 시설보수, 장비 및 기자재 수리서비스
	숙박비, 식음료비	일반음식점, 주점, 기타음식점, 숙박
	교통비, 여비	철도여객운송, 철도화물운송, 도로여객운송
	우편, 전화료	우편, 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 정보서비스, 도로화물운송, 택배
	간식비	원당, 정제당, 전분, 당류, 빵 및 곡분과자,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국수류, 발효 및 합성조미료, 기타조미료, 장류, 누룩 및 맥아, 동물성유지 식물성 유지, 과일 및 채소가공품, 기타 식료품, 커피 및 차류, 인삼식품, 기타 식료품, 두부, 기타 식료품, 비알콜성 음료
설비 장비 구입비	일반목적용기계	보일러,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및압축기, 밸브, 베어링, 기어및전동요소, 산업용운반기계, 공기조절장치및냉장냉동장비, 공기및액체여과정정기, 난방및조리기기, 기타일반목적용기계
	특수용도기계	농업용기계, 건설및광물처리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금속성형처리기계, 금형및주형, 반도체제조용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지및인쇄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전기장비	발전기및전동기, 변압기, 기타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및제어장치, 전지, 전선및케이블, 전구램프및조명장치, 기타 전기장치
	반도체, 전자표시 장치, 전자부품	개별소자, 집적회로, LCD 평판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TV, 영상기기, 오디오 및 음향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측정 및 분석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사진기 및 영사기, 안경 및 기타광학기기, 시계
	자동차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자동차용엔진, 자동차 부분품
	선박	강철제선박, 기타선박, 선박수리및부분품
	기타운송장비	철도차량, 항공기, 모터사이클, 자전거 및 기타운수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목재가구, 금속가구, 기타가구, 장난감 및 오락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악기, 귀금속 및 보석, 모형 및 장식용품, 기타 제조업제품, 제조임가공서비스
	장비임대료	기계장비및용품임대,

구분	지출항목	구성 품목
원재료 구입비	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	벼, 맥류 및 잡곡, 콩류, 감자류, 채소, 과일, 약용작물, 기타 식 용작물, 잎담배, 화훼작물, 천연고무, 종자 및 묘목, 기타 비식용 작물, 낙농, 육우, 양돈, 가금, 기타 축산, 영립, 원목, 식용 임산 물, 기타 임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 농림어업 서비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무연탄, 유연탄, 원유, 천연가스(LNG)
	금속 및 비금속광물	철광석, 기타 비철금속광석, 골재 및 석재, 석회석, 기타 비금속광물
	식료품	도축육, 가금육, 육가공품, 우유, 낙농품, 수산물 가공품, 수산동 물 저장품, 정곡, 제분, 원당, 정제당, 전분 및 당류, 떡, 빵 및 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유지, 과일 및 채소 가공 품, 커피 및 차류,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기타 식료품, 사료
	음료품	비알콜음료 및 얼음
	섬유 및 의복, 가죽제품	천연 섬유사, 화학 섬유사, 기타 섬유사, 천연섬유직물, 화학섬 유직물, 기타 섬유직물, 편조원단, 섬유표백 및 염색, 직물제품, 끈, 로프 및 어망, 기타 섬유제품, 봉제의류, 편조의류, 가죽의 류, 모피의류 및 모피제품, 의복관련 장신품, 가죽, 모피, 가방 및 핸드백, 신발, 기타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제재목, 합판, 강화 및 재생목재, 건축용 목제품, 목재 용기 및 적재판, 기타 목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펄프, 인쇄용지, 기타 원지 및 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종 이용기,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위생용 종이제품, 기타 종이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 코크스 및 관련제품, 연탄,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정제혼합용 원료유, 윤활유 및 그리스, 기타 석유정제제품
	기초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의약품, 비료 및 농약, 기타 화학제품	지방족 기초유분, 방향족 기초유분, 석유화학중간제품, 석탄화합물,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산업용 가스, 기초무기화합물, 염료, 안료 및 유연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화학섬유, 의약품, 비료 및 질소화합 물, 살충제 및 농약, 도료, 잉크, 비누, 세제 및 치약, 화장품, 접착 제 및 젤라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기타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플라스틱 1차제품,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타이어 및 튜브, 산업 용 고무제품, 기타 고무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판유리 및 1차유리, 전자기기용 유리제품, 산업용(전자기기 제 외) 유리제품, 기타 유리제품, 가정용 도자기, 산업용 도자기, 내 화 요업제품, 건설용 비내화 요업제품,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 트제품, 석회 및 석고제품, 석제품, 연마제,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품, 석면 및 암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구분	지출항목	구성 품목
	철강1차제품, 철강가공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금속 주물	선철, 합금철, 조강, 철근 및 봉강, 형강, 선재 및 케조, 열연 후관 및 강관, 강선, 철강관, 냉간압연강재, 표면처리강재, 기타 철강1차제품,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금은괴,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동 1차제품, 알루미늄 1차제품,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금속 주물
	금속제품	건축용 금속제품, 구조물용 금속제품, 금속제 탱크 및 압력용기,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발생기,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 금속 압형제품, 금속처리, 금속처리 가공품, 가정용 금속제품, 부착용 금속제품, 공구류, 나사 및 철선 제품, 금속포장용기, 기타 금속제품
사업지원 서비스	교재/교구구입비 (인쇄및복제)	인쇄,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출판물, 연극, 음악, 신문, 영화 등 구입비	문화서비스(국공립),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문화서비스(기타), 신문, 출판,영상오디오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부동산 임차료	비주거용 건물 임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관련서비스
	연구개발비 (교재개발비 포함)	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비영리), 연구기관(산업), 기업내연구개발
	마케팅,홍보,창업 지원/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법무 및 회계 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광고, 건축·토목관련서비스, 공학관련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기타 전문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컴퓨터관리서비스
	교육비 및 인력양성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비영리), 교육기관(산업)
	오락/스포츠/사회단체	스포츠서비스, 오락서비스, 산업 및 전문가단체 지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
사무용품구입비(문방구류 등)	사무용품, 문방구류 구입	
SOC(토목) 건설 (건설비)	교통시설/토목/전력 통신시설	도로시설, 철도시설,항만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환경정화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산업플랜트, 기타 건설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건축보수
사회복지/의료/공공 행정	사회복지사업	사회보험(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의료보건/위생서비스 지원	의료 및 보건(국공립),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사회단체 지원	산업및전문단체,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공공행정및국방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것		
토지건물구입,보상 등		토지, 건물구입 및 보상비, 인허가비, 국제분담금, 국외여비 등
총지출액		

## 제5장 대구시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 제1절 정책사업의 분류와 예산

#### 1. 대구시 사업 예산

- 대구시 일자리의 사업분류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2,134개의 세부사업 중 예산이 없는 12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2,12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분류하였음.
- 사업 분류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 등 지원서비스이며 전체 정책사업 예산의 29.5%에 해당하는 1조 4554.9억 원 규모임.
  - 세부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기타를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으로 415개의 사업이 있음.
  - 1개의 세부사업의 단위가 가장 큰 사업은 기타를 제외하면 복지 등 지원서비스에 속해 있으며, 4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작은 예산의 사업 역시 복지 등 지원서비스에 속해 있으며, 79만4천원 규모임.

<표 5-1> 정책사업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사업분류	세부사업당 평균	최소예산 사업	최대예산사업	합계	비중	세부사업 수
직접일자리창출	2,807,251	5,400	51,919,787	235,809,092	4.8	84
직업능력개발훈련	324,476	10,000	6,400,000	10,383,242	0.2	32
고용서비스	632,226	20,000	1,865,527	6,322,257	0.1	10
고용장려금	2,285,818	12,000	7,148,334	18,286,544	0.4	8
창업지원	679,157	12,240	3,000,000	12,903,980	0.3	19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0.0	1

사업분류	세부사업당 평균	최소예산 사업	최대예산사업	합계	비중	세부사업 수
복지 등 지원서비스	4,243,415	794	433,277,475	1,455,491,372	29.5	343
일자리인프라	556,315	9,900	2,040,260	6,119,460	0.1	11
사회간접자본(SOC)	1,412,479	884	41,200,000	586,178,919	11.9	415
시설센터운영	2,901,523	3,100	391,659,821	757,297,544	15.4	261
연구용역조사	201,163	2,160	2,161,000	15,288,401	0.3	76
행사,축제,홍보서비스	355,967	3,000	16,454,600	73,329,099	1.5	206
ODA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0	1
기업유치,신설,확장	1,909,308	42,000	12,000,000	34,367,543	0.7	18
기업육성	1,452,487	20,000	60,024,000	132,176,300	2.7	91
기타	2,902,418	300	447,078,109	1,584,720,422	32.2	546
합계	2,322,714	300	447,078,109	4,928,799,175	100	2,122

## 2. 사업유형별 예산

### (1) 직접일자리창출사업

-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총 예산은 약 2,358억 원, 84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4.8%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직접일자리창출 사업 중 63.3%가 보건복지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35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이 9개 사업, 25.5%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녹색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시민행복교육국은 세부사업 수에 비해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표 5-2>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기획조정실	53,819	0.0	2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통계자료 발간
녹색환경국	2,039,673	0.9	10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구군)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31,112	0.0	2	·농기계훈련사업(구·군) ·농업 전문인력 양성(구·군)
문화체육관광국	5,967,483	2.5	10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지원 ·구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보건복지국	149,270,311	63.3	35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확충(구군) 등
시민행복교육국	6,109,310	2.6	11	·지역공동체일자리(구군) ·콜센터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60,084,683	25.5	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구·군) ·아동복지교사지원(구·군)
자치행정국	1,003,181	0.4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
창조경제본부	11,119,520	4.7	2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국가직접지원)
첨단의료산업국	130,000	0.1	1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사업(국가직접 지원)
합계	235,809,092	100	84	

##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총 예산은 약 103.8억 원, 32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 사업 중 0.2%의 비중을 차지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중 68.0%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사업수는 10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3개 사업, 12.8%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표 5-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50,000	1.4	1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기획조정실	39,650	0.4	1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국	1,328,100	12.8	3	·기초예술진흥사업 ·대구게임아카데미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보건복지국	656,504	6.3	7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교육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870,888	8.4	6	·기술, 문화소양교육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등
창조경제본부	7,063,100	68.0	10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등
첨단의료산업국	275,000	2.6	4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대구공동IRB사업 지원 등
합계	10,383,242	100	32	

### (3) 고용서비스사업

- 고용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63억 원, 10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0.1%의 비중을 차지함.
- 고용서비스사업은 중 32.8%가 보건복지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3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27.0%), 시민행복교육국(21.1%), 창조경제본부(19.1%) 순으로 나타남.

<표 5-4> 고용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보건복지국	2,074,098	32.8	3	·노숙인 상담소 운영 지원(구군) ·노숙인프로그램지원 ·장애인 취업박람회
시민행복교육국	1,332,060	21.1	1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708,843	27.0	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등
창조경제본부	1,207,256	19.1	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국가직접 지원) ·일자리지원사업
합계	6,322,257	100	10	

#### (4) 고용장려금사업

- 고용장려금사업의 총 예산은 약 182억 원,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 정책사업 중 0.4%의 비중을 차지함.
- 고용장려금사업은 중 39.1%가 시민행복교육국 사업이며, 사업수는 1개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큼.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33.0%), 여성가족정책관(27.9%) 순으로 나타남.

**<표 5-5> 고용장려금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시민행복교육국	7,148,334	39.1	1	·사회적기업육성(구·군)
여성가족정책관	5,108,010	27.9	4	·결혼이주여성 인턴(구군포함)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구·군)
창조경제본부	6,030,200	33.0	3	·일자리 창출 ·중장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합계	18,286,544	100	8	

#### (5) 창업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약 129억 원, 19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 중 0.3%의 비중을 차지함.
- 창업지원사업은 중 74.4%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사업수는 12개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25.2%), 여성가족정책관(0.4%) 순으로 나타남.

<표 5-6> 창업지원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문화체육관광국	3,256,000	25.2	5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콘텐츠 창업기업 지속성장 프로젝트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45,980	0.4	2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활성화 사업
창조경제본부	9,602,000	74.4	1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청년벤처창업펀드 등
합계	12,903,980	100	19	

####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은 녹색환경국 1개의 사업(사업명 : 석면피해구제(국가지원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25백만 원에 불과함.

#### (7) 일자리인프라사업

- 일자리인프라사업의 총 예산은 약 61억 원, 1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일자리인프라사업은 시민행복교육국 사업이 55.7%, 4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16.8%), 첨단의료산업국(14.2%) 순으로 나타남.

<표 5-7> 일자리인프라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문화체육관광국	281,000	4.6	1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시민행복교육국	3,411,510	55.7	4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구·군),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가족정책관	530,000	8.7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
창조경제본부	1,029,900	16.8	2	·근로자 권익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협의회 운영
첨단의료산업국	867,050	14.2	2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신활력 한방산업육성사업
합계	6,119,460	100	11	

### (8) 사회간접자본(SOC)사업

-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총 예산은 약 5,861억 원, 415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11.9%를 차지하며,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녹색환경국 사업이 21.1%, 102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18.4%), 창조경제본부(13.5%), 문화체육관광국(12.2%) 순으로 나타남.



<표 5-8>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07,607,388	18.4	73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등
기획조정실	311,361	0.1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정부통합전산센터건립지원 등
녹색환경국	123,514,742	21.1	102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농업기술센터	95,000	0.0	2	·신기술보급사업(구·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구·군)
도시재창조국	63,641,482	10.9	50	·측면도로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43,637,230	7.4	3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국	71,721,613	12.2	47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보건복지국	19,014,284	3.2	19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소방안전본부	13,565,059	2.3	14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소교) ·시설 확충 등
시민행복교육국	12,377,900	2.1	10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관	3,661,900	0.6	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회사무처	100,000	0.0	1	·청사 환경정비
자치행정국	5,215,810	0.9	6	·자가통신망(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등
재난안전실	29,048,896	5.0	14	·지방하천정비사업(구·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창조경제본부	79,091,248	13.5	45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등
첨단의료산업국	13,575,006	2.3	16	·한국뇌연구원건립(국가직접지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국가직접지원) 등
합계	586,178,919	100	415	

(9) 기업유치·신설·확장사업

○ 기업유치·신설·확장사업은 창조경제본부에 17개 사업, 첨단의료산업국에 1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창조경제본부가 338억으로 전체 예산의 98.5%이며, 첨단의료산업국은 약 4억 9천만 원 정도임.

- 세부사업으로는 창조경제본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등이 있으며, 첨단의료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지원'이 있음.

## (10) 기업지원 산업육성사업

- 기업육성사업의 총 예산은 약 1,321억 원, 9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2.7%의 비중을 보임.
- 기업육성사업 예산의 91.0%가 창조경제본부 사업이며, 73개 사업이 있음.
- 그 밖에 첨단의료산업국(6.8%), 문화체육관광국(2.1%), 기획조정실(0.1%)의 사업들이 있음.

**<표 5-9> 기업지원 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기획조정실	100,000	0.1	1	·지역기업 첨단기술 육성
문화체육관광국	2,834,000	2.1	12	·대구 음악창작소 조성 ·게임기업 역량강화 등
창조경제본부	120,317,300	91.0	7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야시장 등 육성사업 등
첨단의료산업국	8,925,000	6.8	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등
합계	132,176,300	100	91	

## (11)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4554억 원, 343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29.5%를 차지하며,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국 사업이 37.1%, 169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시민행복교육국(31.1%), 여성가족정책관(24.6%) 순으로 나타남.

<표 5-10>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30,000	0.0	1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기획조정실	628,533	0.0	4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등
녹색환경국	80,600	0.0	1	·청소년 현장체험교육사업
농업기술센터	34,550	0.0	4	·농가경영개선지원(구·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구·군) 등
도시재창조국	79,626,945	5.5	4	·기초생활 주거급여(구·군)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등
문화체육관광국	14,394,430	1.0	28	·토요문화학교운영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보건복지국	539,861,208	37.1	169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 생계급여(구·군) 등
보건환경연구원	160,867	0.0	1	·시민보건위생
시민행복교육국	452,075,858	31.1	51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등
여성가족정책관	358,728,505	24.6	56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구·군) 등
재난안전실	203,900	0.0	2	·안전정책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창조경제본부	9,665,976	0.7	22	·유기질 비료공급 ·기능경기 및 기능단체 지원
합계	1,455,491,372	100	343	

## (12) 시설센터운영사업

○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총 예산은 약 7,572억 원, 261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15.4%를 차지하며, 복지 등 지원서비스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 시설센터운영사업은 보건복지국 사업이 58.1%, 28개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10.1%), 여성가족정책관(8.0%) 순으로 나타남.

<표 5-11> 시설센터운영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감사관	19,586	0.0	1	·내부통제 운영
건설교통국	43,361,626	5.7	23	·나드리콜운영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등
건설본부	191,578	0.0	1	·건설본부운영 일반
공무원교육원	12,000	0.0	1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기획조정실	3,155,608	0.4	2	·구)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녹색환경국	36,266,216	4.8	51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업기술센터	90,916	0.0	1	·농업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창조국	842,310	0.1	4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76,600,000	10.1	1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국	56,836,743	7.5	50	·단체운영 ·민간위탁 행정 등
보건복지국	439,776,987	58.1	28	·명복공원 운영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소방안전본부	2,673,495	0.4	3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기금)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시민안전테마파크
시민행복교육국	1,313,759	0.2	4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음향영상시스템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60,367,206	8.0	34	·아동복지시설운영(구·군) ·어린이집 운영지원(구·군) 등
의회사무처	37,013	0.0	1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12,280,621	1.6	11	·청사임차 관리 ·맞춤형복지 운영 등
재난안전실	6,135,220	0.8	8	·관련상가 관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등
창조경제본부	15,126,660	2.0	26	·지역 전략산업 디자인개발 지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등
첨단의료산업국	2,210,000	0.3	11	·기중제대혈은행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 등
합계	757,297,544	100	261	

### (13) 연구용역조사사업

-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총 예산은 약 152억 원, 76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사업의 0.3%의 비중을 보임.
- 연구용역조사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17.6%,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도시재창조국(15.9%), 기획조정실(14.3%) 순이며, 사업수가 가장 많은 실국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2개 사업(13.1%)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2> 연구용역조사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1,722,380	11.3	9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 교통기초조사 등
기획조정실	2,189,417	14.3	8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계 용역 ·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 등
녹색환경국	640,840	4.2	4	· 기후변화 정책지원 · 성서소각시설 교체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
농업기술센터	4,680	0.0	2	·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 농산물 소득조사분석(구·군)
도시재창조국	2,431,400	15.9	6	·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125,000	0.8	1	·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문화체육관광국	2,691,000	17.6	3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보건복지국	421,203	2.8	4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 감염병관리 등
보건환경연구원	1,996,356	13.1	22	· 먹는물검사 · 사업장폐수및오수방류수검사
시민행복교육국	115,000	0.8	2	· 대구자원봉사포럼 · 지역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
재난안전실	554,300	3.6	2	·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소교)
창조경제본부	1,646,825	10.8	12	· 염색산단 재생사업 ·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등
첨단의료산업국	750,000	4.9	1	·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 사업(국가직접 지원)
합계	15,288,401	100	76	

## (14)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

-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의 총 예산은 약 733억 원, 206개 사업으로 전체 정책 사업의 1.5%의 비중을 보임.
- 행사·축제·홍보서비스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54.8%, 5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창조경제본부(12.7%), 대변인(6.6%)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음.

<표 5-13> 행사·축제·홍보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건설교통국	974,150	1.3	14	·교통문화선진화 홍보 ·버스정책 추진 등
국제협력관	2,507,500	3.4	5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국가직접사업) ·전시회지원 등
기획조정실	259,900	0.4	3	·시정소개 자료 제작, ·시정백서 발간 ·지방세정 홍보
녹색환경국	3,685,780	5.0	14	·물중심도시 조성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등
농업기술센터	93,000	0.1	2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업인한마음대회
대변인	4,870,110	6.6	10	·시정 영상홍보 추진 ·체계적 언론홍보 등
도시브랜드담당관	542,110	0.7	3	·새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확산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 등
도시재창조국	158,500	0.2	3	·건축문화비엔날레, ·외외광고문화 선진화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문화체육관광국	40,206,995	54.8	50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등
보건복지국	1,262,471	1.7	19	·금연환경조성 ·노인 전국대회 지원 등
소방안전본부	732,550	1.0	11	·소방의 날 행사 및 후생복지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등
시민행복교육국	1,502,500	2.0	10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미소친절대구만들기 등
여성가족정책관	537,080	0.7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등
의회사무처	471,723	0.6	1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자치행정국	516,880	0.7	2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의전행사관리
재난안전실	1,760,700	2.4	5	·안전마을만들기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등
창조경제본부	9,306,400	12.7	38	·대구 패션페어 ·섬유산업 국내판로개척 등
첨단의료산업국	3,940,750	5.4	10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
합계	73,329,099	100	206	

## (15) ODA사업

- ODA사업은 국제협력관 1개의 사업(사업명 : 국비지원 공적개발원조사업(국가직 접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1억 원임.

## (16) 기타사업

- 15개의 사업분류로도 분류되지 않은 지자체 고유의 행정업무에 속하는 기타사업은 전체 정책사업의 32.2%인 약 1조 5,847억 원의 예산임.
- 전체 2,122개 사업 중 25.7%에 해당하는 546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장 예산이 많은 실국은 기획조정실로 36.4%이며, 다음으로 많은 곳은 보건복지국 30.2%임.

<표 5-14> 기업육성사업의 실국별 예산

(단위 : 천원, %, 개)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감사관	669,490	0.0	10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감사활동 지원 등
건설교통국	233,386,619	14.7	59	·건설산업행정지원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 등
건설본부	130,610	0.0	1	·공사업무지원
공무원교육원	1,637,110	0.1	10	·공무원교육(수입대체경비) ·교수요원 자질향상 등
국제협력관	1,131,620	0.1	3	·국제교류, ·국제협력 ·해외주재관 운영 등
기획조정실	576,564,432	36.4	55	·광역행정 추진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등
녹색환경국	23,799,905	1.5	31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공원유원지 토지매입
농업기술센터	1,139,787	0.1	11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농기계임대사업지원 등
도시브랜드담당관	13,400	0.0	1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 운영
도시재창조국	27,073,505	1.7	37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항공사진촬영) 등

분류	예산액	사업 내 비중	사업 수	세부사업명 예시
도시철도건설본부	103,279,451	6.5	8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등
문화체육관광국	20,514,755	1.3	23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
보건복지국	479,021,103	30.2	39	·감염병전문가교육 ·감염질환역학조사 등
보건환경연구원	2,480,338	0.2	25	·가축방역보조원사업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자본보조) 등
소방안전본부	33,938,705	2.1	95	·119구급체계구축사업(기금) ·개인보호장비 보강(소교)
시민행복교육국	1,411,934	0.1	9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고객만족행정서비스운영 등
여성가족정책관	156,290	0.0	3	·보육아동관련 업무수행 ·양성평등 업무지원, 여성정책 업무추진
의회사무처	3,695,535	0.2	13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 ·근무환경개선 장비 구입 등
자치행정국	14,784,492	0.9	4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실	12,353,558	0.8	25	·CCIV설치 및 지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창조경제본부	47,283,243	3.0	38	·ICT융합산업 활성화 ·계량기 관리
첨단의료산업국	254,540	0.0	4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의료산업 학술대회 지원 등
합계	1,584,720,422	100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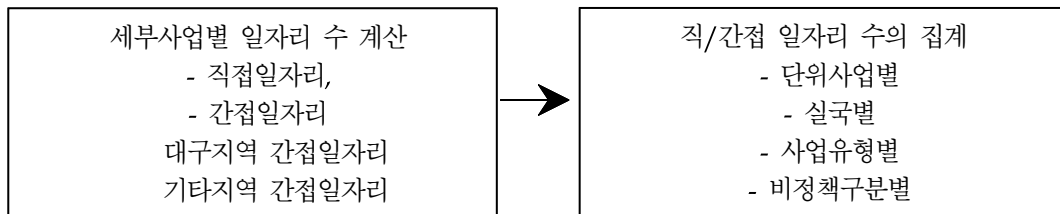


## 제2절 예산서를 이용한 일자리 계산

### 1. 사업별 일자리 계산 절차

- 대구시 예산서만을 이용하여 선형적으로 직간접 일자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함
- 일자리는 먼저 세부사업별로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총 간접일자리, 대구지역 간접일자리, 기타지역 간접일자리)를 계산하여 단위사업별, 실국별, 사업유형별, 비정채구분별 일자리로 집계함

[그림 5-1] 사업별 일자리 계산 절차



### 2. 일자리 계산 방식

#### 가. 직접 일자리 계산 방식

- 직접일자리는 인건비 통계목(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직급보조비, 직책별업무수행경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합에서 산업부문별 연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계산함. 여기서는 산업부문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평균(33,838백만원을 이용함).
  - 향후 사업 담당자가 인건비 통계목의 산업부문 분류가 가능하면 연평균임금을 산업부문별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임.

$$\text{직접일자리 수} = \text{인건비 통계목 합} \div \text{연평균임금(산업전체 평균: 33,838백만원)}$$

<표 5-15> 산업부문별 연평균임금

	연평균임금 (백만원)	월평균임금(원)	시간당임금(원)	월평균 근로일수(일)	월평균 총근로시간(시간)
전체평균	33.838	2,819,807	15,308	22.4	184.2
A. 농업,임업및어업(01~03)	32.027	2,668,911	14,442	23.1	184.8
B. 광업(05~08)	39.833	3,319,382	16,824	23.5	197.3
C. 제조업(10~33)	34.949	2,912,425	15,005	22.9	194.1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 업(35~36)	51.501	4,291,726	24,736	21.4	173.5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 생및환경복원업(37~39)	33.13	2,760,833	14,554	23.1	189.7
F. 건설업(41~42)	34.801	2,900,057	15,839	22.6	183.1
G. 도매및소매업(45~47)	31.912	2,659,333	14,422	22.6	184.4
H. 운수업(49~52)	31.159	2,596,589	14,158	22.2	183.4
I. 숙박및음식점업(55~56)	21.602	1,800,133	9,757	22.5	184.5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 보서비스업(58~63)	40.978	3,414,847	19,304	22	176.9
K. 금융및보험업(64~66)	46.268	3,855,634	22,045	21.8	174.9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 9)	24.826	2,068,845	10,459	20.4	197.8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업(70~73)	43.796	3,649,648	20,561	22	177.5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 원서비스업(74~75)	28.059	2,338,289	12,827	22.3	182.3
P. 교육서비스업(85)	37.282	3,106,825	18,818	21.1	165.1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 스업(86~87)	27.881	2,323,399	13,186	22.3	176.2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27.667	2,305,617	13,078	21.9	176.3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24.886	2,073,863	12,114	22.9	171.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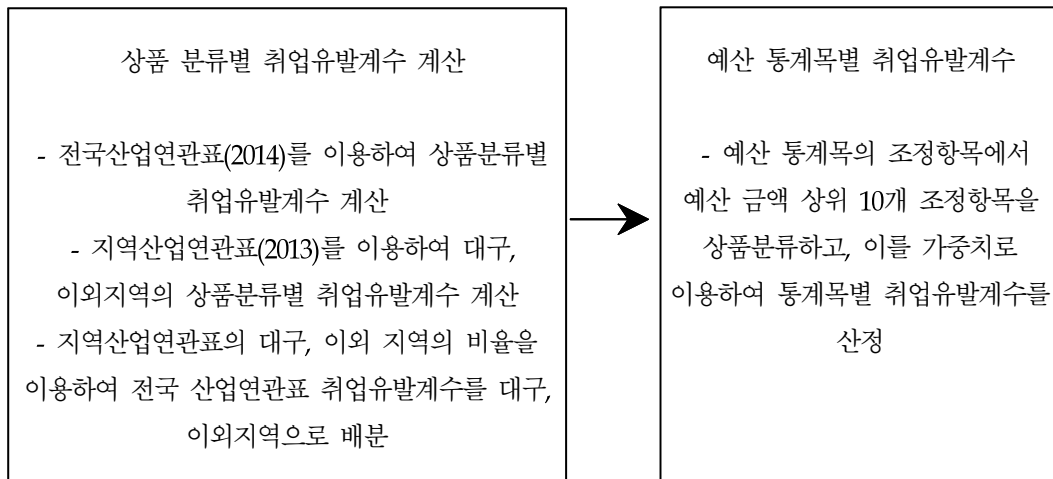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N22&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N22&conn_path=I3)

## 나. 간접 일자리 계산

### □ 간접 일자리 계산 절차

- 예산 통계목에 대해 대구지역과 이외 지역의 취업유발계수를 계산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상품(산업)분류별(83분류) 취업유발계수를 산정
  - 상품분류별(83분류) 취업유발계수를 예산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로 전환
- 상품분류별 취업유발계수는 지역산업연관표(2013)의 대구/이외 지역 취업유발계수를 계산하여 대구/이외 지역의 비중을 구한 후, 전국 산업연관표(2014)의 취업유발계수를 대구/이외 지역의 비중으로 배분함
- 예산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는 통계목의 조정항목 예산을 관찰하여 조정항목 예산액 상위 10개의 조정항목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통계목의 취업유발계수를 산정함
  - 사업담당자가 예산서의 비용항목을 분류하면, 이를 이용하여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림 5-2]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 계산 과정



- 예산 통계목 예산액과 취업유발계수를 곱하여 간접 일자리 수를 계산

$$\text{간접 일자리 수} = \text{통계목별 예산액} \times \text{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

<표 5-16> 통계목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백만원)

예산분 류코드	통계목 코드	통계목명	전국	대구	기타
1	101-01	보수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2	101-02	기타직보수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3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4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5	201-01	사무관리비	0.01414	0.01151	0.00262
6	201-02	공공운영비	0.01414	0.01151	0.00262
7	201-03	행사운영비	0.01880	0.01510	0.00371
8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04103	0.03662	0.00441
9	202-01	국내여비	0.02418	0.01993	0.00425
10	202-02	월액여비	0.02578	0.02089	0.00489
11	202-03	국외업무여비	제외	제외	제외
12	202-04	국제화여비	제외	제외	제외
13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0.02418	0.01993	0.00425
14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02418	0.01993	0.00425
15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01320	0.01056	0.00264
16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01320	0.01056	0.00264
17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01320	0.01056	0.00264
18	204-03	특정업무경비	제외	제외	제외
19	204-02	직급보조비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20	204-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21	205-01	의정활동비	제외	제외	제외
22	205-02	월정수당	제외	제외	제외
23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제외	제외	제외
24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제외	제외	제외
25	205-03	의원국내여비	제외	제외	제외
26	205-04	의원국외여비	제외	제외	제외
27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28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29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30	206-01	재료비	0.00879	0.00559	0.00320
31	207-01	연구용역비	0.01405	0.01139	0.00266
32	207-02	전산개발비	0.01724	0.01092	0.00631
33	207-03	시험연구비	0.01912	0.01549	0.00363
34	301-11	기타보상금	제외	제외	제외

예산분 류코드	통계목 코드	통계목명	전국	대구	기타
35	301-09	행사실비보상금	0.01523	0.01258	0.00265
36	301-07	외빈초청여비	제외	제외	제외
3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외	제외	제외
38	301-02	장학금및학자금	제외	제외	제외
39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0.02074	0.01643	0.00431
40	301-06	민간인국의여비	제외	제외	제외
41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42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0.00868	0.00541	0.00327
43	303-01	포상금	제외	제외	제외
44	303-02	성과상여금	제외	제외	제외
45	304-01	연금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46	304-02	국민건강보험금	제외	제외	제외
47	304-03	의원상해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48	305-01	배상금등	제외	제외	제외
49	306-01	출연금	제외	제외	제외
5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01411	0.01092	0.00320
51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0.01398	0.01080	0.00318
5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0.01481	0.01196	0.00285
53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01150	0.00850	0.00300
54	307-05	민간위탁금	0.02091	0.01772	0.00318
55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0.01578	0.01318	0.00260
56	307-06	보험금	제외	제외	제외
57	307-01	의료및구료비	0.01124	0.00874	0.00250
58	307-08	이차보전금	제외	제외	제외
59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제외	제외	제외
60	307-07	연금지급금	제외	제외	제외
61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0.01150	0.00886	0.00264
62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01382	0.01070	0.00312
63	308-03	자치구조정교부금	제외	제외	제외
64	308-04	시·군조정교부금	제외	제외	제외
65	308-02	징수교부금	제외	제외	제외
66	308-05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제외	제외	제외
67	308-11	기타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68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69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04103	0.03662	0.00441
70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예산분 류코드	통계목 코드	통계목명	전국	대구	기타
71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72	310-02	국제부담금	제외	제외	제외
73	31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74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75	311-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76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77	401-01	시설비	0.01447	0.00976	0.00471
78	401-02	감리비	0.01752	0.01353	0.00399
79	401-03	시설부대비	0.01447	0.00976	0.00471
80	401-04	행사관련시설비	0.01481	0.00996	0.00485
81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0.01309	0.01004	0.00305
82	402-02	민간대행사업비	0.01014	0.00647	0.00367
83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0.01096	0.00788	0.00308
84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0.01417	0.01062	0.00355
85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8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00757	0.00446	0.00311
87	405-02	도서구입비	0.01585	0.01125	0.00460
88	406-01	기타자본이전	제외	제외	제외
89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제외	제외	제외
90	60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제외	제외	제외
91	601-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제외	제외	제외
92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제외	제외	제외
93	701-01	기타회계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4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5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6	702-01	기금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7	703-01	법정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8	703-02	비법정전출금	제외	제외	제외
99	705-02	예수금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100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제외	제외	제외
101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제외	제외	제외
102	801-01	일반예비비	제외	제외	제외
103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제외	제외	제외
104	801-03	내부유보금	제외	제외	제외
105	802-03	과오납금등	제외	제외	제외

### 제3절 사업부서별, 사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성과

#### 1. 실국별 일자리 성과

- 대구시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총 63,129이며, 그 중 16.0%가 직접일자리, 84.0%가 간접일자리로 분류되며, 53,048개의 간접일자리 중 78.2%가 대구지역 간접일자리며, 21.8%가 기타지역의 간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실국별 일자리성과가 가장 높은 실국은 보건복지국으로 전체 일자리의 약 41.8%에 해당하는 26,39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7,560개(12.0%), 소방안전본부 4,434개(7.0%), 문화체육관광국 4,324개(6.9%) 순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음.
- 전체 일자리의 약 16.0%에 해당하는 10,081개가 직접일자리에 속하며, 이중 가장 많은 3,773개(37.4%)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창출된 것으로 산출됨.
  -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이 2,906개(28.8%), 문화체육관광국이 922개(9.1%) 순으로 직접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음.
- 전체 일자리의 약 84.0%에 해당하는 53,048개가 간접일자리에 속하며, 이중 가장 많은 26,304개(49.6%)가 보건복지국에서 창출된 것으로 산출됨.
  -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7,369개(13.9%), 창조경제본부 3,703개(7.0%) 순으로 간접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음.
  - 이 간접일자리는 대부분 대구지역에 해당하는 간접일자리에 속함.

<표 5-17> 실국별 일자리 성과

( 단위: 명 )

실국 코드	실국명	간접일자리			직접일자리	총일자리
		합계	구분			
			대구지역 간접일자리	기타지역 간접일자리		
1001	대변인	72	58	15	6	79
1004	여성가족정책관	7,369	5,689	1,680	191	7,560
1008	도시브랜드담당관	9	8	2	1	11
1010	감사관	13	10	3	11	24
1011	자치행정국	740	613	127	138	878
1012	보건복지국	26,304	20,952	5,351	88	26,391
1013	도시재창조국	2,052	1,525	526	27	2,079
1014	건설교통국	2,860	2,158	702	174	3,034
1015	기획조정실	264	206	58	2,906	3,170
1016	창조경제본부	3,703	2,874	829	160	3,863
1017	녹색환경국	2,732	2,018	714	538	3,270
1018	국제협력관	61	49	11	4	64
1019	재난안전실	701	512	189	234	934
1021	시민행복교육국	997	802	195	21	1,018
1035	문화체육관광국	3,402	2,675	727	922	4,324
1065	소방안전본부	661	481	180	3,773	4,434
1071	건설본부	10	8	2	207	217
1073	첨단의료산업국	340	266	73	9	349
1101	농업기술센터	23	18	5	55	78
1105	공무원교육원	28	22	5	50	77
1110	보건환경연구원	69	53	16	213	282
2005	의회사무처	30	23	6	171	201
2110	도시철도건설본부	611	438	173	181	791
계		53,048	41,459	11,589	10,081	63,129



- 대구시 전체의 예산 10억 당 창출되는 총 일자리의 수는 약 10.0명이며, 그 중 간접일자리가 8.4명, 직접일자리가 1.6명으로 분석되었음.
- 예산 10억 당 총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창출된 실국은 건설본부로 약 28.2명이며, 다음으로는 소방안전본부 23.3명, 보건환경연구원 23.1명 순으로 분석됨.
- 예산 10억 당 직접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된 실국 또한 건설본부로 약 26.9명이며, 다음으로 많은 곳은 소방안전본부로 약 19.8명, 보건환경연구원 17.5명 순임.
- 간접일자리인 경우 예산 10억 당 보건복지국이 15.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시브랜드 담당관이 15.0명, 여성가족정책관이 14.8명 순으로 분석됨.
- 대체적으로 예산 10억 당 직접일자리가 10명이 넘는 곳이 총 일자리 수 또한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간접일자리 수가 10명이 넘는 곳은 직접일자리 수가 대체로 낮았음.

**<표 5-18> 실국별 예산과 일자리 수**

( 단위: 십억 원, 명 )

실국 코드	실국명	예산액 (십억)	예산 10억 당 일자리 수			예산 10억 당 일자리 수		
			직접 일자리 수	간접 일자리 수	총 일자리 수	직접/예산액	간접/예산액	총/예산액
1001	대변인	5	6	72	79	1.2	13.8	15.2
1004	여성가족정책관	499	191	7,369	7,560	0.4	14.8	15.2
1008	도시브랜드담당관	1	1	9	11	1.7	15.0	18.3
1010	감사관	1	11	13	24	9.2	10.8	20.0
1011	자치행정국	133	138	740	878	1.0	5.6	6.6
1012	보건복지국	1,715	88	26,304	26,391	0.1	15.3	15.4
1013	도시재창조국	188	27	2,052	2,079	0.1	10.9	11.1
1014	건설교통국	770	174	2,860	3,034	0.2	3.7	3.9
1015	기획조정실	976	2,906	264	3,170	3.0	0.3	3.2
1016	창조경제본부	369	160	3,703	3,863	0.4	10.0	10.5
1017	녹색환경국	234	538	2,732	3,270	2.3	11.7	14.0
1018	국제협력관	5	4	61	64	0.9	13.6	14.2
1019	재난안전실	96	234	701	934	2.4	7.3	9.7
1021	시민행복교육국	488	21	997	1,018	0.0	2.0	2.1
1035	문화체육관광국	252	922	3,402	4,324	3.7	13.5	17.1
1065	소방안전본부	191	3,773	661	4,434	19.8	3.5	23.3
1071	건설본부	8	207	10	217	26.9	1.3	28.2
1073	첨단의료산업국	37	9	340	349	0.2	9.1	9.4
1101	농업기술센터	3	55	23	78	16.2	6.8	22.9
1105	공무원교육원	4	50	28	77	13.9	7.8	21.4
1110	보건환경연구원	12	213	69	282	17.5	5.7	23.1
2005	의회사무처	10	171	30	201	16.8	2.9	19.7
2110	도시철도건설본부	348	181	611	791	0.5	1.8	2.3
계		6,343	10,081	53,048	63,129	1.6	8.4	10.0

## 2. 사업유형별 일자리 성과

- 사업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총 일자리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복지지원서비스사업으로 15,027개(23.8%)로 분석됨.
  - 다음으로 총 일자리수가 많은 사업은 시설센터운영이 13,488개(21.4%), 분류불명(행정운영경비) 9,992개(15.8%), 기타 9,287개(14.7%) 순으로 나타남.
- 직접일자리 수는 전체의 94.3%에 해당하는 9,509개가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분류불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는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간접일자리 수와 총일자리 수의 사업유형별 순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지원서비스사업이 15,020개(28.3%)로 가장 많고, 시설센터운영이 12,971개(24.5%), 기타 9,273개(17.5%), 사회간접자본 7,741개(14.6%) 순으로 나타남.

<표 5-19> 사업유형별 일자리 성과

(단위: 명)

사업 유형 코드	사업유형	간접일자리 계			직접일자리	총일자리
			대구지역 간접일자리	기타지역 간접일자리		
1	직접일자리	3,582	2,776	806	24	3,606
2	직업능력개발	203	166	36	0	203
3	고용서비스	115	94	21	6	121
4	고용장려금	294	231	63	0	294
5	창업지원	150	121	29	0	150
6	실업소득유지지원	0.37	0.29	0.09	0.00	0.37
7	일자리인프라	100	80	20	0	100
8	사회간접자본	7,741	5,453	2,288	3	7,743
9	기업유치신설확장	472	364	108	0	472
10	기업육성	1,085	875	210	0	1,085
11	복지지원서비스	15,020	11,658	3,362	7	15,027
12	시설센터운영	12,971	10,838	2,133	516	13,488
13	연구용역조사	229	172	57	1	230
14	행사축제홍보서비스지원	1,327	1,083	244	1	1,328
15	ODA사업	2	1	0	0	2
16	기타	9,273	7,152	2,121	14	9,287
17	분류불명	483	394	89	9,509	9,992
	계	53,048	41,459	11,589	10,081	63,129

주) 5장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유형을 구분했었고, 본 장에서는 재무활동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정'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분류불명'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 예산 10억 당 총 일자리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ODA사업이 2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직업능력개발이 19.6명, 고용서비스가 19.1명 순으로 나타났음.
- ODA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모두 간접일자리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간접일자리 수 또한 총 일자리수와 순위는 같으며, 고용서비스사업은 19.1명 중 18.2명이 간접일자리로 구분됨.
- 예산 10억 당 직접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분류불명을 제외하면, 고용서비스가 0.9명으로 가장 높고, 시설센터운영이 0.7명, 직접일자리가 0.1명 순으로 나타남.

<표 5-20> 사업유형별 예산과 일자리 수

(단위: 십억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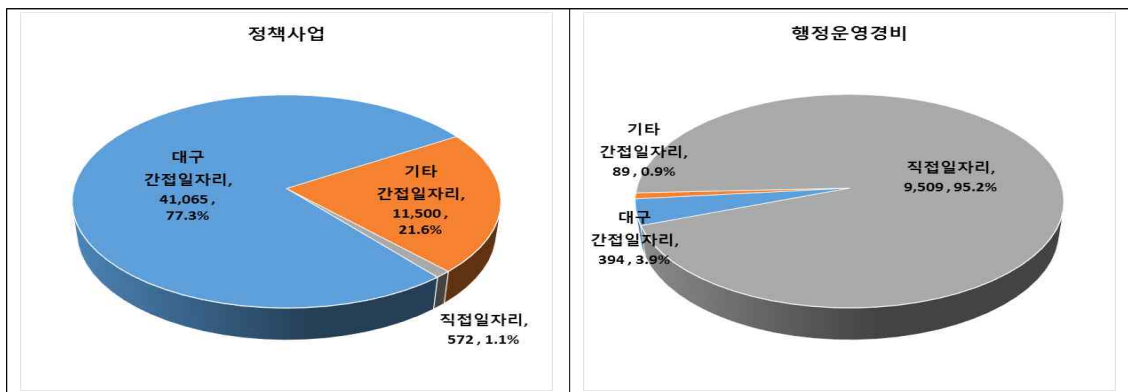
사업 유형 코드	사업유형	예산액 (십억)				예산 10억 당 일자리 수		
			직접 일자리 수	간접 일자리 수	총 일자리 수	직접/예 산액	간접/예 산액	총/예산 액
1	직접일자리	236	24	3,582	3,606	0.1	15.2	15.3
2	직업능력개발	10	0	203	203	0.0	19.6	19.6
3	고용서비스	6	6	115	121	0.9	18.2	19.1
4	고용장려금	18	0	294	294	0.0	16.1	16.1
5	창업지원	13	0	150	150	0.0	11.6	11.6
6	실업소득유지지원	0	0.00	0.37	0.37	0.0	14.8	14.8
7	일자리인프라	6	0	100	100	0.0	16.3	16.3
8	사회간접자본	586	3	7,741	7,743	0.0	13.2	13.2
9	기업유치신설확장	34	0	472	472	0.0	13.7	13.7
10	기업육성	132	0	1,085	1,085	0.0	8.2	8.2
11	복지지원서비스	1,456	7	15,020	15,027	0.0	10.3	10.3
12	시설센터운영	757	516	12,971	13,488	0.7	17.1	17.8
13	연구용역조사	15	1	229	230	0.1	15.0	15.0
14	행사축제홍보서비스 지원	73	1	1,327	1,328	0.0	18.1	18.1
15	ODA사업	0	0	2	2	0.0	20.0	20.0
16	기타	2,574	14	9,273	9,287	0.0	3.6	3.6
17	분류불명	425	9,509	483	9,992	22.4	1.1	23.5
계		6,343	10,081	53,048	63,129	1.6	8.4	10.0

### 3. 사업구분별 일자리 성과

- 사업구분별로 보면, 재무활동은 일자리의 산출이 어려움.
  - 정책사업은 98.9%가 간접일자리의 성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5.2%가 직접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사업의 간접일자리 중에서도 대구시 간접일자리가 전체 77.3%로 매우 높음.

[그림 5-3] 사업구분별 일자리 성과

(단위: 명, %)



- 정책사업의 예산 10억 당 총 일자리수는 53.7명이며 이 중 53.2명이 간접일자에 해당하며, 행정운영경비는 반대로 예산 10억 당 총 일자리수는 23.5명이며 이 중 22.4명이 직접일자에 해당함.

<표 5-21> 사업구분별 예산과 일자리 수

(단위: 십억 원, 명)

사업구분별	사업구분	예산액 (십억)	예산 10억 당 일자리 수					
			직접 일자리 수	간접 일자리 수	총 일자리 수	직접/ 예산액	간접/ 예산액	총/ 예산액
1	정책사업	989	572	52,565	53,137	0.6	53.2	53.7
2	재무활동	4,929	0	0	0	0.0	0.0	0.0
3	행정운영경비	425	9,509	483	9,992	22.4	1.1	23.5
계		6,343	10,081	53,048	63,129	1.6	8.4	10.0

## 제6장 대구시 일자리 평가 로드맵

### 1절 일자리영향평가 운영방식

#### 1. 평가 대상과 범위

가.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원칙

□ 일자리 영향 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 EIA) 구분

○ 일자리 영향 평가는 일반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실시

- 일반평가(General Employment Impact Assessment)는 대구시 전체 재정사업 및 예산지출의 일자리 영향을 표준화 평가모형 또는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특정평가(Specified Employment Impact Assessment)는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재정사업이나 제도추진을 앞두고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영향평가

□ 일반평가 목적과 효과

- 일반평가는 대구시 재정지출 및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매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하여 다음해 1년간 창출될 일자리 규모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 고용정책과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활용
- 대구시 예산 편성과 재정지출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예고하는 '예측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 기반 구축에 기여'
  -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대구시 고용정책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일자리 중심(job creation-oriented) 시정방향(市政方向)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 대구시 재정지출과 예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반평가 선정 원칙과 기준

- 일반평가는 대구시 재정지출 및 예산사업 전체에 대해 실시
- 일자리사업,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비(非)일자리사업, 중앙정부 재정지원 SOC사업 등

□ 특정평가 목적과 효과

○ 특정평가는 대구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수시 실시

- 대구시의 일자리 중심의 시정 방향 제시 등

○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원칙

-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제안이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정책이나 일자리사업은 특정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될 경우 일자리 영향 평가가 실시

나.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영향평가전문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선정

- 1) 사회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
- 2)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계속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정책
- 3)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고 분석·평가결과 활용도가 높은 정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 고용영향평가 우선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

○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정책

- 기업의 투자촉진, R&D 지원정책 등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지역개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
- 교육·인적자원 개발 사업 등 양질의 노동을 공급하거나, 각종 복지정책 등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각종 세제(법인세, 소득세 등),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등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시행중인 정책을 우선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에 대하여도 평가

#### 다.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 선정 절차

##### □ 일반평가 대상 선정 기준

- 원칙적으로 일반평가는 2016년 대구시 전체 예산 6.9조원의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non-financial projects)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6년 현재 대구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일반평가는 복지지원서비스 예산(1.4조원) 등 4.9조원의 재정사업 전부가 평가대상
  -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 등 직접 지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비재정사업도 일반평가의 대상으로 선정
- 향후 대구시 일자리 영향의 일반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2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제외한 2천여 개 사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표 6-1>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의 일반평가 대상(2016년 예산 기준)**

(단위 : 억 원, 개, %)

	예산		사업	
	예산액	비중	사업 수	비중
일자리사업(전체)	2,898	(5.9)	165	(7.8)
복지지원서비스	14,554	(29.5)	343	(16.2)
사회간접자본(SOC)	5,862	(11.9)	415	(19.6)
시설센터운영	7,572	(15.4)	261	(12.3)
연구용역조사	153	(0.3)	76	(3.6)
행사 및 홍보사업	733	(1.5)	206	(9.7)
ODA사업	1	(0.0)	1	(0.0)
기업지원육성	1,665	(3.4)	109	(5.1)
기타	15,847	(32.2)	546	(25.7)
합계	49,288	(100.0)	2,122	(100.0)

출처 : 대구시 예산 자료

□ 특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 대구시는 실국(室局) 및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
  - 고용노동과가 실국, 기초지자체, 연구진, 노사단체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을 선정
- 대구시 주요 실국과 협의를 거친 대상사업 선정(안) 중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실제 평가를 추진할 대상사업을 선정
-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평가대상 정책이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이를 모두 분석·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선정하여 분석·평가하되,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는 평가계획에서 명시 필요

## 2. 평가항목과 기준

### 가. 일자리 영향 평가의 주요 항목

-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지표와 항목 설정은 정책 고유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함
- 지자체는 지역경제 침체,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이라는 이중 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시정이나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정책의 고유목표(essential goals)를 실현 하면서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표 6-2> 일자리 영항의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li> <li>·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li> <li>· 정책집행의 적절성</li> <li>· 정책 고유 목표 달성 수준</li> </ul>
정책의 일자리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 일자리 연계 가능성</li> <li>· 정책집행의 일자리 연계성</li> </ul>
일자리 영항 평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최대 일자리의 양과 질</li> <li>· 정책의 시행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li> <li>· 정책의 개선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li> <li>· 정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감</li> </ul>

- 정책 고유목표와 일자리 창출의 균형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대구시정」 실현
  - 예컨대 고용창출과 무관하거나,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는 첨단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연구개발 기자재와 원자재 구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변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 구조 변경이 가능
  - 연구개발투자가 현 단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운영방식 또는 투자비지출구조를 수정할 경우<sup>9)</sup> 수입대체효과와 전후방연쇄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시정이나 사업의 핵심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영항 평가 항목의 점진적 확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시정 확립」

나. 세부 평가항목 측정방법과 기준

□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

9)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체가 기자재 구입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사업비 예산 가운데 인건비 비중을 조정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목표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 2) 정책이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고용 관련 계획 포함)을 반영하고 있는가?
  - 3)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정책목표의 적합성 실현가능성은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 정책 전문가를 통한 정성적 판단을 통해 평가
-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
-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
    - 1) 정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2)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은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각종 정책정보 및 해당 정책 전문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
- 정책집행의 적절성
- 정책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 1)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2) 정책비용의 집행체계는 적절한가?
    - 3)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책임 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4) 사업 활용 및 성과 확산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 정책집행의 적절성은 다음과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1) 자체정부업무평가 보고서,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평가 보고서 등
    - 2)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 정책 전문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정책 고유목표 달성도
- 정책의 목표 달성도는 정책이 제시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 정책 고유목표는 자체정부업무평가 보고서,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평가 보고서 등,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 정책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성과목표 변수에 대한 평가모형 분석결과와 정책 목표의 정량적 비교 등을 통해 실시

□ 정책의 일자리 연계성

- 정책과 일자리 연계 가능성
- 정책과 일자리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 1) 정책의 목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가?
    - 2) 제시된 일자리 관련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
    - 3)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정책집행의 일자리 연계성
  - 정책집행의 일자리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
    - 1) 정책집행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추진주체와 인력양성주체의 협의·연계체계가 있는가?
    - 2)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DB 등 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 정책 전문가를 통해 정성 및 정량으로 평가
  
- 일자리 영향 평가와 분석은 해당 정책 또는 재정지출로 인해 최대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규모
  - 일자리 영향 평가지표는 정책의 고유목표가 달성되거나 재정지출이 이뤄졌을 경우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quantity) 및 질(quality)로서 설정
  - 일자리 영향 평가는 단기 및 중장기에 대한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산출
    -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가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산출
    -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 추진이나 집행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파급(spill-over)효과로 인해 간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및 분석
    - 창출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상용직, 일용직), 임금수준(동종업종 평균임금 비교), 고용유지기간(직장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질적 수준 평가도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
    - 청년층,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
  
-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
  - 일자리영향평가는 정책제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작동되는 일련의 논리적 단계
    - 일자리영향평가는 정책구상(policy initiatives)이 증거에 기반하고, 효과적·효율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
    - 대구시 예산집행과 재정사업이 일자리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활용
  -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은 「재정사업 또는 비재정사업의 최초 이론적·가설적 일자리 최대 영향」에서 「재정사업 또는 비재정사업 시행 또는 정책개선의 일자리

영향 분석」으로 확장되어야 함

- 재정사업이자 비재정사업의 집행이나 정책개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단계
- 최대 창출 가능한 일자리와 실제 창출된 일자리간 차이의 원인 분석
- 정책개선에 의한 일자리 영향 평가는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의 일자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경로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절차
- 복수의 시나리오별 성과지표(고유목표 및 고용목표)를 추정·비교하여 일자리 중심의 시정 수립 근거로 활용

## 제2절 일자리 영향 평가 운영 주체와 전문위원회 구성

### 1. 일자리 영향 평가 단계와 주체

□ 일자리 영향 평가는 평가목적과 단계에 따라 주체와 역할을 구분

- 정책제안 담당 정책부서가 일자리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대구시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 대구시 재정사업 또는 비재정사업의 일자리 영향 평가 실시 단계

-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는 일반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평가는 대구시 일자리 담당부서가 일자리 영향 평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전망하고 분석
  - 특정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일자리 영향 평가의 단계와 절차를 명료해야 함

□ 일자리 영향 평가의 특정평가 단계와 절차

- 제1단계는 정책제안 1년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정책담당부서가 정책입안에 앞서 일자리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장에 제출

- 제2단계는 일자리영향평가조정단(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주요 정책의 일자리 제고 방향을 검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제3단계는 일자리 영향 평가 직접 실시 단계

## 2. 유럽연합 영향 평가 위원회 운영 사례

### □ 영향 평가 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구성

- 2006년 유럽위원회 바루토(Barroso) 위원장에 의해 설립된 영향 평가 위원회는 영향 평가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의 품질을 독립적 지위를 갖고 관리
- IAB는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분석 전문성을 기준으로 임명하는 2년 임기의 상임 위원 9명으로 구성되고, 재선될 수 있음
  - 영향평가위원은 자신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활동하지만, 자기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음
  - IAB 회의는 의장과 전문 분야별 순환위원 4명으로 개최되며, 순환위원이 전문성으로 보고서 초고를 검토
  - IAB 의장은 유럽위원회 사무국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이 맡음

### □ 영향 평가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영향 평가의 가이드라인의 질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검토
  - 보고서 초안의 수정 방향을 권고하고 의견을 개진
  -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판단될 때 부정적(negative)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 이와 문제제기에 대해 영향평가 참여 연구진들은 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함
  - 만약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위원회의 두 번째 의견이 여전히 부정적이면 제2차 수정 보고서가 요구됨
  - 아주 희박하게 제3차 의견이 부정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음
  - 긍정적 의견('positive' opinion)의 경우 보고서 파일은 위원회 권고가 첨부되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
- 영향 평가 위원회 의견은 정책제안 결정 이전 단계의 핵심적 절차

- IAB의 긍정적 의견은 정책제안이 유럽위원회 결정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필요
- 유럽위원회 정책결정과정에서 IAB 의견이 추가 반영된 영향평가 보고서와 함께 정책제안이 제출
- IAB 의견이 IA 최종보고서와 함께 대중적으로 배포되면 유럽위원회는 그 정책제안을 실제 채택하는 단계에 도달

□ IAB의 주요 권고사항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

- 첫 번째는 문제설정 영역 수정에 대한 요구
  - 정확한 문제가 무엇이고,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다 잘 설명하여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권고
- 두 번째는 관련되는 모든 영향이 완벽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
  - 이전 시기와 달리 분석의 포괄 범위가 크게 증가
- 세 번째는 IAB는 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의견 제시의 명료성과 수정 등을 주로 권고
- 그 이외에 사후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시범시행과 적절성 검토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다수 존재
  - 특히 최근 들어 이해관계자 상담과 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가칭)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 가.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 (가칭)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과 분야별 전문가 위원 선임

- 대구시 재정지출과 예산집행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시범 운영
-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이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도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어야 함

- 대구시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의 하위 기구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권고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함

□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의 주요 역할

- 평가대상과 평가주기 선정
-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주민 의견 반영
- 일자리영향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구체적 정책 또는 조례로 연계되는 의견 개선

□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의 정책권고 기능 강화

- 일자리 영향 평가는 연구자 또는 평가자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책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가 재정투입과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이나 권고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필요
- 일자리 영향 평가대상 소관 실국이나 정책 담당자가 상시적으로 참여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나 개선방안이 곧바로 실현되어야 함

□ 일자리 영향 평가는 대구시 정책의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 증대를 위한 정책결정의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

- 일자리 영향 평가는 대구시 법률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일자리영향을 실시하여 정책결정의 증거 자료를 생산
  - 그러나 그것이 정책결정의 직접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
- 일자리 영향 평가는 모든 정책결정이 이용 가능한 최고의 데이터에 의한 치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원

나. 일자리 영향 평가 기반 구축 방안

□ 지역의 고용전문가 및 계량경제학자 참여 제도

- 일자리 영향 평가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대구시 일자리 영향 평가 활용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전문가와 계량경제전문가의 연구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고용거버넌스와 지역고용전문관(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일자리 영향 평가 분석 결과를 지역고용사업의 기획과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 전문연구기관과의 일자리 영향 평가 범용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등을 점진적으로 개발
- 일자리 영향 평가의 사회적 인식 및 접근성 제고 및 홍보
  - 매년 11월과 12월에서 일자리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대구시민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홍보해야 함
  - 일자리 영향 평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어야만, 일자리 중심의 시정 수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관련 자료 접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

### 제3절 일자리 영향 평가의 정책과제

#### 1. 일자리 영향 평가 지침과 모형 수정 작업

##### 가. 일자리 영향 평가 지침 개발

##### □ 일자리영향평가 지침 개발 연구 추진

- 「대구시 일자리영향평가 지침 개발」 연구 추진
  - 2016년 일자리영향평가 도입 및 시범 실시 이후 지침 개발 연구 추진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면서 산업 및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



- 고용노동부도 매년 「고용영향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전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정부기관 및 담당공무원이 재정사업 및 일자리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대구시 일자리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
  - 시민과 언론기관 등 일자리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이론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영향평가의 기대 일자리창출(expected employment effects)과 실제 취업자가 '항상' 일치할 것이라고 오해
  - 일자리영향평가는 대구시가 “시정(city policy)이나 재정사업을 일자리 중심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 일자리영향평가는 시민 홍보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정치·경제·산업·노동·시민의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계기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

#### 나. 일자리 영향 평가 모형 수정

- 매년 대구시 예산 및 재정지출의 추이와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비
  - 지역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적 지역 경제와 산업구조가 일자리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시정이나 경제는 역동적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일자리영향평가는 사후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지역경제의 구조와 대구시 사업 집행구조 변화 등을 사후적으로 반영하여 일자리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이 필요
  - 일자리영향평가모형 개정과 함께 재정투입의 기초자료 변화가 정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재정사업의 지출구조는 시정이나 계약관계 변화에 따라 꾸준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재정투입의 산출도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
- 한국은행 지역 I-O의 통계자료 수정 시기에 맞춘 정기적 평가모형 수정 작업 필요

- 한국은행 통계자료 발표에 맞춘 정기적 평가모형 수정 작업
- 1-2년 단위 일자리영향평가모형 수정 작업
  - 대구시 일자리영향평가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진을 적극 활용하고, 상시적 보수 작업을 위탁

## 2. 일자리 영향 평가의 체계화

### □ 평가대상 확대 및 선정 체계화

- 재정사업의 고유목적과 고용효과 간의 균형에 조응하여 평가대상 선정, 비재정사업과 사회복지 분야로 평가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필요
- 체계적이고 통일된 평가방법과 실무지침서 마련
  - 사업 유형이나 개별 사업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은 물론이고 실무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향후 새로운 재정사업 개발과 추진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확대
  - 일자리 영향 평가가 재정사업의 예산반영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그 평가결과가 정책이나 사업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함
  - 대구시 실국 담당자는 모든 예산 사업에 일자리 영향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

## 3. 정책과제

### 가. 사전평가와 사회복지 분야 평가 확대

- 사전적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관행을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 필요

- 지자체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전적 사업평가에 익숙하지만,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객관적·중립적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함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일자리 영향 평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일자리 중심의 시정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 또는 복지사업은 사업 성격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선호하는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지자체 자체 재정사업의 일자리 영향 평가가 사업 설계 및 추진 주체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영향 평가를 확대하여 주민 및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제도적 기준 설정 필요

#### 나.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고용인지' 예산 편성 도입 검토

- 예산편성과 일자리 영향 평가의 제도적 관계를 설정
  - '고용인지적' 예산 편성 방안 제정되어 확산될 필요 있음
    - 1단계 일자리 영향 평가는 예산집행과 재정지출의 원시자료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화시키는 작업이 중요
    - 대구시가 재정지출만이라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조정할 경우 일자리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지적' 예산 편성 방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다. 특정평가 확대

- 대구시민의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사업이나 비재정사업에 대한 일자리 영향 평가의 지속적 확대 필요
  - 예산 기준 또는 사업의 중요성 기준 등에 따라 일자리 영향의 평가대상이 선정되어야 하고, 한시적으로 특정평가가 실시된 이후에도 일반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동일 유사 재정사업이 특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라. 일자리 영향 평가의 정책권고 기능 확대

### □ 영향 평가결과의 정책권고 기능 강화

- 연구자 중심의 일자리 영향 평가가 정책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구시장 및 관련 실국장의 권한부여가 핵심적으로 중요
  - 일자리 영향 평가 전문위원회가 재정투입과 정책개선 의견이나 권고를 제시하고
  - 각종 정책집행 담당부서가 그것을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관련 실국장이 직접 챙겨야 함
  - 일반평가이든 특정평가이든 관련 실무담당자가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구조 개발 필요